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북한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

Leadership Succession and Foremost Transfer of Military Authority in North Korea

이 현 지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년 6월 일

석사학위논문

북한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

Leadership Succession and Foremost Transfer of Military Authority in North Korea

지도교수 김 동 엽

이 논문을 북한학 석사학위(정치통일전공)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6월 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정 치 통 일 전 공
이 현 지

이현지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24년 6월 일

목 차

국문요약 ····· 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3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제2장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의 이론적 접근 ····· 11
제1절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의 개념 ····· 11
1. 권력승계의 개념과 성공 조건 ····· 11
2. 군권 우선 이양의 개념과 필요성, 작동 기제 ····· 16
3.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주요 사례 ····· 28
제2절 북한에서의 권력과 군권 ····· 37
1.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형성과 군권 장악 ····· 37
2. 후계자론에서의 군권 ····· 41
제3절 분석의 틀 ····· 46

제3장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 ····· 48
제1절 지도자 수업과 군권 우선 이양 ····· 48

1. 후계자 추대 시기(1964년-1980년) ····· 48
2. 후계자 공식화 및 군권 우선 이양 시기(1980년-1993년) ···· 53
3. 권력 이양 완료 시기(1994년-1998년) ····· 57
제2절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 ····· 60
1.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물리적 정권 보위 ····· 60
2. 안보 위협을 이용한 체제 수호 및 정당성 강화 ····· 64
제3절 군권 우선 이양의 영향 ····· 68
1. 군부 승리 연합 구축 및 고난의 행군 시기 극복 ····· 68
2. 군사주의화와 선군정치의 발전 ····· 76

제4장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 ····· 81
제1절 권력승계 준비와 군권 우선 이양 ····· 81
1. 후계자 추대 시기(-2009년) ····· 81
2. 후계자 공식화 및 군권 우선 이양 시기(2010년-2011년) ···· 89
3. 권력 이양 완료 시기(2012년) ····· 97
제2절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 ····· 99
1. 신속한 군부 장악을 통한 물리적 정권 보위 ····· 99
2. 안보 위협을 이용한 후계자의 정당성 강화 ····· 105
제3절 군권 우선 이양의 영향 ····· 108
1. 안정적 당권 승계 및 군부 통제 강화 ····· 108
2. 인민대중제일주의, 핵무력의 발전과 탈선군 ····· 116

제5장 결론 ····· 123

참고문헌 ····· 127

ABSTRACT ····· 149

표 목 차

【표 1-1】 북한 권력승계의 시기적 구분 ····· 8
【표 2-1】 군권 우선 이양의 작동 기제 ····· 28
【표 4-1】 1998, 2009년 헌법상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권한 비교 ·· 86
【표 4-2】 북한 헌법상 무력 지휘통솔 관련 규정 시기별 비교 ···· 89

그 림 목 차

【그림 2-1】 북한 권력승계 분석의 틀 ····· 46

국문요약

북한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

정치통일전공 이 현 지
지도교수 김 동 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일어난 두 번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최고지도자의 '군권(軍權)'이 당과 국가 부문의 최고 권한보다 후계자에게 '우선 이양'되었음을 설명하고, '군권 우선 이양'의 정치적 의도와 그 결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군권 우선 이양'이 결과적으로 '승계 정권을 안정화'했음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승계의 안정성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군권은 군의 최고 책임자가 행사하는 군정과 군령에 관한 모든 권한으로, 대외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권위주의 국가의 '군권'은 최고지도자가 '대내 주체를 포함한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정권을 물리적으로 보위'하고 안보 위협을 이용해 '체제 수호자로서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통치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권력승계가 제도화되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후계자에게 '군권을 우선 이양'함으로써 승계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북한의 두 차례의 권력승계 과정을 검토한 결과, 두 번 모두 후계자에게 '군권이 우선 이양'됐다. 당과 국가 부문의 최고 권한은 전임자 사후 이양됐다.

김정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은 1980년대 사회주의 체제 해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군의 정치사상적 무장을 강화해 '군의 체제 보위 역할'을 담보하고 비사회주의 현상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군권 우선 이양'을

통한 김정일의 ‘안정적 당권 승계’를 의도했다. ‘군권 우선 이양’의 결과, 김정일은 군부 승리 연합을 조기에 구축해 개인의 강력한 군권을 보유할 수 있었다. 강력한 군권은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이 ‘군을 틀어쥐고’ 전 사회를 군사주의화함으로써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당권을 승계하도록 했다. ‘군을 내세운 정치방식’은 선군정치로 공식화되어 김정일 승계 정권의 안정화를 보여줬다.

김정은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과 군부에 대한 특권 축소가 필요했던 김정일 시기 대내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군부를 조기에 장악해 군부 반발로부터 ‘승계 정권을 보위’하고 짧은 후계자 기간으로 인한 정치적 취약성을 ‘선군의 후계자로 정당화’해 보완함으로써 ‘군권 우선 이양’을 통한 김정은의 ‘안정적 당권 승계’를 의도했다. ‘군권 우선 이양’의 결과, 김정은은 당권을 신속히 이양받고 군에 대한 강력한 당적 통제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발전 및 ‘탈선군’은 군부의 특권을 박탈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함으로써 승계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했다. 2021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대체한 것은 김정일의 후광에서 벗어난 김정은 승계 정권의 안정화를 보여줬다.

본 연구는 북한 권력승계에서 이루어진 ‘군권 우선 이양’이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가능하게 했음을 규명하고, 최고지도자의 통치 수단으로서 군권에 주목해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승계 간의 관계성을 파악했다. 또한 ‘군권 우선 이양’이 군사주의화뿐만 아니라 탈선군 및 인민대중제일주의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음을 밝혀 군권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을 제시했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 주제어: 북한, 권력승계, 군권, 후계자, 선군, 인민대중제일주의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발생한 두 번의 권력승계에서 최고지도자의 '군권'이 당과 국가 부문의 최고 권한보다 후계자에게 '우선 이양'되었음을 설명하고, '군권 우선 이양'의 정치적 의도와 그 결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군권 우선 이양'을 중심으로 북한 권력승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권력의 근원적 차원에서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설명하고 북한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촉발된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당대의 연구와 논의는 후계자의 강력한 1인 지배체제보다는 군부 집단지도체제 또는 장성택의 섭정에 집중되어 있었다.[1]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로 인해 군부의 권력이 막강했으며, 후계자 기간이 짧은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단 13일 만에 후계자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고, 현재까지 김정은의 1인 지배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예측과 다르게 전개된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관해 기존의 연구들은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지적한다.[2] 선군정치를 일각에선 당

1) 200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45.2%(10명)가 김정일 사후 집단지도체제로의 승계를, 27.3%(6명)가 김정일 생전 집단지배체제로의 승계를 전망했다. 김정일 사후 1인 집중체제로의 권력승계를 예상한 건 18.2%(4명)뿐이었다. 백승주, 『포스트 김정일체제 프로세스와 한반도비전』(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pp. 57-60.

2)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1호(2014), pp. 55-59; 정성장, "북한 김정은의 실제 영향력, 지도체제의 성격과 핵심 파워 엘리트," 『JPI 정책포럼』, 2012-2호(2012), pp. 8-15;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pp. 215-217.

에 대한 ‘군의 우위’로 이해했으나, 군에 대한 ‘당의 우위’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시기 최고지도자의 군부 통제가 유효했음과 함께, 후계자가 전임자의 군부 통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승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김정은의 군권 장악 과정이 권력승계의 안정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당 국가’인 북한에서 ‘군권’이 우선 이양되었음에 주목한다. 후계자 김정일, 김정은은 각각 ‘당 총비서’와 ‘당 제1비서’ 추대 이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후계자로서 경험하는 직책이 아닌 군 통수권자인 ‘수령’의 직책이다. 두 번의 권력승계 모두 ‘당권’보다 ‘군권’이 후계자에게 우선 이양된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이어 이양받은 ‘국방위원장’ 직책을 통해 고난의 행군 시기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김정은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먼저 임명되어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했다. ‘군권 우선 이양’이 ‘승계 정권을 안정화’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정일, 김정은 시기 서로 다른 ‘군권 우선 이양’의 순서와 양태는 북한이 정치적 상황과 목표를 고려해 당대 의도에 맞춰 ‘군권을 우선 이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당 국가’인 북한에서 ‘군권’이 ‘당권’에 우선해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과정을 일련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전제하고 그 배경과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군권 우선 이양이 이루어진 과정뿐만 아니라, 후임자가 우선 이양받은 ‘군권을 활용’해 당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이를 유지하는 ‘승계 정권의 안정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군권 우선 이양’의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북한 권력승계에서 ‘군권 우선 이양’의 의도를 밝히고 ‘군권 우선 이양’이 어떻게 ‘승계 정권을 안정화’했는지를 규명해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권력승계의 안정성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론적 토대를 기준으로 제도적 차원, 담론적 차원, 당군관계 차원, 합리적 선택 이론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차원의 연구는 북한 권력승계를 수령제의 변형과 지속을 통한 권력승계의 제도화 과정으로 설명한다.[3] 정영철은 북한이 수령제 사회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후계체제가 탄생했다고 분석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 1967년 갑산파의 도전, 중소분쟁(Sino-Soviet Split)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사회의 완전한 조직화가 요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령과 후계자 중심의 유일영도체계가 구축되었다는 것이다.[4]

제도적 측면의 연구는 수령제 사회주의라는 북한 정권의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한다. 하지만 수령제라는 제도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생존할 수 있던 기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선 설명력의 한계를 지닌다. 후계자의 군부 통제, 고위급 숙청 등 수령제를 지속하게 한 북한 정치의 역학관계와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근본적 설명에는 한계를 가진다.

담론적 측면의 연구는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대한 혁명위업계승리론' 등의 담론을 생산해 후계자가 권력승계의 정통성 및 정당성을 확보했음에 주목한다.[5] 확보할 수 있는 북한의 내부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외 공개 정보를 담론 수준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북한 권력승계 과정을 분석한다. 하지만 담론이 구성되기 이전의 후계자 추대 과정 또는 권력 변동 과정 등에 관한 설명은 부족하다.

---

3)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pp. 29-64;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한국정치학회보』, 제45권 5호(2011), pp. 175-192.

4) 정영철,『김정일 리더십 연구』(서울: 선인, 2008), pp. 15-32.

5) 김현경, "김정은 권력승계의 담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pp. 303-307.

당군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전해 온 당군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 당군관계의 특수성을 고찰해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이대근은 북한군의 높은 정치적 영향력과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 체계가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주요 요소라 보았다. 김일성 유일지도체계 확립, 항일무장투쟁 신화화 등으로 인해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유지되고 있어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6)]

당군관계에 기반한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국가별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당군관계와 그 특성을 도출하므로,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개별 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하지만 각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 역학을 당군관계라는 단일한 틀로만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당군관계에 관한 논의는 권력투쟁, 권력승계와 같은 특수한 시기를 분석하기에 불충분하다. 기존의 당군관계에서 벗어난 역사적 변곡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인민해방군(人民解放军)은 마오쩌둥(毛泽东)의 공식 후계자인 화궈펑(华国锋)과 협력해 사인방(四人帮)을 진압했으나, 이후 화궈펑의 경쟁자인 덩샤오핑(邓小平)을 지지해 화궈펑이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는 데 기여했다.[7)] 이는 기존의 연구가 중국을 '공생 모델'로 분석하며 당과 군이 매우 깊은 상호 의존성을 가진다는 분석과는 괴리가 있다.[8)]

또한 권력승계 시기를 당군관계 차원에서 분석할 경우, 권력승계의 성공 여부를 당의 군부 통제 여부로만 축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권력승계를 위협하는 이익집단으로 군부를 상정하고 후계자의 불안정성을 들어 권력승계의 불안

---

6)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파주: 한울, 2003), pp. 276-278.

7) Jürgen Domes,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PRC* (Boulder: Westview Press, 1985), pp. 156-163.

8) 박영자 외,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29.

정성을 예상하는 것이다.[9] 하지만 북한에서 수령의 지위와 권력이 절대적인 만큼, 수령이 후계자로의 안정적 권력승계를 위해 어떻게 정치 역학을 활용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군관계에 관한 논의보다 '합리적 선택이론' 측면에서 북한 권력승계를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합리적 선택이론 중심의 연구들은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전제 아래 권력승계를 후계자와 지배 연합 간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정한다. 권위주의(authoritarianism)[10]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 동학을 중심으로 권력승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병진은 정치엘리트들이 독재자의 신임을 얻어 오랜 기간 출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엘리트와의 협력 및 독재자에 대한 저항보다 충성을 선택하며, 많은 이들이 충성을 선택할 때 독재자는 손쉽게 개인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은이 권력세습 초기 장성택과 같은 파워엘리트들에게 각별한 신임을 주어 이들이 다른 엘리트와 협력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했으며, 이후 김정은은 주요 엘리트들을 숙청함으로써 정권의 안정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11] 이재준은 김정일이 빨치산 중심의 혁명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시기 형성된 소규모 지배 연합의 지지를 계승했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했다고 보았다.[12]

권력승계 시기 정치엘리트의 교체, 숙청을 다룬 상당수의 연구도 합리적 선택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박형중은 김정은이 군부가 아닌 조직지도부, 총정치국, 국가안전보위부라는 3대 권력기관에 권력을 선택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권

---

9) 이기동, "후계 권력구조: 세습과 측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선호 가능성," 『북한』, 제443호(2008), pp. 32-37; 이영화, "김정은체제 1년내 무너진다," 『북한』, 제483호(2012), pp. 52-58.

10) 간디(Jennifer Ghandi),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 등은 권위주의를 '민주주의가 아닌 정체'로 정의했다. 민주주의를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와 이러한 직·간접 선거를 통한 행정부의 구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체를 권위주의로 규정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교수진, 『정치학의 이해』, 제2판(서울: 박영사, 2019), p. 312.

11) 한병진, 『수령, 독재의 정석』(서울: 곰출판, 2023), pp. 238-257.

12) 이재준,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연구: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후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pp. 330-331.

의 안정화를 도모했다고 보았다.[13]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한 접근은 권위주의 정권이 작동하는 근본 원리를 밝히고 이를 북한 권력승계에 적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당 장악력이 부족했던 후계자 김정은이 어떻게 정권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정치 역학을 규명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한병진은 장성택과 같은 북한의 주요 정치엘리트들이 앞으로 김정은의 신임이 지속될 것으로 오판해 다른 엘리트와의 협력을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정치엘리트들의 오판이 김정은의 개인 독재체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14] 하지만 수십 년간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영도체제를 경험하며 여러 차례 숙청을 목격한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이 과연 그러한 판단을 내렸을지 합리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에 이어 수령이자 당인 존재로 군림하며 완전한 개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김정일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엘리트로 인한 변수가 개입하지 않도록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성공 여부를 정치 엘리트들의 선택에 맡기기보다 사전 계획을 통해 그들이 저항하더라도 충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하면서도 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북한의 3대 혈연 세습은 북한에 확고히 자리 잡은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1970년대부터 '당 중앙'으로서 입지를 확립해 왔으며, 1980년대부터는 군령권을 이미 행사한 만큼[15], 후계자로서의 입지가 확고했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 진행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공식적인 군권 이양 과정을 후계자의 군권 장악 과정으로만 이해하

13) 오경섭 외,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서울: 통일연구원, 2021), pp. 157-193.

14) 한병진, 『수령, 독재의 정석』, pp. 238-257.

15)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p. 71.

기는 부족하다. 군권 장악을 넘어 후계 정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군권 우선 이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후계자의 군부 장악 외에도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두 번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권이 우선 이양'되었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혈연 세습이 이루어진 북한에서 '군권 우선 이양'이 후계자의 안정적 통치 기제를 조속히 마련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승계 정권에 대한 주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그 결과 승계 정권이 군권을 활용하여 안정화되었을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 중에서도 후계체제 구축과 군권을 연계한 사례는 있다. 김동엽은 북한의 군사지휘체계가 정권 영속화와 정상국가화라는 최고지도자의 목표 아래 이를 구현하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선군시대 조선인민군이 김정일의 정권 안정화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16] 고재홍은 사회주의 권 붕괴, 탈냉전 등 체제의 위기에 직면하여 김정일 후계 정권에 대한 군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게 최고사령관을 이양했다고 보았다.[17] 정성장 또한 김정일,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임명 이후 대규모 군 인사를 단행해 권력승계 이후 후계자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강조했다.[18]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 권력승계가 군권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군권을 통해 정권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북한 권력승계에 있어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과 영향에 직접 주목하지는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차별성과 위상은 북한의 권력승계에 있어 '군권 우선 이양'의 정치적 의도와 그 결과에 대한 규명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당군관계 또는 주요 정치엘리트와의 전략적 선택에만 한정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여 '군권 우선 이

16)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pp. 215-217.
17)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49-50.
18) 정성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성남: 세종연구소, 2015), pp. 34-51.

양’이란 최고지도자의 통치 행위에 주목함으로써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북한의 권력승계를 후계자 추대 시기, 후계자 공식화 후 권력 이양 시기, 후계 정권 공고화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후계자 추대 시기는 후계자가 당 직책 수임 등 북한 정치에 등장한 시점부터 후계자로 공식 추대되기까지이다. 후계자 공식화 이후 권력 이양 시기는 후계자가 공식화된 이후 후계자의 지도체계를 구축하고 전임자로부터 당·정·군에서의 최고 권력을 이양받는 시기이다. 단, 본 연구가 ‘군권 우선 이양’을 중심으로 분석하므로, 해당 시기를 ‘후계자 공식화 및 군권 우선 이양 시기’와 ‘권력 이양 완료 시기’로 세분화한다. 전자는 군권 우선 이양을, 후자는 그 이후 당과 국가 부문의 최고 수위 이양 과정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승계 정권 공고화 시기는 ‘당 최고 수위’의 직책을 부여받은 후 후계자만의 정치 노선이 정립된 시기로 본다. 시기적 구분을 구체적으로 북한의 권력승계에 적용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북한 권력승계의 시기적 구분

구 분	김일성→김정일	김정일→김정은
후계자 추대	1964년~1980년	~2009년
후계자 공식화 및 군권 우선 이양	1980년~1993년	2010년~2011년
권력 이양 완료	1994년~1998년	2012년
승계 정권 공고화		2012년~2021년

* 출처 :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pp. 199-209;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파주: 한울엠플러스, 2011), pp. 121-125, 151-157을 참고하여 재작성.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에서 후계자 추대 시기는 1964년 김정일의 당 사업 시작 시점부터 후계자로 공식화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이전까지이다. 1980년 10월부터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 추대, 1993년 4월 국방위원장 추대까지를 후계자 공식화 및 군권 우선 이양 시기로, 이후 1997년 10월 당 총비서 추대, 1998년 9월 국방위원장 재추대까지를 권력 이양 완료 시기로 본다. 김정일 승계 정권 공고화는 김일성 사후 권력 이양과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1994년부터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가 공식화된 1998년까지로 본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09년까지가 후계자 추대 시기이다.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 추대까지를 후계자 공식화 및 군권 우선 이양 시기로, 2012년 4월 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까지를 권력 이양 시기로 본다. 승계 정권 공고화 시기는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규정했음을 고려하여, 2012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본다.

다만, 권력승계 이외 시기의 대내·외 상황도 권력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후계자 공식화 이전 또는 후계 정권 공고화 이후 시기에 대한 자료도 분석에 포함한다. 또한 권력승계나 선군정치에 관한 북한의 역사 소급 문제도 연구 범위에 포함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북한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군권 우선 이양에 대해 분석한다. 역사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군권 이양 당시의 대내·외 환경과 군권 이양의 과정, 승계 정권 공고화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북한 원전을 포함한 1, 2차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을 위주로 접근한다.

1차 자료인 북한 원전은 북한 정치체제나 노선, 제도와 입법의 변화 등 권력승계 및 승계 정권 공고화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 권력승계의 경우 공식적인 발표나 법·규정 등 제도적 자료도 중요하지만, 군권 우선 이양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전물도 중요하다. 전기문과 같은 글뿐만 아니라, 노래 '발걸음'과 같이 권력승계와 관련 있는 시청각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검토

한다.

2차 자료는 국내·외 서적, 각종 정기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정부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한다. 특히 국내·외 서적과 인터뷰를 통한 북한 고위급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 권력에 대한 내부적 시각을 제한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신뢰성에 유의하며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쿠바 등의 권력승계 사례도 확인하여 북한 권력승계에 대한 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은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권력승계에서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과 작동 기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주요 권력승계 사례와 북한 권력 장악 과정에서의 군권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분석의 틀을 도출한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김정일,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군권 우선 이양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김정일,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권이 우선 이양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을 규명한다. 이후 군권 우선 이양의 결과로써 승계 정권이 안정화되었음을 설명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제2장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의 이론적 접근

제1절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의 개념

1. 권력승계의 개념과 성공 조건

가. 권력승계의 개념

권력승계(Leadership Succession[19])란 사전적 의미에서 '한 개인, 정부 또는 체제로부터 정치권력을 이어받는 것'을 뜻한다. 캘버트(Peter Calvert)는 협의의 권력승계를 '평화로운(orderly) 정치권력의 이양'으로 정의했다.[20] 가치중립적으로 권력의 이전을 뜻하는 권력 이양(transfer of power) 또는 정권 이행(leadership transition)과 달리, 권력승계는 전임 정권의 연장선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캘버트는 권력승계가 단순히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련의 행위(후계자가 되기 위한 권력투쟁,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상호작용 등)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계 정권이 겪는 정당성(legitimacy)의 위기를 감소시켜 관리하는 행위도 권력승계의 일부로 정의했다.[21]

권력승계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전임자의 정당성이 후계 정권에 이

---

19) 권력승계는 주로 Leadership Succession으로 표현하나, Political Succession, Succession of Power 등을 혼용한다. Anne Meng, Erica Frantz and Elizabeth A. Stein, Qingjie Zeng 등은 Leadership Succession을, Robbins Burling, Peter Calvert 등은 Political Succession을 사용했다. 용어별 명확한 이론적 구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Leadership Succession을 사용한다.

20) Peter Calvert, "Political Succession and Political Change," Peter Calvert, ed., *The Process of Political Success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1987), p. 1.

21) Calvert, "Political Succession and Political Change," p. 1.

양되는지'이다. 정치체제별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권력승계의 개념도 정치체제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 획득 방식은 정기적인 대중 선거와 대의제도를 통해 제도화되어 있다. 헌법에서 지도자의 임기 및 재선 가능 여부가 규정되므로 정권 교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며, 선거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권력승계가 가능하다.[22] 민주주의 국가에 내정된 후계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임자의 후계자 지명에 의한 권력승계는 불가능하다. 할트와 우르(Paul 't Hart, John Uhr)는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에 맞춰 권력승계(succession)를 '동일한 집권 세력 내 개인 리더십의 교체'로, 권력 이행(transition)은 '당 또는 연립 정부 등 집권 세력의 교체'로 정의했다.[23]

권위주의 국가는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권력 획득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력승계도 제도화되기 어렵다. 정해진 규칙과 경쟁을 통해 권력이 교체되기보다 지도자의 상황(사망, 건강 상태 등)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권력이 이양된다. 세습 정권, 혈연 승계와 같이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승계는 '권력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양하고 승계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단, 누가, 어떻게 권력을 물려받을지 알 수 없으므로 불확실성과 체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24]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권력구조에 따라 권력승계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당 독재체제에서는 당을 중심으로 엘리트 갈등이 중재되며 권력승계에 관한 규율이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권임에도 비교적 민주적 방식의 권

---

22) Ludger Helms, "Leadership succession in politics: The democracy/autocracy divide revisited,"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2, No. 2 (2020), p. 337.

23) Paul 't Hart & John Uhr, "Power Transitions and Leadership Successions in Government," Paul 't Hart & John Uhr, eds., *How Power Changes Hand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1), pp. 1-6.

24) Myron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pp. 13-14; 고든 털럭(Gordon Tullock), *Autocracy*, 황수연·황인학 역, 『전제정치』(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2011), pp. 235-268; 송정호, "김정일 권력승계 공식화 과정 연구: 1964~1986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p. 21.

력승계가 진행될 수 있고, 권력승계의 예측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개인 독재체제는 법적 통치보다 개인의 정치적 지배력과 카리스마가 우선한다. 카리스마는 제도화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 독재체제의 권력승계는 제도화가 어렵고 정치적 불안정성도 크다.[25]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권력승계는 '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주의는 당의 이데올로기를 핵심 이념으로 삼고 당의 엄격한 규율에 모두가 철저히 복종하도록 이념화했다. 따라서 정부의 권력이나 체제의 정통성은 '당권'과 동일시된다.[26] '당권'이 곧 최고 권력으로서 권력승계의 대상이다.

러쉬(Myron Rush)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승계 과정과 권력승계 이후 후계자가 정권을 수호하는 과정을 별개로 보았다. 전자는 당 정치국에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우위를 점하는 과정인 데 반해, 후자는 경쟁자와 잠재적 반대자를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이다.[27] 소련과 같이 권력투쟁이 발생한 경우, 러쉬의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혈연 승계가 이루어진 북한의 경우, 승계 정권의 안정성까지 고려한 권력승계가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계 정권이 안정성을 구축하는 과정도 '권력승계'의 과정에 포함하여 살펴본다.

나. 권력승계의 성공 조건

권력승계의 성공 조건은 정치 체제별, 상황별로 매우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단, 기존 연구들은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후계자의 능력이나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조명하고 이로부터 권력승계의 성공 조건을 도출했다.

---

25) Erica Frantz & Elizabeth A. Stein, "Comparative Leadership in Non-democracies," Ludger Helms, ed., *Comparative Political Leadership*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2), pp. 300-303; 송정호, "김정일 권력승계 공식화 과정 연구," pp. 20-21, 31-32.

26) 이우정, "사회주의국가의 권력승계에 관한 이론과 사례," 『안보연구』, 제23호(1993), p. 11.

27)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pp. 26-27.

권력승계 성공 조건을 가장 일반화된 틀로 제시한 건 홈즈(Leslie Holmes)의 '3Ps + X 접근법'이다. 홈즈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력승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권력 기반(power-bases)을 강화하고, 지도자로서 자질(personalities)을 갖춰야 하며, 정책 능력(policies)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전임 지도자의 사망 또는 실각 등 새로운 지도자가 요구되는 특수상황(X-factor)이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가지 조건에 더해 한 가지 상황이 충족될 때 권력승계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28]

홈즈의 연구는 권력승계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적 틀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요소별 후계자의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분석의 기준을 제공할 뿐, 각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권력승계의 불안정성에 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홈즈가 후계자의 요건을 주로 다뤘다면, 브라운리(Jason Brownlee), 메스키타와 스미스(Bruce Bueno de Mesquita, Alastair Smith) 등은 최고지도자(전임자), 후임자, 정치엘리트 간의 관계에 집중했다. 브라운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8번의 혈연 세습 사례를 분석해 혈연 세습이 성공한 조건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지도자가 당에 선행해 존재하며 권력승계의 경험이 없는 경우, 정치엘리트들은 권력승계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혈연 세습을 지지했다. 반대로 정치엘리트들에게 이미 당 기구를 통한 지도자 선출의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은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는 혈연 세습에 반대했다.[29] 브라운리의 연구는 북한과 같이 예외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가지나, 권력승계가 당과 최고지도자 간의 권력 배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서를 제공한다.

메스키타와 스미스는 최고지도자와 정치엘리트 간의 전략적 선택을 가정해 권력의 안정성을 설명했다. 최고지도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의 지지가 아닌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출인단' 중 다수의 지지

28) Leslie Holmes, *Politics in the Communist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p. 177-209.

29)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July 2007), pp. 595-628.

가 필요하다. 선출인단 중 최고지도자를 지지함으로써 정권을 지속하도록 하는 집단은 '승리 연합(winning coalition)'이다. 지도자는 승리 연합에게 다른 경쟁자보다 높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그 결과로 정권을 유지한다. 안정적 정권 유지의 조건이 '경쟁자보다 높은 보상의 제공'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출인단은 대규모이므로,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용이한 사회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반대로, 권위주의 국가에선 승리 연합의 규모가 작을 때 정권 유지 비용이 적고 엘리트 통제가 쉬우므로, 최고지도자는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소수의 승리 연합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30]

최고지도자의 정권 유지에 관한 메스키타와 스미스의 연구를 권력승계에 적용할 수 있다.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위해 후계자는 경쟁자보다 높은 보상을 제공해 전임자의 승리 연합을 계승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김일성의 승리 연합인 항일빨치산계를 우상화하고 이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31]

하지만 상기 연구는 승리 연합을 유지하는 요인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한정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은 경제적 보상 외에도 승리 연합을 유지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이재준은 사회주의 정권에서 경제적 보상 외에도 후계자의 전임자에 대한 이념적 일치성이 전임자의 승리 연합을 계승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32]

본 연구에서는 군권이 승리 연합을 유지하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안정적인 권력승계가 가능함을 밝힌다. 메스키타와 스미스의 이론이 최고지도자의 경제적 수단을 다뤘다면, 본 연구는 최고지도자의 군권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권력의 행사를 통해, 혹은 안보 측면의 정당성에 기반해 정치엘리트의 선택을

---

30)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알라스테어 스미스(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이미숙 역, 『독재자의 핸드북』(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2), pp. 41-51.

31) 메스키타·스미스, 『독재자의 핸드북』, pp. 76-81.

32) 이재준,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연구," pp. 32-40.

구속함으로써 승리 연합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군권이 최고지도자의 정권 유지를 위한 주요 수단임을 밝히고 군권 활용과 안정적인 권력승계 간의 관계성을 규명한다.

2. 군권 우선 이양의 개념과 필요성, 작동 기제

가. 군권 우선 이양의 개념

군권(Military Authority)이란 “군의 최고 책임자가 행사하는 군정과 군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의미한다. 군정(軍政)은 병력을 획득, 유지, 관리하는 양병(養兵)을, 군령(軍令)은 군사적으로 군을 지휘·명령·통솔하는 용병(用兵)을 뜻한다. 한 국가의 주권(sovereignty)을 국제사회에서 보장하기 위한 여러 방법과 수단 중 군사력은 주권을 위한 최후의 보장 수단이며, 이러한 군사력을 최종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군권이다.[33]

군권의 개념을 적용하면, 군권 이양(Transfer of Military Authority)은 최고지도자의 군정과 군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군권 우선 이양’은 최고지도자의 군정과 군령에 관한 권한을 다른 권한에 비해 후임자에게 먼저 넘기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군권은 주권을 수호하는 수단인 만큼 최고지도자에게 부여되나, 군권 이양의 양태는 정치 체제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군권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통해 부여받은 책무로서 군을 통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한다.[34] 미국도 연방헌법 제2

33) 김성우,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및 병정관계에 관한 연구,”『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5호(2013), pp. 68-73.

34)『대한민국헌법』(198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헌법#

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Commander in Chief)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35]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직의 이양'은 곧 '군권 이양'을 포함한다. 대통령 이·취임식 때 취임 대통령이 각 군을 사열(review)하거나, 미국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전임자로부터 핵 가방(nuclear football)을 이양받는 점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군권이 이양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36] 민주주의 국가에서 임의적인 '군권 우선 이양'은 성립하지 않는다.

당-국가체제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이다.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주로 당 규약과 헌법에서 각각 최고지도자의 군권을 규정하나, 실제 최고 군권은 국가기구가 아닌 당 지도자에게 부여된다.

중국은 최고 군사지도 기구로서 공산당 당헌(章程)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党的中央军事委员会)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국가중앙군사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단, 당헌 총강(总纲)에서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과 기타 인민무장역량'을 '절대 영도'함을 명확히 밝혔다.[37] 또

---

undefined(검색일: 2024년 5월 6일).

35) "Article Ⅱ Section 2.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 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99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A=A&code=700201&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5&searchNtnl=US&pageIndex=1&CTS_SEQ=28071&AST_SEQ=313(검색일: 2024년 5월 6일).

36) Chris Bradford, "What is the Pass in Review?," *The U.S. Sun*(인터넷판), 2021년 1월 20일; https://www.the-sun.com/news/2173558/what-pass-in-review-joe-biden-inauguration(검색일: 2024년 5월 7일); Dugald McConnell & Brian Todd, "Whenever Trump goes, nuclear 'football' to follow," *CNN*(인터넷판), 2017년 2월 25일; https://edition.cnn.com/2016/11/17/politics/donald-trump-nuclear-codes/index.html(검색일: 2024년 5월 7일).

37) "总纲…(중략)… 中国共产党坚持对人民解放军和其他人民武装力量的绝对领导…(중략)… 第二十三条…(중략)… 党的中央军事委员会组成人员由中央委员会决定，中央军事委员会实行主席负责制。"『中国共产党章程』(201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9094&AST_SEQ=53(검색일: 2024년 5월 8일); "第九十三条 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领导全国武装力量。"『中华人民共和国宪法』(20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A=A&code=700201&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1&searchNtnl=CN&pageIndex=1&CTS_SEQ=45514&AST_SE

한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주석 책임제'를 규정해 당에서 선출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내 현역 군인에 대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군을 영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38]

쿠바의 경우, 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최고사령부(la Jefatura Suprema)의 임무를 수행하며 무장 기관을 조직한다고 규정했다. 단, 공산당 규약(Estatutos del Partido Comunista de Cuba)을 통해 공산당 제1서기(Primer secretario del Comité Central del Partido Comunista de Cuba)가 쿠바 혁명군(las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과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에 대한 당 사업을 지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고 당직자의 군 지도 권한을 명문화했다.[39]

북한에서도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된다.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40]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군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는 겸임 규정을 신설했다.[41] 군에 대한 당의 우위를 명문화한 것이다.

Q=53(검색일: 2024년 5월 8일).

38) 조영남, 『중국의 통치체제 2: 공산당 통제기제』(파주: 21세기북스, 2022), pp. 609-632.

39) "ARTÍCULO 128. Corresponde al Presidente de la República:…(중략)… i) desempeñar la Jefatura Suprema de las instituciones armadas y determinar su organización general"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Cuba* (2019); https://www.parlamentocubano.gob.cu/index.php/constitucion-de-la-republica-de-cuba(검색일: 2024년 5월 8일); "Artículo 57. El trabajo del partido en las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y el Ministerio del Interior es dirigido por el primer secretario del Comité Central del Partido Comunista de Cuba." Partido Comunista de Cuba, *Estatutos del Partido Comunista de Cuba* (Habana: Editora Política, 1998), p. 24.

40) "제47조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 밑에 진행한다.", "제30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조선로동당 규약』(2021).

41) "제30조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규약』(2021).

단, 북한에도 당적 지도를 최상위에 둔 상태에서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부문과 군 부문 내 군사지도·지휘체계가 존재한다. 국가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이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2] 국무위원회는 국가의 전시 상태, 동원령을 선포하고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행정 및 집행 기구로서 국방사업을 지도한다.

군 부문에서는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를 통한 작전지휘계선이 존재한다. 2011년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43] 당적 지도 아래 국가 및 군 부문에서 군사지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군정권과 군령권은 수령에게 집중되어 있다.[44] 북한의 군권은 당 총비서가 겸임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장(前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구성되는 것이다.[45]

상기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권'은 '당권을 가진 최고지도자의 군에 대한 지도 권한'이며 '국가 및 군 부문'에서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한다. 군권이 당, 국가, 군 부문으로 나뉘어 구성되므로, 최고지도자는 후임자에게 부문별로 나눠 군권을 이양할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새로운 국군통수권자의 취임과 함께 군권이 이양되는 것과 달리, 권력승계가 제도화되기 어려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후계자로의 군권 우선 이양이 성립될 수 있다. 북한, 중국, 쿠바의 권력승계를 살펴보면, 혈연 세습의 경우 '군권'이 '당권'에 비해 우선 이양되고 비혈연 세습의 경우 오히려 '군

---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

43) 단,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공화국 무력의 최고사령관', '무력의 총사령관'으로 지칭한 바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로동신문』, 2011년 12월 31일.

44)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pp. 209-213; 김동엽,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 『경제와 사회』, 통권 제122호(2019), p. 82.

45) 다만, 본 연구는 '군권 이양'을 해당 직책의 이양 자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직책을 중심으로 '최고지도자의 무력에 대한 유의미한 권한'의 이양으로 본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의 신설, 최고지도자의 정보기구 장악 등 유의미한 사건을 분석의 범위 내로 포함해 최고지도자의 군권 장악을 더 세밀하게 조명한다.

권’이 ‘당권’보다 늦게 이양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비혈연 세습이 일어난 중국에서는 당 총서기직에 비해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이 늦게 이양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공산당 총서기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일치하지 않을 때 후자를 권력의 실세로 인식함에 따라, 권력승계 시 전임자가 ‘군권’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46]

반대로 혈연 승계가 이루어진 북한과 쿠바에서는 당권보다 군권을 우선 이양하기 시작했다. 형제간 혈연 승계가 이루어진 쿠바에서는 전임자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2008년 2월 국가 원수인 국가평의회(Consejo de Estado) 의장직(Presidente)을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에게 이양하며 ‘최고사령관 직책’도 함께 이양했다. 피델은 2011년 4월 쿠바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공산당 제1서기직을 라울에게 이양함으로써 당권을 가장 늦게 이양했다.[47] 북한에서 후임자에게 ‘최고사령관 직책’을 우선 이양한 후 유훈통치를 거쳐 ‘당 최고 수위’를 이양한 순서와 유사하다.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은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혈연 승계 여부에 따라 ‘군권 우선 이양’의 여부가 달라진 점은 ‘군권’이 ‘당권’을 이양받거나 유지하기 위한 핵심 권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혈연 세습에서는 ‘군권’이 후계자가 ‘당권’을 이양받을 수 있는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비혈연 세습에서는 전임자가 ‘군권’을 유지함으로써 후계자에게 ‘당권’을 우선 이양했음에도 일정 수준 영향력을 유지한 것이다. 북한의 ‘군권 우선 이양’을 다루기 위해 다음 목에서 안정적 당권 승계를 위한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

46) 조영남, 『중국의 엘리트 정치: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서울: 민음사, 2019), pp. 466-478.

47)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쿠바 개황』(2016); https://overseas.mofa.go.kr/mx-ko/brd/m_20176/view.do?seq=1194461&page=1(검색일: 2024년 5월 8일); “I communicate to you that I will not aspire to or accept…(중략)… the position of president of council of state and commander in chief.” Angela Balakrishnan & Mark Tran, “Castro resigns as Cuban president,” *The Guardian* (인터넷판), 2008년 2월 19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8/feb/19/cuba(검색일: 2024년 5월 8일).

나.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

(1) 물리적 정권 보위(권력적 측면)

군권 우선 이양의 첫 번째 필요성은 군권을 이양받은 후임자가 무장력을 지휘 통솔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현실적 위협에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임자가 '당권'을 이양받거나 '당권'을 이양받은 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구축된다.

털럭(Gordon Tullock)은 만약 독재자가 타도되면 현재보다 더 큰 이익을 누릴 이익집단이 존재하므로, 독재자에게 쿠데타의 위협이 상존한다고 보았다. 권위주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은 정치엘리트들 스스로 '그 어떠한 쿠데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인식하는 것이다. 정권에의 도전 자체를 시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도자는 정치엘리트 간 소통을 방해하고, 반역죄에 대한 논의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위직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순환식 인사제도를 도입해 주요 권력을 가진 유력 인물의 등장을 방지한다. 그럼에도 만약 최고지도자에 위협적인 유력한 인물이 등장한다면, 숙청도 마다하지 않는다.[48]

털럭은 정치엘리트들이 최고지도자의 강력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으나 무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내포한다. 털럭은 독재자가 유력 정치엘리트를 무력화하기 위해 숙청과 같은 강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엘리트들이 도전자보다 독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보았다. 또한 쿠데타가 쉽게 성공하는 방안으로 독재자 호위 부대의 묵인이나 다른 무력 집단에 의한 호위 부대의 전복을 꼽았다. 군으로부터의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히틀러(Adolf Hitler), 스탈린(Joseph Stalin),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들이 스스로 군대를 지휘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49]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

48) 털럭, 『전제정치』, pp. 46-65.

49) 털럭, 『전제정치』, pp. 223-226.

하기 위해 최고지도자가 충성도 높은 무력을 보유 및 지휘해야 하고, 무력 수단을 동원해 정치엘리트들이 정권에의 도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후계자가 정권을 세습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

스볼릭(Milan W. Svolik)은 권위주의 정권이 겪는 두 가지 위협을 지도자와 엘리트 간의 권력 공유 문제(authoritarian power-sharing), 정권과 대중 간의 권력 통제 문제(authoritarian power-control)로 구분했다. 먼저, 권력 공유 문제에서는 엘리트들이 지도자를 대체할 수 있거나 지도자가 임기를 어기면 처벌될 것이라는 신뢰(credibility)가 존재할 때,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엘리트들의 견제가 신뢰성을 잃게 되면 독재자는 정권 유지에 더 이상 엘리트들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확립된 독재(established dictatorship)로 이행한다. 확립된 독재에서는 지도자의 임기를 설정하거나 주기적인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는 지도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제도들이 사실상 무력화된다.[50] 따라서 독재자는 권력의 안정성을 위해 정치엘리트들이 보유한 독재자에 대한 견제 수단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스볼릭은 정치엘리트들의 견제 수단을 무력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나, 오경섭은 독재자를 견제할 적절한 수단이 곧 무력을 뜻한다고 보았다.[51] 권위주의 정권 내 최종적인 갈등 해결 수단이 폭력임을 고려 시, 무력은 핵심 견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치엘리트들이 독재자를 견제할 만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독재자는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스볼릭은 지도자와 대중 간의 권력 통제 문제에서도 군부의 역할에 주목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군대이다. 풍부한 노동력, 훈련된 무장력, 효율성을 가진 유일한 무장 집단이기 때문이다.[52]

---

50) Milan W.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55-62; 오경섭 외,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pp. 33-39.

51) 오경섭, "권위주의 지배의 정치: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Milan W. Svolik," 『KINU 통일+』, 제2권 1호(2016), p. 70.

결국 스볼릭은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을 위해 지도자의 엘리트와 대중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며, 그 주요한 수단이 군권임을 주장한다. 이를 권력승계에 적용하면, 후계자는 엘리트와 대중 통제를 위해 군권을 공고히 장악해야 한다.

당군관계 이론을 통해서도 충성도 높은 군에 의한 정권 보위 역할을 알 수 있다. 펄뮤터와 리오그란데(Amos Perlmutter, William M. LeoGrande)는 고위급 군 장교들이 군 직책뿐만 아니라 당 직책을 동시에 수행함(dual-role elites)으로써 당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빠르게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군부는 당의 입장에서 개입함(party in uniform)으로써 정권을 보위한다. 1957년 소련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 실각 위기 시 소련 군부의 역할, 1967년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할을 그 예로 들 수 있다.[5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권위주의 정권 유지의 핵심 기제는 지도자의 절대적 권력과 이에 도전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치엘리트들의 구성된 인식이다. 특히 폭력이 갈등 해결의 최종 수단인 권위주의 정권에서 무력은 지도자의 절대 권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도자는 충성도 높은 무력을 보유해야 하며, 반대로 정치엘리트들이 지도자를 위협할 만큼의 무력을 보유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권력승계에 적용하면, 후계자는 잠재적 도전자들이 도전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만큼의 권력을 보유해야 하며, 여기에는 도전 불가능한 수준의 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권을 포함한 무력의 보유는 단순히 무력을 지휘하는 권한을 넘어 잠재적 도전자, 대규모 민중 봉기로부터 정권 위협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권력승계를 받는 후계자로선 이러한 군권을 다른 경쟁자들보다 빠르게 장악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력승계의 핵심이다.

---

52)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 123-158.

53) Amos Perlmutter & William M. LeoGrande,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 (1982), pp. 786-788.

(2) 안보 위협을 이용한 정당성 강화(권위적 측면)

군권 우선 이양의 두 번째 필요성은 후임자가 '체제 수호자'라는 상징성을 부여받음으로써 안보 위협을 유리하게 규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보' 차원의 이유는 최고지도자의 정치 행위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후임자가 '군권'을 우선 이양받는 것은 승계 정권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당권을 승계 및 유지하는 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셈이다.

알튀세르(Louis Pierre Althusser)는 국가기구를 경찰, 군대와 같은 강압적 기구와 학교, 언론, 대중매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구분했다. 강압적 기구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이라면, 이데올로기적 기구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피지배계급에게 내면화시켜 동의에 기반한 지배'를 실현한다.[54]

국내 정치에 안보 위협을 이용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역할과 같이, 피지배계급에게 '특정 안보 위협'을 부각해 최고지도자가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높은 정당성을 갖추도록 한다. 예를 들어, 틸리(Charles Tilly)는 전쟁 및 군비경쟁과 같이 다른 국가를 적으로 상정하는 행위가 '국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정당화하고, 국가가 더 많은 자원을 관리할 합법적 특권을 준다고 보았다.[55] 카네티(Elias Canetti)는 적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등 위험한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영웅의 영광'이 그를 '우월한 존재' 또는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만들어 그 권력을 방호한다고 보았다. 때로는 '영웅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없는 적(敵)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56] 후임자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에 안보 위협의 활용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54) 정태석 외, 『사회학: 비판적 시선』(파주: 한울엠플러스, 2023), pp. 147-150.

55) Charles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Charles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 42.

56) 엘리아스 카네티(Elias Canetti), *Masse Und Macht*, 강두식·박병덕 역, 『군중과 권력』(서울: 바다출판사, 2002), pp. 303-305.

후임자가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군부의 물리적 역할만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와 관련된다. 스볼릭은 지도자와 대중 간의 권력 통제 문제에서 정권의 생존을 군에 의존하게 되는 순간 최고지도자가 군으로부터의 위협에 취약해진다고 보았다. 군이 정치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므로 군이 정권에 요구하는 만큼 더 많은 자원과 자율성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지도자는 군부 통제 수단을 유지하면서도 무력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물리력과 다른 통치 수단의 사용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57] 후임자의 정당성 강화는 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한 사회의 '군사주의화'는 최고지도자가 안보 위협을 활용해 지배를 정당화하는 한 예시이다. 클레어(Michael T. Klare)는 군사주의화를 개인의 행동에 군사적 가치와 규범이 과도하게 침입하는 현상으로 보았다.[58] 전 사회에 군대와 같은 규율과 사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강력한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핵 개발이 독재 정권의 '정권 안보'를 강화하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안보 위협의 정치적 이용을 보여주는 한 예시다. 김보미는 핵무기 개발이 한 국가의 대외관계는 오히려 악화시키나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강화하므로, 핵무기가 대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보다 대내 정치적 이유에 따라 개발된다고 보았다. 특히 최고지도자는 재래식 전력이 아닌 핵무기 개발을 강조함으로써 위협적인 군부의 성장을 방해하고, 핵무기에 대한 강력한 통제 권한을 구축해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59]

졸링겐(Etel Solingen)도 개혁·개방 시 오히려 기대 이익의 하락이 예상되는 국수주의 정치 연합(nationalist, inward-looking coalitions)이 핵무기 개발을 활

57)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 132; 김진하,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 권력집중 전략,"『국가전략』, 제27권 2호(2021), p. 61.

58) Michael T. Klare, "Militarism: The Issues Today," Asbjørn Eide & Marek Thee, eds., *Problems of Contemporary Militarism* (London: Croom Helm, 1980), p. 36.

59) 김보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북핵개발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핵전력 지휘통제체계,"『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2017), pp. 104-108.

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각종 담론의 신화화를 통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이들에게 유리한 자원 배분을 합리화하는데, 이때 '핵'이 자원의 편향적 배분을 강력하게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다.[60]

군사주의화 및 핵 개발의 국내 정치적 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군권을 가진 최고지도자가 국가안보 차원의 이유를 활용해 본인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군권이 후임자에게 우선 이양되었을 때, 안보 문제는 후임자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경기침체의 책임을 외부에 돌려 후임자의 정당성 훼손을 방지하거나, 안보적 이유를 들어 개혁·개방의 속도를 후임자에게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다. 부정부패 문제를 이유로 주요 정치엘리트를 숙청할 수도 있다. 권력승계 관련 안보 문제의 활용은 대중과 정치엘리트를 후임자가 의도한 바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동의에 기반한 지배'를 가능케 하며, 이는 승계 정권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하는 데 기여한다.

다. 군권 우선 이양의 작동 기제

후임자가 군권을 우선 이양받더라도 승계 정권 안정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후임자가 우선 이양받은 군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군권 우선 이양의 작동 기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메스키타와 스미스에 따르면, 권위주의 정권의 최고지도자는 소규모 승리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잠재적 경쟁자보다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하고, 동시에 '언제든 승리 연합에서 축출될 수 있다'는 공포를 주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승리 연합을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 명목 선출인단을 유지함으로써 소규모 승리 연합에게 지도자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른 인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61]

---

60) Etel Solingen, "The Political Economy of Nuclear Restrai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2 (Fall 1994), pp. 139-142.

61) 메스키타·스미스, 『독재자의 핸드북』, pp. 122-123.

군권 우선 이양의 작동 기제에 이를 적용하면, 최고지도자는 군부 엘리트에게 승리 연합으로서의 보상과 언제든 보상은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어야 한다. 후계자는 본인에게 충성하는 군부 내 승리 연합을 구성하고 승리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보상 능력과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 무력, 사법권 등을 장악해야 한다.

김진하는 독재체제 통치 안정화의 주요 수단을 포섭(co-optation)과 탄압(repression)으로 정리했다. 포섭은 정치엘리트에게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부와 같은 지대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탄압은 숙청 및 공포 조성, 사회적 고립과 같이 압박과 제한을 행사하는 강압적 도구이다. 군권에 이를 적용하면, 군부에 대한 순응의 수단으로 경제적 보상과 진급 인사,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강압의 수단으로는 숙청과 인사 교체, 중첩된 감시체계 구축 및 이익의 박탈 등을 들 수 있다.[62]

최고지도자가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담론의 생산 및 유통', '이념 또는 정치 신념의 신화화'가 주요 작동 기제라 할 수 있다. 김현경은 권력 주체가 담론을 통해 강제와 공포가 아닌 '대중의 동의'를 얻어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때 '대중의 동의'란 자발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담론을 통해 선호가 조작된 강요된 동의를 포함한다.[63]

김현경의 연구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권력승계 담론에 주목했지만, 담론은 군부를 대상으로 한 군권 장악에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항일빨치산계 혁명에 대한 강조, 1세대 원로 우대 등은 군부의 사회적 명예를 높여 최고지도자에게 충성하게 하는 순응의 수단이다. 최고사령관에 대한 '결사관철'과 인민을 위한 희생 강조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사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군권의 순응적 기제'에 해당한다. 단, 군부의 의사에 반해 최고지도자의 요구가 관철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강압의 측면도 공존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군권 우선 이양의 작동 기제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

62) 오경섭 외,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p. 35.

63) 김현경, "김정은 권력승계의 담론 연구," pp. 19-25.

【표 2-1】 군권 우선 이양의 작동 기제

작동 기제	주 요 수 단
강 압	• 숙청, 인사 교체, 군 내 부정부패 색출, 중첩된 감시체계 구축, 축출의 공포, 이익의 박탈 등
순 응	• 물질적 보상 제공, 진급 인사, 정치적 역할 확대, 군 원로 우대, 충성심에 대한 신념화, 정치사상 교육 등

* 출처 : 오경섭 외,『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p. 35; 김현경, "김정은 권력승계의 담론 연구," pp. 19-25를 참고하여 재작성.

군권을 우선 이양받은 후임자는 강압과 순응의 작동 기제를 사용할 수 있다. 강압은 군에 대한 압박과 감시 및 강요를, 순응은 지대의 배분과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 동의에 기반한 수단을 뜻한다. 후임자는 강압과 순응의 작동 기제를 적절히 활용해 승계 정권을 안정화할 수 있다.

3.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주요 사례

앞서 도출한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과 구체적 작동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의 주요 권력승계 사례를 살펴본다. 단, 북한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군권 우선 이양 사례는 제한적이므로, 군권 우선 이양이 이루어진 쿠바와 그렇지 않은 소련 및 중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가. 소련의 권력승계 : 군의 정권 보위 역할 수행

1953년 3월 6일 스탈린 소련 서기장의 사망 이후 소련의 권력은 말렌코프(Georgy Malenkov), 베리야(Lavrentiy Beria), 흐루쇼프 등 삼두체제로 분산 및 재편되었다. 스탈린 사후 초기 말렌코프가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의장

으로 정부의 수반을 맡음으로써 비교적 권력의 우위를 점했으나, 베리야가 정보, 방첩 및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MVD)[64]를 장악함으로써 베리야의 권력이 급격히 강화되었다. 베리야의 통제 아래 수십만 명의 병력, 탱크와 수송기와 같은 무기체계 등이 편제되었으며, 다른 정치엘리트에 대한 감시체계도 포함됐다.

하지만 베리야의 권력 강화에 따라 베리야가 모스크바 주변에 병력을 비밀리에 배치하는 등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고 흐루쇼프에게 보고될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흐루쇼프와 말렌코프는 베리야의 축출을 위해 상임위원회(Presidium)의 다른 위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흐루쇼프와 말렌코프는 베리야 통제 아래 있는 내무부 병력을 정규군으로 포위하는 등 발생 가능한 내전에 대한 준비를 완료한 후, 1953년 6월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베리야를 축출했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군 원수 계급의 쥬코프(Georgy Zhukov)와 모스크바 군관구 지휘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모스칼렌코(Kirill Moskalenko) 상장이 상임위원회 바로 옆 방에서 대기하다 상부의 지시를 받고 베리야를 체포했다.[65]

베리야가 상당한 무력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소련 군부가 흐루쇼프와 말렌코프를 지지하고 당에 충성함으로써 정권을 보위했고, 이에 따라 베리야는 손쉽게 제거됐다. 스볼릭이 분석한 지도자와 정치엘리트 간 권력 공유 문제의 관점에서 베리야의 축출은 주요 정치엘리트가 지도자를 견제할 만한 무력 수단을 잃게 됨으로써 지도자의 권력이 강화된 계기였다. 군부의 개입으로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 실패할 것'이라는 정치엘리트의 인식이 강화되었으므로, 권력의 안정성은 높아졌다.

이후 흐루쇼프는 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

64) 베리야는 비밀경찰 출신으로써 1938년부터 방첩 및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인민위원부(NKVD)의 수장을 맡았다. 내무인민위원부는 1946년부터 정보기능을 국가보안부(MGB)에 이관하고 내무부(MVD)로 개편되었지만,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베리야에 의해 내무부와 국가보안부는 합병되었다. William J. Tompson, *Khrushchev: a political life* (New York: St.Martin's Press, 1994), p. 116.

65) Tompson, *Khrushchev*, pp. 116-121.

제20차 대회에서 최초로 스탈린을 비판했다. 정치 개혁을 통해 당과 개인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66] 하지만 흐루쇼프의 당권 강화에 따른 반발로 말렌코프,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 카가노비치(Lazar Kaganovich) 등으로 구성된 반(反) 흐루쇼프 연합이 형성됐다. 이들은 1956년 6월 18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되, 흐루쇼프측 상임위원 2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흐루쇼프 축출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흐루쇼프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 개최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상임위원과 서기국 전원이 소집된 후 재논의하도록 조정되었다.

이때 군을 통제하는 국방장관 쥬코프, 국가보안위원회(KGB)를 관장하는 세로프(Ivan Serov), 내무부(MVD)를 관장하는 듀도로프(Nikolai Dudorov) 등 이른바 주요 권력기관의 장이 흐루쇼프를 지지함으로써 반(反) 흐루쇼프 연합의 흐루쇼프 축출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군부는 소련 전역에 퍼져있던 친(親) 흐루쇼프 위원들을 군용기로 태워 모스크바로 신속히 이동시켰다. 다시 개최된 회의에선 흐루쇼프 측으로 진영이 기울었고, 오히려 반(反) 흐루쇼프 연합 3인방이 '반당집단'으로 내몰려 비판을 받는 등 흐루쇼프 축출 시도는 실패했다.[67] 흐루쇼프의 권력은 군부의 지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군부의 지지를 통해 정치권력을 확보한 흐루쇼프는 역설적으로 군부 견제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흐루쇼프는 쥬코프에 의해 실각 위기를 두 번이나 넘겼으나, '대조국 전쟁'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는 쥬코프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 1957년 10월 쥬코프는 군 내에서 당의 역할을 축소했다는 죄명으로 비판받고 상임위원에서 해임되었다. 흐루쇼프는 1958년 3월 불가닌(Nikolai Bulganin)을 각료회의 의장직에서 축출함으로써 국가 최고 수위를 차지했고, 소련 국방위원회(Council of Defense)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스스로 취임해 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68]

---

66) Tompson, *Khrushchev*, p. 154.

67) Tompson, *Khrushchev*, pp. 174-199; Perlmutter & LeoGrande, "The Party in Uniform," p. 787.

스탈린 사후 소련의 권력승계 사례는 권력 투쟁기 군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흐루쇼프가 정적을 제거하고 최고 권력을 쟁취하기까지 군부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또한, 베리야가 '영국 간첩'으로 활동하며 서방에 협력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된 것은 정적 제거에 있어 '안보상 이유'가 정치엘리트 및 대중의 지지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나. 중국의 권력승계 : 군부 승리 연합 구축

마오쩌둥이 1927년 무장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드시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枪杆子里面出政权)'고 언급할 만큼, 중국의 권력승계는 누가 '도전 불가능한 수준의 군권'을 보유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권의 강력함으로 인해 중국 권력승계 시 군권을 당권보다 늦게 이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69]

중국 인민해방군을 영도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주석 직위는 오로지 최고지도자만이 차지해 왔다. 1935년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창설 시부터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시까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의 주석은 오직 마오쩌둥뿐이었다. 마오쩌둥 사후인 1976년부터 1980년까지는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화궈펑이, 이후엔 덩샤오핑이 주석직을 역임했다. 특히 덩샤오핑은 과도한 겸직을 비판하며 당 주석직은 역임하지 않고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의 주석직만을 유지했다. 덩샤오핑에서 장쩌민(江泽民)으로의 권력 이양도 당·정 직위는 1987년 이루어졌으나,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주석직은 2년 후인 1989년에 이루어졌다. 장쩌민 또한 후진타오(胡锦涛)에게 2002년 공산당 제16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직을 이양했으나,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주석직은 2004년까지 유지했다.[70] 공식 직책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이 군권

68) Tompson, *Khrushchev*, pp. 184-189.

69) 조영남, "중국 최고 지도자의 권력 공고화: 장쩌민의 사례," 『중화연구』, 제41권 3호 (2017), p. 12.

70) 조영남, "중국 최고 지도자의 권력 공고화," pp. 11-14.

장악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권력승계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권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하다.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 사망 후 공식적인 후계자는 화궈펑이었다. 화궈펑은 마오쩌둥 사망 후 군부 원로 출신인 예젠잉(叶剑英), 리셴넨(李先念) 등과 승리 연합을 구성해 문화혁명 급진파였던 사인방(왕훙원(王洪文), 장칭(江青) 등)을 효과적으로 숙청했다. 1976년 10월 6일 예젠잉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명의로 군을 동원해 사인방의 민병 조직이 베이징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으며, 이와 동시에 중앙판공청 주임인 왕둥싱(汪东兴)은 당 경호부대인 중앙경위단을 동원해 사인방을 체포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사인방의 체포를 사후 추인했고, 이와 함께 화궈펑을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의결했다.[71] 군이 당의 입장에서 정권을 보위한 것이다. 만약 군부의 협조가 없었다면, 화궈펑은 사인방을 효과적으로 숙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군의 정권 보위 역할에도 불구하고 화궈펑의 군권 장악은 한계를 보였다. 문화혁명을 통해 성장한 화궈펑이 군부와 협력해 문화혁명 급진파를 숙청했으므로, 기본적인 이념 노선에서 화궈펑과 군부 간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도메스(Jürgen Domes)는 화궈펑 스스로 군부의 지지 없이 권력을 안정화하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화궈펑이 군부와의 거래로 문화혁명 급진파를 축출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72] 따라서 군부와 이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화궈펑의 군권은 약화할 수 있었다.

실제 화궈펑은 사인방 체포 후 진행된 이념적 논쟁에서 군부 원로의 지지를 잃었고, 결국 실각했다. 화궈펑은 1977년 2월 '마오쩌둥이 결정한 정책이라면 잘 지켜야 하며 마오쩌둥이 지시한 것은 준수해야 한다'는 양개범시(两个凡是, 두 개의 범시론 모두 옳다)론을 주장했다. 마오쩌둥의 후계자로서 마오쩌둥의 지지에 기반한 정당성을 주창한 것이다. 하지만 문화혁명 시기 실권했던 당 원로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 특히 1977년 7월 예젠잉, 리셴넨 등 군부 원로의 지

71) 이재준,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연구," pp. 137-146.

72) Domes,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PRC*, p. 137.

지를 얻어 당 2인자로 복귀한 덩샤오핑은 이러한 이념 논쟁의 구심점이 되었다.

1978년 4월에서 6월 간 개최된 전군정치공작회의(全军政治工作会议), 1978년 6월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军报) 등을 통해 군부는 덩샤오핑에 공개적인 지지를 표했다. 일각에서 오로지 마오쩌둥에 의해서만 권력을 승계한 화궈펑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자, 화궈펑은 결국 1978년 11월 25일 양개범시의 오류를 인정했다.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중공 11기 3중전회에서 실천파가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에 대거 유입되며 화궈펑은 권력을 상실해 갔다. 1980년 12월 5일 정치국 회의에서 화궈펑은 당중앙위원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서 물러났으며, 당중앙위원회 총서기는 후야오방(胡耀邦)이, 군사위원회 주석은 덩샤오핑이 맡았다. 이는 1981년 6월 27일 중공 11기 6중전회에서 공식 의결되었다.[73]

화궈펑의 실각 과정은 군부가 중국 정치를 구성하는 정치엘리트로서 당 내 이념 투쟁에서 주요하게 역할 했음을 보여준다. 화궈펑은 실각 과정에서 그를 옹호해 줄 친위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맥없이 교체되었다. 반대로 덩샤오핑은 1978~1980년 사이 11개 대군구에서 10명의 사령관과 전 군구의 정치위원을 교체하며 본인의 세력을 지속 충원했다.[74] 화궈펑의 실각 과정은 후계자가 공식적으로 군권을 가졌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경우 더 위협적인 도전자가 그를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권력승계가 제도화되고 민간인 출신의 지도자가 선출됨에 따라 최고지도자의 권력 장악을 위한 군권의 역할은 비교적 약화했다. 하지만 체제 보위를 위한 군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했다. 민간인 출신 최고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당권보다 군권을 늦게 이양받기 시작했고, 민간인 최고지도자의 군권 장악 여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

73) 김판수, "인민해방군에 대한 권력 분점과 마오쩌둥의 불안, 1949-1976년,"『중국지식네트워크』, 제20권(2022), pp. 286-290; 이재준,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연구," pp. 148-185; Domes,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PRC*, pp. 156-163.

74) 이동훈, "김정은 시대, 북한 어디로? 중국 화궈펑과 소련 흐루시초프를 보자,"『통일한국』, 제337호(2012), pp. 18-19.

민간인 출신 최고지도자들은 군부 내 새로운 승리 연합을 조기에 구성해 군부의 충성심을 높여야 했다. 이들은 군부에 대한 강압과 순응의 수단을 활용했다. 순응의 수단으로는 군부 인사를 적극 활용했다. 장쩌민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취임 이후 1993년 군 최고계급인 상장 계급을 6명에게, 1994년에는 19명에게 수여했다. 이후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상장 계급을 수여했다.

강압의 수단으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정풍운동(整风运动)을 들 수 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목 아래 군부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75] 대표적으로 시진핑(习近平)은 반부패 운동을 통해 후진타오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한 쉬차이허우(徐才厚), 궈보슝(郭伯雄) 등을 해임했다.[76]

민간인 출신 최고지도자들은 군권을 이양받은 이후 군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군권의 승계가 새로운 최고지도자 권력의 안정성을 담보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 쿠바의 권력승계 : 군부 승리 연합을 활용한 정당성 강화

쿠바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 정권에 대한 반군을 이끌던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 1959년 쿠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바티스타 반군은 1957년부터 정부군과 격전하는 과정에서 게릴라 전통의 신화를 만들어 냈으며, 그 결과 피델 카스트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지도자로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1960년대 중반 체 게바라(Che Guevara), 알베르트 모라(Alberto Mora)와 같은 바티스타 반군 내 주요 인물을 숙청하며 피델의 개인 지배체제는 공고화됐다.[77]

---

75) 조영남, “중국 최고 지도자의 권력 공고화,” pp. 24-38.

76) 송재윤, ““권력은 총에서 나오고, 총은 당이 지휘한다”… 시진핑의 군권 장악,” 『조선일보』(인터넷판), 2023년 1월 21일;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1/21/XWNYQBJQAZC2JN7WXK6X2DWRAU(검색일: 2024년 5월 21일).

77) 이경화, “북한과 쿠바의 혁명군부에 대한 비교 연구: 체제유지에 있어서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pp. 139-146; 김기현, “라울의 제도적 리더십

2006년 피델 카스트로의 건강 악화에 따라,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대리하게 됐다. 이후 2008년 2월 라울이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2011년 4월 쿠바 공산당 제1서기를 공식 승계했다.[78]

피델의 권력은 라울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지만, 후계자로서 라울의 군부 기반 또한 공고했다. 피델이 국가 헌법이나 당 규약에 등장하지 않는 '최고사령관(Comandante en Jefe)'[79]으로 불리며 개인의 카리스마에 기반해 권력을 유지했다면, 라울은 1960년대부터 오랜 기간 국방장관을 역임하며 군부를 장악했다. 라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쿠바 군 장교들을 서유럽 등 서방 선진국에 유학을 보내 새로운 경영방식을 학습하도록 했고, 라울 주도로 군에 새로운 경제 개혁모델(Sistema de perfeccionamiento empresarial, SPE)을 도입했다. 군수산업과 관련해 군부의 자율적 경영방식(Sistema de Perfeccionamiento Empresarial, SPDE)을 허용하는 등 군부 중심의 혁신을 이끌기도 했다.[80]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며 경제적 역할과 자율성이 확대된 쿠바 군부는 새로운 경제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정권과 일치된 이해관계를 갖고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했다. 라울은 권력승계 이전 이미 군부 내 승리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군부를 공고히 장악하고 있었다.

라울은 권력승계 이후 군부를 승리 연합으로 등장시키며 피델 시기 주요 정치엘리트들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 공고한 군권을 기반으로 권력의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라울리스타(Raulista)'는 오랜 기간 라울의 승리 연합으로 성장해 온 군부를 일컫는 말로, 라울 정권의 주역이라 할 수 있다.[81] 2011년 4월 제

구축과 쿠바 권력엘리트의 변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8권 2호(2017), p. 30.

78) 이경화, "북한과 쿠바의 혁명군부에 대한 비교 연구," p. 164.

79) Bert Hoffmann, "Charismatic Authority and Leadership Change: Lessons from Cuba's Post-Fidel Success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0, No. 3 (June 2009), p. 238.

80) Frank O. Mora & Quintan Wiktorowicz, "Economic Reform and the Military: China, Cuba, and Syria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44, Issue. 2 (2003), p. 105; 김기현, "라울의 제도적 리더십 구축과 쿠바 권력엘리트의 변화," p. 47.

6차 쿠바 공산당 대회에서 15명의 정치국 위원 중 8명이 전·현직 군인이었으며, 115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의 약 30%가 군부로 충원되었다.[82] 2012년까지 26명의 각료회의 장관 중 피델이 임명한 사람은 3명만 남았다.[83]

라울은 경제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형 피델과 차별화된 정치 행보를 통해 새로운 국가 지도자상을 확립했다. 라울은 2008년 2월 국가평의회 의장으로서 한 최초의 연설에서 "정부는 작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도한 규제는 생산성을 위해 제거하겠다."고 선언해 개혁·개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높였다.[84] 2011년에는 14년 만에 개최된 제6차 쿠바 공산당 대회에서 경제 분야 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영업자와 같은 사적 부문의 역할을 증대하는 경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2013년 화폐의 이중화 구조 해체 선언,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인터넷 허용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85]

라울은 개혁·개방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권력 정당성을 추구했으나, 쿠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경제성장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적 부문 내 개방된 분야에서도 핵심 이익이 나는 부문은 군부에 몰아줌으로써 라울에 대한 충성심을 극대화했다. 라울의 측근들이 장관, 공기업 사장 등 요직에 취임했고, 대형 유통망, 통신망 등의 분야를 국방부 산하로 편입시켜 문

81) 이정철, "쿠바와 북한의 7차 당대회 비교: 당군관계와 체제론," 『국방연구』, 제61권 1호 (2018), p. 6.

82) 손혜현, 『쿠바 디아스 카넬 신정부 출범의 함의와 도전 과제』(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pp. 10-12.

83) William M. LeoGrande, "Cuba's Perilous Political Transition to the Post-Castro Er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47, No. 2 (May 2015), pp. 383-388.

84) "Key address by Comrade Raul Castro Ruz, President of the State Council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at the closing session of the First Session of the 7th legisla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People's Power," *Granma* (인터넷판), 2008년 2월 24일; https://www.granma.cu/granmad/2008/02/24/nacional/artic36.html(검색일: 2024년 5월 11일).

85) LeoGrande, "Cuba's Perilous Political Transition to the Post-Castro Era," pp. 388-391; Mark P. Sullivan, "Cuba: U.S Policy and Issues for the 113th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29, 2014), pp. 10-11; Bert Hoffmann, "Bureaucratic socialism in reform mode: the changing politics of Cuba's post-Fidel era," *Third World Quarterly*, Vol. 37, No. 9 (2016), pp. 1733-1740.

고리국가(gatekeeper state)의 성격이 강화되었다.[86] 다만, 라울은 개혁·개방 정책을 군부의 지지 아래 대외적으로 내세웠고, 이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불식시켰다.[87] 전임자 피델과 차별화되는 국가 지도자로서 라울의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다. 정권 초기 군부가 라울의 승리 연합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라울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주요하게 역할 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북한에서의 권력과 군권

1.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형성과 군권 장악

북한에서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의 형성은 김일성의 군권 활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북한 국가 수립 초기 김일성의 권력 기반은 동북항일연군 세력(항일빨치산계)이었다. 항일빨치산계는 소련의 지원 아래 한반도 북반구 내 군과 보안 기관 창설을 주도했고, 조선인민군 창설 후에는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을 독점하며 김일성의 영도를 가장 먼저 수용했다. 1950년 1월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은 『근로자』에서 "조선인민군은 명실 공히 김일성장군 항일인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산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 이미 조선인민군 내 '김일성 개인'의 정통성이 일부 확립됐음을 시사한다.[88]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군권을 활용해 군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대한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한 계기였다. 김일성은 소련 군정에 의해 신설된 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군사위원회는 무장력 강화 및

86) 박영자 외,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pp. 69-72; Sullivan, "Cuba," pp. 10-13.

87) 아널드 오거스트(Arnold August), *Cuba and Its Neighbours: Democracy in Motion*, 정진상 역, 『쿠바식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서울: 삼천리, 2015), pp. 215-258.

88)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1945~1961)』(서울: 선인, 2005), pp. 266-270; 김선호, "북한의 당군관계 형성과 김일성지도체제의 맹아," 『통일과 평화』, 제11권 1호(2019), pp. 147-148.

전시 동원체제 개편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전시 권한을, 최고사령부는 조선인민군뿐만 아니라 국가기구 등 일체 무력에 대한 군 통수권을 김일성에게 부여했다.[89] 전쟁 수행을 위해 최고지도자로서 김일성의 공식 권한이 확대 및 공고화된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기간 조선인민군은 김일성의 확고한 권력 기반으로 거듭났다. 조선인민군은 병력 규모가 3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로동당 가입이 적극 추진되었다. 전쟁 기간 인민군 14만여 명이 당에 새로 가입했는데, 이는 당시 조선인민군 병력 28만 4천여 명 대비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일반인 입당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군관(장교)은 절대다수가 당원이었다. "전투에서 우수한 전투원을 당에 입당시키는 사업"은 당 가입이 군에 대한 일종의 특전과 같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당에 가입한 병력에는 당에 대한 높은 충성심, 전쟁에 대한 공훈 등이 강조되었다.[90] 1952년 《김일성장군의 략전》과 1953년 《김일성 선집》이 발행되었으며, 김일성에 대한 '수령' 지칭 횟수도 전쟁 기간 급증했다.[91]

김일성은 전쟁 기간 군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의 순결성,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는데, 이는 전쟁에 대한 책임론을 김일성으로부터 불순세력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1950년 12월 실시된 '당원재등록사업'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조선인민군 퇴각 과정에서 당증을 유기 및 소각하는 규율 위반자들을 색출하고 출당시키는 조치였다. 김일성은 "이번전쟁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우리당의 당원이며 누가 가짜 당원인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중략)… 전쟁은 불순, 비겁자, 이색분자들을 무자비하게 폭로적발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자들로부터 당 대렬을 청소, 강화하기위한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고 언급함으로써 '당 내부 적'의 존재를 부각하고, 이들을 전쟁이 열세인 이유로 강조했다.[92]

---

89)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pp. 67-92.

90)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1945~1961)』, pp. 408-409, 433.

91) 서재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146-147.

92) 김일성,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해방전쟁』(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 p. 181.

김일성은 1950년 10월 군 총정치국을 설치하며 군인들이 난관에 굴복한 이유로 '군 내 당단체가 없기 때문'임을 지적했다.[93] '전투과정 중 범한 오류'는 김일성의 주요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되었다. 1950년 12월 연안파 무정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숙청되었고, 1953년 3월에는 남로당파 박헌영이 간첩죄, 국가전복죄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1955년 12월 처형되었다. 연안파 박일우 또한 1955년 12월 박헌영, 리승엽을 비호한 '반당적 행위'를 이유로 숙청되었다.[94] 김일성은 '내부의 적'을 상정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대한 책임론의 화살을 돌렸으며 그 결과, 오히려 김일성의 단일지도체제는 강화되었다. 정적을 제거하고 김일성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안보 위협'의 이유가 효과적으로 이용된 것이다.

전후인 1956년에는 최창익, 윤공흠, 박창옥 등이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8월 종파사건이 발생했다. 김일성은 이들을 당의 대오를 흔드는 '반당종파분자'로 숙청했고, 이들과 연관된 황해도 당위원회 인사들까지 '남조선측과 내통한 반혁명분자, 간첩' 등의 이유로 숙청했다.[95]

군 내에도 철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 1958년 3월 8일 인민군 내 당 정치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반당분자들이 인민군대 내에서도 수정주의와 사상적 독소를 적지 않게 뿌려 놓았다."고 언급하고, 그 원인으로 총정치국장 최종학을 비롯한 간부들의 사상적 동요를 지적했다. 이후 군 내 소련계, 연안계 간부들에 대한 집중적 검열과 숙청이 이루어졌다. 이때 생긴 간부 공백은 만주파 군부를 위한 기회가 되었다.[96]

---

93) "인민군대내에 당단체가 없었기때문에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쟁행정에서, 특히 후퇴과정을 통하여 군대내에 당단체를 조직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인민군대내에 당단체를 내오는것은 군대내에서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세우고 전투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한 결론(1950년 10월 21일)," 『김일성 저작집 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45-152.

94)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8), pp. 412-418;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1945~1961)』, pp. 521-522.

95) 김일성, "제1차5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함경북도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함경북도 당 및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57년 5월 11일)," 『김일성 저작집 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58-159.

8월 종파사건을 통해 김일성은 본인에 대한 비판을 '체제의 적'으로 둔갑시켰고, 그 결과 절대 권력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만주파로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대회 전후로 항일빨치산 투쟁 전기가 발간되고 주민들의 사상학습이 강화되었다.[97]

1960년대 안보 상황은 주체사상의 확립과 북한 사회의 '군사주의화'를 초래했다. 남한의 5·16 군사정권 수립과 한·미·일 삼각공조, 쿠바 미사일 사태, 베트남전 등은 김일성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1962년 11월 김광협 민족보위상을 포함한 군사대표단 파견 시 소련의 군사원조 거부는 북한 내 자주적 노선의 확립을 촉진했다.

북한은 1962년 11월 '국방에서의 자위', '4대 군사로선' 등 군사주의화 정책을 채택했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란 구호와 같이 인민들에게 안보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4대군사노선' 중 '전 인민의 무장화'는 경제생산, 노동작업에까지 군사적 규율을 요구해 사회 전체가 군대화되는 '병영 국가화' 현상을 낳았다. 인민들은 '생산도 생활도 학습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 아래 항일유격대식 사상과 투쟁 방법을 학습했다. 1962년 채택되어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공식화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 또한 국방력 강화를 우선 추진하며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켰고 민수 분야의 희생을 정당화했다.[98]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1970년 전후 북한에 형성된 항일유격대식 사회를 '유격대 국가'로 정의했다. 사령관 김일성 아래 전 인민이 항일유격대원이 되어 수령에게 충성하며 수령의 명령을 이행하는 체제이다.[99] 분단, 냉전의 대외적

---

96) 김일성, "인민군대 내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8년 3월 8일)," 『김일성 저작집 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60-16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1945~1961)』, pp. 801-806.

97) 김용현,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1호(2003), p. 190.

98)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pp. 467-468; 김성주, "북한 '군사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pp. 149-236.

99)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北朝鮮』,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

위협을 강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동원을 강조함으로써 최고사령관 중심의 병영국가를 구축한 것이다.

결국 1960년대 북한이 추진한 일련의 군사주의화 정책은 대외 환경에 대응한 체제보장 전략이면서 동시에 최고지도자 김일성의 생존전략이었다. 북한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도입해 주석제를 채택하고 헌법에 주체사상을 명시했다. 김일성으로의 권력 집중이 제도적으로 완결되었다.[100]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권력의 공고한 기반이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와 '내부의 적' 서사(narrative)는 항일빨치산계로의 권력 집중을 정당화했다. 또한 김일성은 전쟁, 냉전과 같은 안보 상황을 활용해 최고지도자로서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했다. 항일유격대식 생활 등 북한 사회의 군사주의화는 최고사령관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김일성 중심의 사회구조를 만들었다.

2. 후계자론에서의 군권

북한에서 권력승계 문제는 '후계자론', '후계자문제' 또는 '혁명위업계승의 문제' 등으로 불리며, 대를 이어 혁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언급된다.[101] 혁명위업계승의 문제는 1974년 재작성되어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의 마지막 조항으로 공식화되었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밑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102]고 규정해 성공적

가로』(서울: 돌베개, 2002), p. 131.

100)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pp. 432-433.

101)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 문제의 빛나는 해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10-25; 한은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pp. 385-400.

102)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 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앞에서

세대교체를 위한 '당중앙'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1980년대 김일성도 올바른 인물을 후계자로 지명할 것과 후계자의 지휘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공식화된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일로의 후계체제 구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였다.

> 당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기본은 정치적수령의 후계자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중략)… 당의 위업을 옳게 계승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는것과 함께 그의 령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중략)…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103]

이후 출판된 문헌들은 후계자론을 구체화하며 이론화했다. 김재천은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 '탁월한 영도력'과 같은 후계자의 덕목을 규정하고 해당 덕목을 갖춘 자라면 혈연 세습도 가능하다며, 혈연 세습을 정당화했다. 또한 후계자 선출 과정에서 '새세대 인물', '수령 생존 시 선출'을 강조했다. 안정적 혈연승계를 통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험한 권력승계의 위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104] 김유민은 '노동계급의 혁명을 대를 이어 지속'하기 위해 후계자가 수령의 영도를 계승해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이 이룩해 놓은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하는 것'이라 강조했다.[105]

1980년대 후계자론에 관한 자료들은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 정치사상적 순결성을 강조하며 후계자가 수령의 영도 전반을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해당 문헌들에서 '군권'의 역할이나 후계자 김정일의 군사적 면모를 강

한 연설(1974년 4월 14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17.

103)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한 강의(1986년 5월 31일)," 『김일성 저작선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415-416.

104)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평양: 출판사 불명, 1989), pp. 38-52.

105) 김유민, 『후계자론』(출판지 불명: 신문화사, 1984), pp. 44-60.

조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당의 영도자로서의 지위 계승'을 강조한다.

> 후계자는 미래의 수령으로서 바로 당의 영도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 후계자가 당을 골격으로 자기의 영도체계를 세워나갈 수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당의 중추적 역할을 높여 민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변혁운동을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106]

하지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실제 이루어진 1990년대 북한은 당권의 안정적 승계를 위한 '후계자로의 군권 우선 이양'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2년 출판된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김일성이 아버지 김형직으로부터 '권총 두 자루'를 물려받았다는 일화가 소개되었다. 특히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최고의 투쟁형태"라며 김일성이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도 창군하고 조국의 해방도 이루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107] 군권이 정권 창출의 근본 요소이자 기반이었음을 신화화한 것이다.

1998년 선군정치가 정식화된 이후 군권에 대한 강조는 '총대 철학'으로 발전해 '당을 지키기 위해 군권이 가장 우선 이양되었다'는 논리가 되었다. 김형직-김일성 간의 일화는 김정일이 11살이던 1952년 김일성으로부터 권총을 넘겨받았다는 일화로 계승되었고, 총대와 함께 성장한 김정일이 "그 연장선에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어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했다고 선전됐다. 특히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함으로써 확고한 군권의 장악이 체제를 수호한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11살 때 나에게 권총을 주시였습니다.…(중략)… 나는 곡절 많은 혁명의 길을 걸어 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어린 나에게 권총을 주시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중략)…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하여도 총만은 자기 주인을

106)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51.
107)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28-130.

배반하지 않습니다.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에 대한 나의 지론이고 총관입니다.》…(중략)… 어린 시절부터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으시고 총대와 함께 성장하시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위대한 군인, 강철의 령장이시기에 김정일장군께서는 유명한 총대철학을 내놓으시게 된것이고 마침내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하시게 된것이다.[108]

1990년대까지의 북한 원전들이 1952년 전쟁 도중 김정일이 김일성과 함께 최고사령부에 머물렀다는 내용은 소개하면서도 '권총을 물려줬다'는 일화는 소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일화가 선군정치가 등장한 1998년 이후 김정일에 의해 혁명역사로 편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109] 군권을 우선 이양 받아 고난의 행군을 거쳐 선군정치까지 내놓은 김정일이 본인의 정권 창출 과정을 새로운 일화를 활용해 '총대철학'과 '선군정치'로 정당화한 것이다.

이후 2000년대 출판된 자료들은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위한 후계자의 군권을 더욱 강조했다. 2018년 북한 원전에서는 명확하게 당직이나 공직이 아닌 '군직'의 우선 계승이 '총대에 의한 승리적 전진'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선대수령이 후계자에게 당과 국가의 수반직을 먼저 넘겨주는것이 관례로 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완성할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당과 국가의 공직에 앞서 군사의 중임부터 먼저 위대한 장군님께 체계적으로 넘겨주시었다.[110]

1980년대까지 당의 영도를 강조하던 북한 문헌들은 선군정치 이후 당권 수호를 위한 후계자의 '군권 우선 이양'을 강조한다. 또한 후계자의 자질 중에서도 군사적 면모를 강조하고, 과거 소련에서 스탈린 사후 최고사령관의 지시를 군대

108)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 57-59.
109) 김현경, "김정은 권력승계의 담론 연구," pp. 103-104.
110) 한은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 p. 392.

가 거부하였다거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승계 시기 기회주의적 이론이 군대를 좀먹었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군에 대한 후계자의 지도체계 확립을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111] 다만, 군권을 언급하면서도 군에 대한 당의 영도체계를 강조함으로써 '당 국가체제'라는 원칙은 유지했다.[112]

1998년 이후 후계자론과 선군정치의 결합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권'이 주요하게 역할 했음을 시사하며,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도 '군권'이 핵심적 역할을 맡을 것이란 점을 내포했다.

북한은 후계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후계자의 지도체계 구축도 혁명위업계승의 주요한 문제로 포함한다. 후계자를 옹립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후계자의 지도체계를 구축하는 것까지를 권력승계의 과정으로 인식한다.

> 수령의 혁명위업계승문제는 수령의 후계자를 옳게 추대하는것과 함께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져야만 원만히 해결될수있다…(중략)… 지난 시기 쏘련에서 쓰딸린은 말렌꼬브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하였지만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게 하는데는 깊은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말렌꼬브는 쓰딸린이 서거한 후 야심가인 흐루쇼브에게 롱락당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권을 빼앗기게 되였다.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수령이 후계자로 지명한 인물이 자기의 령도체계를 세우지 못하여 수령이 서거한후 반당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진통을 겪다가 결국 후계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고말았다.[113]

이는 북한 권력승계에서 군권의 강조가 단순히 군권을 우선 이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계자의 군부 장악의 문제까지 포함함을 의미한다. 북한이 김정

111) 한은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 pp. 386-395.

112)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시던 첫 시기부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군체계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오시었다." 한은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 p.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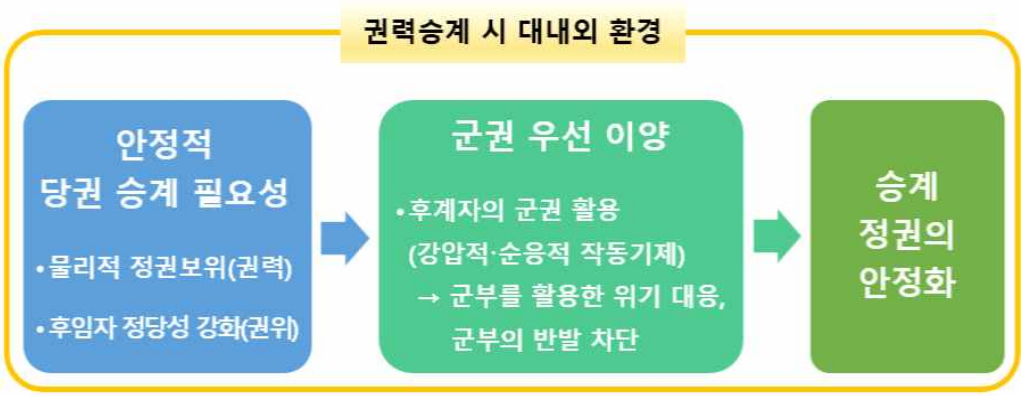
113) 고정웅,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 투쟁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p. 139-140.

은 후계 정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권력승계 준비 단계에서 김정은의 군부 장악 방법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혈연 승계가 이루어지는 여타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볼 수 없는 북한 혈연 승계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권 우선 이양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군 내 후계자의 지도체계 구축 과정에 주목해 살펴본다.

제3절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북한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권 우선 이양'이 '안정적 당권 승계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으며, '군권 우선 이양'이 후임자의 군권 활용을 통해 '승계 정권의 안정화'를 이루었다는 주장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권력승계를 군권 우선 이양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림 2-1】과 같이 분석의 틀을 구성했다.

【그림 2-1】 북한 권력승계 분석의 틀



* 출처 : 저자 작성.

먼저, 군권 우선 이양의 원인으로 '안정적 당권 승계의 필요성'을 권력적 차원과 권위적 차원으로 나눠 분석한다. 안정적 당권 승계를 위해 '군권 우선 이

양'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을 규명하는 것이다. 권력적 차원은 후임자가 군권 장악을 통해 군과 정치엘리트의 예상치 못한 당권 도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권위적 차원은 후임자가 안보 문제를 활용하여 당권 승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권 우선 이양 이전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군권 우선 이양의 결과는 후임자가 군권을 이양받은 후 승계 정권을 안정화하기 위해 군권의 강압적, 순응적 기제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강압적 기제는 군부에 최고지도자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 및 처벌 등의 강제적 수단이다. 순응적 기제는 군부가 최고지도자의 뜻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정치사상적 교육, 담론, 각종 지대의 배분 등 회유 및 보상의 수단이다. 후임자가 군권을 활용해 승계 정권의 위기 대응에 군부를 이용하거나 군으로부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승계 정권이 안정화되었음을 보인다.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북한은 두 번의 권력승계에서 후임자에게 군권을 우선 이양했다.

가설 2. 북한은 안정적 당권 승계를 위한 물리적 정권 보위 필요성과 안보위협을 이용한 정당성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후임자에게 군권을 우선 이양했다.

가설 3. 군권 우선 이양은 군권의 강압적, 순응적 기제를 활용해 예기치 못한 정권의 위기나 예상할 수 있는 군으로부터의 반발에 대한 후임자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함으로써 승계 정권을 안정화했다.

제3장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

제1절 지도자 수업과 군권 우선 이양

1. 후계자 추대 시기(1964년-1980년)

김정일은 당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해 군과 국가기구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다. 1964년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첫 근무[114]를 시작한 김정일은 1967년 갑산파 사건, 1969년 김창봉·허봉학 사건을 겪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주도했고, 당 조직에서 후계자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1967년 발생한 갑산파 사건은 범만주파였던 갑산파가 김일성과 항일빨치산 계에 대한 과도한 우상화를 간접 비판하며 항일빨치산계가 아닌 인물과 역사를 혁명전통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갑산파의 투쟁은 본질적으로 후계자 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하며 김영주나 김정일 대신 갑산파 박금철에 대한 우상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115] 하지만 문화예술 등 선전선동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갑산파의 도전은 당시 영화예술사업을 지도하던 김정일에 의해 발각되었다. 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는 당의 혁명사상과 전통, 노선과 정책을 부정하는 '반당반혁명분자'로 규정되어 숙청되었다.[116]

---

114) "1964년 4월 1일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6월 19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p. 133.

115) 유동궁,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정치와 숙청," 『軍史』, 제104호(2017), pp. 16-19.

116) "김정일이 박금철의 처를 다룬 연극 <일편단심>의 내용적 하자를 지적했다."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p. 102;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죄행과 해독적후과를 철저히 폭로하고 그자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pp. 144-146.

갑산파 사건은 김일성 유일지도체계 및 수령제 확립의 결정적 계기이면서 후계자 김정일이 부상한 계기였다. 북한은 갑산파 사건 직후인 1967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최초로 채택하며 당의 조직사상적 통제를 강화했다.[117] 또한 1967년 《김일성저작선집》 출판, 1967년 5월 말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로의 개편, 1968년 《혁명전적지를 잘 꾸리자》 발표 등 다양한 김일성 혁명전통 절대화 작업을 진행했다. 북한은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 당시 조직지도부에 근무하던 김정일이며, 김정일에 의해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전환점으로 되었다."고 밝혔다.[118] 김일성 권력의 절대화, 우상화를 뒷받침하며 자연스럽게 후계자 김정일의 권력이 강화된 것이다.

갑산파 사건 이후 1969년 1월 일어난 김창봉·허봉학 사건은 김정일이 최초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시작한 계기였다. 북한은 빨치산계 군부 강경파인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이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개인영웅주의자" 행세를 한 "반당반혁명분자"였음을 밝히며, 1969년 1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들을 숙청했다. 북한은 이들이 "당에 사업보고도 잘하지 않고"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특공대 침투사건 등을 벌여 '좌경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119]

---

117) 설경화, "북한의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p. 63;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p. 154;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pp. 101-103.

118)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pp. 144-147.

119) 1960년대 '4대 군사로선' 채택 등 김일성의 지휘 아래 전 사회의 공세적 군사주의가 심화했으나, 1969년 북·중 관계 개선에 따라 군사주의는 완화되기 시작했다. 김창봉·허봉학 사건은 이들이 당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험주의를 펼쳤다기보다, 김일성에게 더 이상 공세적 군사주의가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 과도하게 성장한 군부를 숙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성주, "북한 '군사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pp. 170-171; 김창봉·허봉학 사건 관련 북한의 원전은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부장, 도당책임비서들 앞에서 한 연설(1969년 3월 3일)," 『김일성 저작집 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471-498;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북한은 김창봉·허봉학 사건을 계기로 1969년 군에 정치위원제를 도입하고, 주요 명령에 군 지휘관과 정치위원이 이중 서명하는 부서제도를 시행해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군 내 당적 통제의 핵심인 정치위원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는 당시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던 김정일이 이들을 조정·통제함을 의미했다. 김정일은 정치위원이 "부대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120] 또한 인민군 총정치국, 대대급 이상 부대에 정치부를 편성하여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중첩되도록 했다.[121]

1968년 이루어진 군 정치안전국(현재의 군 보위국) 신설에도 주목해야 한다. 1948년부터 내무부 예하 조직으로만 존재하던 정보기구가 1968년 조선인민군 내 정치안전국으로 독립한 것이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군 정치안전국의 독립은 기존 정치안전국이 1956년과 1968년의 군사쿠데타를 발각해 낸 공로와 관련된다고 한다.[122] 신설된 군 정치안전국은 김창봉·허봉학 사건을 계기로 군 내 반혁명·반국가 행위자 색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및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김정일은 1973년 7월 조직지도부장 겸 선전선동부장으로, 1973년 9월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로 임명됐으며, 1974년 2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추대됐다.[123] 당중앙위원회에서 후계자로 추대된 김정일은 당 직책 이외 군이나 국가기구 내 직책은 보유하지 않았다. 김정일의 고유한 권력 기반이 당 조직이었음을 뜻한다.

일군들과 한 담화(1969년 1월 19일)," 『김정일 선집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15-416.

120)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pp. 420-421; 김정일,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1972년 10월 17일)," 『김정일 선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63.

121)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p. 160-161.

122) 김일기·김호홍,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pp. 54-58.

123)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pp. 199-202.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된 후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하여 사상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여 당·군·정 내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1974년 2월 김정일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등을 발표하고 여러 강습회를 조직해 김일성에 대한 신념화 사업을 적극 전개했다.[124] 특히 1974년 4월 재작성되어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의 마지막 조항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밑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규정했다.[125]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일부분으로 후계자인 '당중앙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126]

사상 지도 권한이 김정일에게 주어졌고, 이는 간부 임명권과 검열권 강화로 이어졌다.[127] 당 조직비서인 김정일에게 집중된 간부 임명권과 검열권은 후계자 김정일이 당을 넘어 군과 국기기구를 장악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김정일의 군부 장악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도 1974년 이후부터였다. 1975년 1월 1일 김정일은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군에 '당중앙'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철, '당중앙'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했다.

> 인민군대안의 모든 간부들과 군인들은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야 하며 당중앙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중략)… 빠

---

124)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pp. 206-208;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p. 137-141.

125)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p. 117.

126)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p. 209.

127)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유일적지도체제에 어긋나는 비조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p. 117.

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규률이 전군을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128]

해당 담화 이후 군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 서약이 시작되었다. 1975년 『근로자』에는 2월 총정치국장 리용무가 군이 "당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 것을, 10월 총참모장 오진우가 군이 "당중앙이 내놓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고 서술했다.[129] 북한은 1977년 8월,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관리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모든 문제를 당에 보고하고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130] 당 직책을 가진 김정일이 군에 대한 '사상 지도권'을 행사하며 군을 장악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시기 김정일의 군 간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도 두드러진다. 북한은 1974년 4월 "인민군대간부사업에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진행하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1977년 6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실하게 받들어나갈 간부대렬"을 형성했다고 밝혔다.[131] 1970년대 이미 김정일을 중심으로 군부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특히 빨치산 소년대원 출신과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 '혁명 2세대'로서 약진했는데, 이는 1976년 김동규 부주석이 '김정일이 빨치산 출신들만 과도하게 중용한다'며 비판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132] 이때 등용된 혁명 2세대들은 후일 김정일의 공고한 승리 연합으로 자리 잡았다.

---

128) 김정일, "전군을 김일성주의화 하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5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1-9.

129) 리용무, "자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자," 『근로자』, 제2호(1975), p. 45; 오진우,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인 당이다," 『근로자』, 제10호(1975), pp. 30-31.

130)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pp. 215-218; 한은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 p. 405.

131) 한은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 p. 406;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 163;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서울: 천지미디어, 1997), pp. 163-164.

132) 설경화, "북한의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pp. 90-91;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 164.

197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은 당·군뿐만 아니라 국가기구도 직접 조정·통제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1975년 중반 이전까지 김정일은 정무원 업무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집중지도검열, 해당 조직기구 개편, 강습조직 등을 통해 1975년 중반 정권기관을 직접 관장하기 시작했다.”[133]

국가 부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1973년 5월 국가정치보위부(현 국가보위성)가 독립한 점이다. 국가정치보위부는 전 인민을 감시하는 비밀경찰 조직으로, 반(反)체제 요소를 색출 및 제거한다.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발표와 맞물린 국가정치보위부의 독립은 김일성 사상의 절대화를 위해 강압적 국가기구가 활용됐음을 뜻한다.[134] 특히 1987년 리진수 국가보위부장 사망 이후 2012년까지 약 25년간 국가보위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사실은 체제 보위를 위한 국가기구를 김일성, 김정일이 직접 관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35]

정리하면, 1974년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추대된 김정일은 당 조직 비서라는 직위와 주체사상에 대한 독점적 해석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간부 인사, 검열 등을 통한 당·정·군 내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했다. 1970년대까지 당 부문이 김정일 후계체제의 핵심 기반이었다. 김정일은 1970년대 별도의 군 직책을 수행하진 않았으나, 정치사상 및 간부 인사 측면에서 군을 장악해 가고 있었다.

2. 후계자 공식화 및 군권 우선 이양 시기(1980년-1993년)

1980년 10월 10일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대외에 후계자로 공식화되었다.[136] 김정일은 최초로 군사 기구인

133)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p. 167-175.

134)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pp. 175-176; 김일기·김호홍,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pp. 36-39.

135) 곽명일, 『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서울: 통일부, 2018), p. 21.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직책을 가지게 되었고, 당 기구 내에서도 핵심인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에 모두 선출되었다.

1982년 6월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김일성은 “김정일동지가 인민군대를 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도 직접 지도하여야 한다.”면서 김정일에게 “인민군대의 모든 군사사업을 집중”시키고 “전군에 김정일동지의 명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울 것”을 지시했다.[137] 일부 문헌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 언급했다고도 전한다. 김정일이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권한만 행사한 데서 나아가 군 지휘 권한인 ‘군령권’을 갖게 된 것이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인민군대 지휘간부들이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수위에 높이 모시고 끝까지 받들어나가겠다고 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오늘 회의에서 김정일동지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나의 연설내용에는 그가 최고사령관의 사업을 하게 된다는것이 다 밝혀져있다고 하시였다.[138]

김정일의 군령권 확립은 1980년 이루어진 당 규약 개정과도 일맥상통한다. 기존의 당 규약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군사력을 지도”한다고 규정했으나, 1980년 “군대를 지휘”하는 것으로 개정했다.[139] 1979년 김정일이 발기한 ‘오중흡 동지 따라배우기’ 운동도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140]

1980년을 전후한 김정일의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 임명, 당 규약 개정,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성심 강조 등은 1982년 김정일의 군령권 보유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군령권이 사실상 군 통수권의 영역

---

136)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pp. 229-231.

137)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p. 264.

138) 한은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 pp. 408-409.

139) “27.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조선로동당 규약』(1980).

140)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p. 334.

임을 고려할 때, 미래 김정일로의 군권 이양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추진되기 어렵다. 김정일에의 군령권 부여는 점진적 권력 이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후 김정일은 1984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 52돐 경축연회에서 인민군을 대상으로 연설하거나 1985년 4월 13일 조선인민군 지휘간부에게 군사칭호 및 훈장수여식을 주관하는 등 사실상 최고사령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했다.[141]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이라 평가될 만큼 후계자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당·정·군을 장악한다.[142] 1986년 5월 31일 김일성도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143]

1990년부터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공식 권력승계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이라 불렸던 만큼, 1990년대 공식 직책의 이양은 점진적인 정권 이양을 뜻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건 '최고사령관'의 이양이었다. 북한은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했다. 1982년 군령권을 부여한 지 9년 만이었다.

최고사령관은 군 부문에서의 최고 군권으로 그간 수령 김일성만이 역임했다. "원수 칭호는 군사칭호지만 최고사령관은 군사칭호가 아니라 군대의 수령이라는 뜻이니 이보다 더 높은 칭호는 없습니다."라는 황장엽의 증언은 '최고사령관'의 지위가 사실상 수령의 지위임을 보여준다.[144] 수령 김일성이 가지는 당·정·군 최고 직책 중 군사 직책을 최초로 김정일에게 이양함으로써 북한 권력승계

141) 김정일, "인민군대는 자기의 수령과 당, 자기의 제도와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창건 52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1984년 4월 25일)," 『김정일 선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7-49; 김정일, "인민군대를 무적의 대오로 더욱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지휘간부들에 대한 군사칭호 및 훈장수여식에서 한 연설(1985년 4월 13일)," 『김정일 선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170-172.

142) 조갑제,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황장엽 비록 공개』(서울: 월간조선사, 2001), p. 88.

143) "당의 위업을 옳게 계승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는것과 함께 그의 령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중략)…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였습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pp. 415-416.

144)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황장엽 회고록』(서울: 한울, 1999), p. 265.

가 공식 개시된 것이다. 김일성은 군권 이양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제는 팔십고령이므로 최고사령관으로서 밤을 지새우며 전군을 지휘하고 통솔하기 곤난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문의 역할을 할것입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갈것을 기대합니다.[145]

김일성은 고령의 나이를 직책 이양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군을 통솔하는 최고 권한의 이양은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이는 당위적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두 번째는 국가 부문 내 '국방위원장'의 이양이었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는 그동안 중앙인민위원회에 속해있던 국방위원회를 동격 기관으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일을 제1부위원장에 선출했다.[146] 김정일이 국가기구에서 최초로 가진 직책이었다. 이후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20년 만에 개정해 주석과 국방위원장이 분담하는 이원화된 국가지도체제를 구축했다.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2절 주석과 3절 국방위원회를 별도 규정했고, 주석의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최고사령관 겸임 조항'을 삭제해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주석이 '국가의' 일체 무력을 통솔한다고 규정해 국가 부문으로만 권한을 한정한 데 비해, 1992년 헌법에서는 '국가의' 문구가 삭제돼 국방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통솔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1992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가 '국가 주권'의 최고군사지

---

145) 김일성, "인민군대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한 연설(1991년 12월 25일)," 『김일성 저작집 4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61.

146) 정성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p. 33;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p. 231.

도기관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모호하게 규정해 그 권한이 국가 부문으로 한정되지 않은 것이다.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에 추대됐다. 최고사령관 직책 이양을 통해 군령권을 승계한 데 이어 국방위원장 직책 이양을 통해 군정권까지 승계한 것이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분을 가지고는 인민군대밖에 통솔할수 없다. 나라의 전반적혁명무력과 국방건설을 다 맡아 보려면 국방위원회 위원장사업까지 맡아보아야 한다. 이제는 김정일동지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사업을 맡아볼 때가 되였다. 나는 김정일동지에게 당과 국가, 군대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다 맡긴다.[147]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 직책을 넘기며 “당, 국가, 군대의 모든 사업을 다 맡겼다.”고 표현했다. 김정일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당 사업을, 1991년 최고사령관 직책을 통해 ‘군령권’을, 1993년 국방위원장 직책을 통해 ‘군정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국방·군사 분야를 김정일에게 우선 이양한 데 비해, 사망 전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가 주석직 등 당과 국가 부문 내 ‘수령의 지위’는 이양하지 않았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군권 우선 이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권력 이양 완료 시기(1994년-1998년)

1994년 7월 8일,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7월 25일을 약 2주 앞두고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1994년 7월 9일 조선중앙TV는 특별보도를 통해 김일성이 7월 8일 새벽 2시에 사망했음을 알렸다.[148] 7월 19일 영결

147)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pp. 236-237.
148) 『조선중앙TV』, 1994년 7월 9일.

식과 20일 중앙추도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10일이었던 애도 기간은 이틀 연장된 후 다시 100일 연장되었고, 최종적으로 3년간의 유훈통치로 이어졌다.[149]

유훈통치 기간 후계자 김정일은 김일성의 직책을 이양받지 않은 채 '수령영생주의'를 펼쳤다. 김일성의 시신을 보존하고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 연호와 김일성 생일의 '태양절' 제정 등 시간을 초월해 수령 김일성의 모습을 보존해 수령의 업적과 카리스마를 존속시켰다.[150] 김일성이 남긴 1994년 4월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을 잘 받들데 대한 교시', 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선포한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와 '3년간의 경제 완충기' 등이 유훈으로 강조됐다.[151]

1997년 7월 8일 북한은 김일성 3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3년상(喪)의 종료를 선언하며 '김정일 중심의 영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152] 1997년 10월 9일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특별보도 형태로 김정일의 당 총비서 추대를 발표했다. 1997년 10월부터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도·직할시 대표회 등 각종 당 조직에서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 결과였다.[153]

---

149)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애도기간을 100일이나 1년, 3년으로 하였습니다.…(중략)… 수령님의 령구앞에서 인민들이 목 놓아 울던 비분이 아직도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당과 국가 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고 만세를 부르는것은 전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4년 10월 16일)," 『김정일 선집 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128-129.

150) 김윤희,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 김일성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유훈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6권 2호(2016), pp. 219-229.

151) "수령님께서는 4월 25일에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는데 그 교시가 인민군대에 주신 수령님의 마지막 유훈입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을 잘 받들데 대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습니다.…(중략)… 수령님께서는 경제문제때문에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심려하시다가 돌아가시였는데 어떻게 하나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pp. 422-436.

15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추모대회에 참석하시였다," 『로동신문』, 1997년 7월 9일.

15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 『로동신문』, 1997년 10월 9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총비서로 추대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

김일성 사망 3년 만에 김정일로의 '당권 이양'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당 규약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를 선출해야 하나, 김정일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추대'라는 임의 절차를 거쳤다. 명칭도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에서 '당 총비서'로 변경됐다. 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에 구속되지 않고 전당을 영도하는 위상과 역할을 의미하며, 김정일의 변화된 위상에 따라 선거 등 제도적 절차가 아닌 추대와 같은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154]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 명명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국방위원장은 국가 최고 수위가 됐다. 정무원을 폐지하는 대신 내각과 내각 총리를 신설했다.[155]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국가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올랐다. 1980년 이후 재정비되지 않은 당 조직과 달리, 국방위원회 구성원이 새로 확충되었다.

다만, 1998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은 이전 헌법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이 1998년 국방위원회를 새로운 국가기구체계가 확립된 것처럼 대외 발표한 이유는 '새로운 주석'으로서 김정일을 재추대한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156]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4년 2개월 만인 1998년 완료됐다. 후임자 김정일이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에 등극하고 새로운 국가전략인 '강성대국론'을 표명하며 김정일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부터 1997년의 기간은 군권만을 우선 이양받은 김정일이 당·정

은 의사와 념원의 반영 조선로동당 강원도, 량강도, 남포시, 개성시 대표회 진행," 『로동신문』, 1997년 10월 4일.

154) 김갑식 외,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33-34.

155) "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중략)… 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

156)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pp. 231-253.

부문에서의 최고 수위를 이양받기 위한 권력승계의 마무리 과정이었다.

제2절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

본 절에서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군권이 우선 이양된 원인을 '안정적 당권 승계를 위한 필요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2장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물리적 정권 보위 필요성'과 '안보 위협을 이용한 정당성 강화 필요성'으로 나눈다.

1.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물리적 정권 보위

김정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의 원인은 김정일로 최고사령관 직책이 이양된 1991년 이전의 상황에서 찾아야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와 북한의 경제난은 급격한 정세 변화였다. 미소 군비경쟁 및 중국과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1989년부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198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공산당의 정치가 종식되었고, 루마니아에서는 유혈사태로 독재자 차우셰스쿠(Nicolae Ceausescu)가 축출되었다. 1990년에는 통일 독일이 출현했다. 1990년 한·소 및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그리고 1982년부터 시작된 북핵 위기는 북한을 정치·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157] 당대 발표된 김일성, 김정일의 주요 담화와 발언을 통해 북한에서도 당시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국주의자들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을 기회로 하여 공격의 화살을 우리 나라에 집중하면서 간섭과 파괴 책동을 끊임없이 벌렸습니

157) 김성주, "북한 '군사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p. 238;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로버트 칼린(Robert Carlin), *The Two Koreas*, 이종길·양은미 역, 『두 개의 한국』(고양: 길산, 2002), p. 379.

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만전쟁이후 최대의 위협은 조선반도라고 하면서 핵사찰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핵개발저지를 위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려고 미쳐날뛰였습니다.[158]

사회주의권 붕괴는 정치적·외교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북한에 타격을 주었다. 북한은 1980년에 제시한 10대 전망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1987년 제3차 7개년 계획을 세웠다.[159]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준비하던 1980년대 후반은 정치·경제·외교 등 총체적 안보 위기인 '고난의 행군'의 서막이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군에 대한 인식은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조정됐다. 1980년대까지의 담화와 발언은 조선인민군에 '미제국주의자들의 도발책동'에 대한 대비, '국방사업 강화발전' 등 대외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다.[160] 하지만 1990년대부터 군의 '당에 대한 옹호보위' 역할이 강조됐다. 특히 김정일에게 최고사령관을 이양한 다음 날인 1991년 12월 25일 김일성은 최초로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열고 군 내 정치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장의 중요한 과업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강화하는것이라면 중대정치지도원의 중요한 과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중략)…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적이행》 전략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길로 되돌려세우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중략)… 중대정치지도원들은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이 우리 조국을 보위하고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일당백의 위력

158)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41.

159)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p. 42.

160) 김일성,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 조선인민군창건 50돐경축연회에서 한 연설(1982년 4월 25일)," 『김일성 저작선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71-72;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pp. 397-399.

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161]

1991년 김정일은 '당'을 지키기 위한 '군권 장악'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당'이 '군'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연설 내용은 역설적으로 '당'이 '군'과 분리되는 상황을 우려했음을 시사한다.

> 당이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며, 혁명을 령도해나갈 수 없습니다. 군대를 틀어쥔 당만이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혁명을 령도하는 당은 군대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는 당권이자 군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당과 군대를 틀어쥐고 혁명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당과 군대의 인민의 운명이며 생명입니다.[162]

90년대부터 '당이 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등장한 이유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을 '군의 낮은 정치화'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군이 사명감을 잃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사회주의가 붕괴했다는 것이다.

> 챠우쉐쓰꾸대통령은 다음날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보위상 밀레아에게 반란진압을 명령했다. 그러나 군부는 불복종하였다. 군인들속에서 동요가 일어 났다.…(중략)… 쏘련방에서도 군대가 1991년 8월사변 당시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징벌을 가할데 관한 쏘련방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사회주의배신자 옐찐의 반혁명의 도구로 전락되여 사회주의붕괴를 촉진시켰다.…(중략)… 이 나라들에서 군부가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총소리를 울리였다면 사태는 달리 되였을것이다.[163]

---

161) 김일성, "인민군대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pp. 264-265.

162)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91년 1월 5일)," 『김정일 선집 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4.

163)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p. 2-3.

> 쏘련에서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인 고르바쵸브가 '군사정치기관에 관한 총칙을 비준함에 관하여'라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허물어 버리기 위한 그의 책동의 일환으로서 이에 따라 쏘련군대 총정치국은 대통령행정직속기구로 되여 군대내 당조직은 정치사업을 지도하지 않고 한갓 군인들의 문화오락이나 조직하고 시사보도나 알려주는 허수아비기구로 전락되였다. 공산당이 군대와 분리하게 되자 혁명의 원쑤들은 더욱 머리를 쳐들고 당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섰으며 당이 자기의 군사적지반을 잃고 무력해짐에 따라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는 극도로 약화되였고 종당에는 당도 사회주의정권도 사회주의제도도 모두 붕괴되고 말았다.[164]

결국 사회주의권 붕괴가 북한으로 파급되지 않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이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은 '정치사상적으로 강력히 무장'된 군의 필요성이었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이 발생했을 때 군이 물리력을 동원해 당의 입장에서 이들을 처단할 수 있어야 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때 북한이 김정일에게 최고사령관을 우선 이양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일'을 중심으로 군의 정치사상적 무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은 '후계 정권의 당권 수호'를 위한 사전 조치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성심을 조기에 극대화해 김일성 사망 시 당권을 승계하는 데 안정성을 담보한 것이다.[165]

김정일은 1980년대 이미 군에 대한 지도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를 항일빨치산 계 중심으로 개편하며 군부에 대한 장악을 완료한 상태였다. 김정일은 군뿐만 아니라 당·정 모든 분야에서 '당 중앙'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확립했다. 하지만 최고사령관 이양 이전 김정일의 군 부문에서의 공식 직책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뿐이었다. 김일성 유고 시 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

164) 리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p. 11.

165) "김일성은 이러한 동구사태의 영향이 북한에 파급되는 것을 두려워 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가급적 빨리 김정일에게 군권을 넘겨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 pp. 208-212; 이찬행, 『김정일』(서울: 백산서당, 2001), p. 662.

따라서 1991년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와 1992년 국방위원장 임명은 급변 사태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후계자 김정일 개인이 '군부를 틀어쥐고' 있는 것이 '유사시 군의 물리적 정권 보위 역할'을 안정적으로 담보하리라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군권 우선 이양'이 안정적 당권 승계의 필수조건이라 인식한 것이다.

다만, 김정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이 이뤄진 1990년대 초반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이전이며 재해·재난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군권 우선 이양이 '선군정치'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일부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1998년부터 선군정치가 등장했음을 고려하면,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군을 활용한 정권 위기 극복 과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3절 군권 우선 이양의 결과 부분에서 다룬다.

2. 안보 위협을 이용한 체제 수호 및 정당성 강화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고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의 완전한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다.[166] 하지만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론을 제시하며 붕괴된 사회주의로부터 북한을 차별화했다. 김정일이 1989년 12월 28일 '우리식 사회주의'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김일성도 1990년 신년사에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이후 1990년 12월 김정일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와 달리 "필승불패"라 주장했다.[167]

---

166)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1986년 12월 30일)," 『김일성 저작선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73.

167) 김정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90년 12월 27일)," 『김정일 선집 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08; 고유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론" 비교사회주의적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당의 절대 령도'와 '다원주의에 대한 반대'를 합리화한 것이다. 김정일은 "참다운 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되고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라 주장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다원주의가 허용될 수 없"다며 '비사회주의'를 배척했다.[168]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를 '반제국주의 압살 책동'에 의해 촉발된 사태로 규정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사를 가르는 문제'로 정의했다.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란 대중가요 "사회주의 지키세"의 가사와 같이, 국제정치적 상황을 생존에의 위협으로 규정했다.[169] 사회주의권 붕괴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체제 수호를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은 애국, 충성을 강요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의 복종을 끌어내고 결과적으론 최고지도자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담론이었다.[170]

이때 최고사령관으로 등장한 김정일은 자연스럽게 '체제 수호자'로서 정당성을 얻고 정치적 행보를 감행할 수 있었다. 김정일은 북한 내부의 '반혁명세력'이 제국주의자와 결탁한 것을 사회주의 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며 '내부의 적'을 상정하고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담론을 전개했다.

접근 1: 사회주의의 위기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1995), pp. 40-42.

168)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1년 5월 5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51;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1월 3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34, 456;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1990년 10월 3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13.

169) 김정일,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11월 14일)," 『김정일 선집 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37-238.

170) 김영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 권위 추구형 핵·경제 병진노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권 2호(2017), p. 213.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우경기회주의사상의 부식작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작용을 한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이다.…(중략)…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공산주의운동에서 일어난 사상적혼란과 우여곡절은 다 그 상층에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타난것과 관련되여있다.[171]

위의 글이 발표된 직후 북한이 보인 일련의 군사주의화 행보는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안보 위기를 활용하거나 오히려 위기를 스스로 조성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의 수준을 높이고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을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김정일은 1993년 3월 9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Team Spirit)의 재개를 "침략적 예비 전쟁"이자 "핵시험 전쟁"이라고 비난하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북한이 최초로 공개 선포한 '군뿐만이 아닌 민간까지 대상으로 하는 준전시상태'였다. 3월 12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탈퇴를 선언했다.[172]

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우리 나라에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전국, 전민, 전군이 1993년 3월 9일부 준전시상태로 넘어갈것.

2.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부대들과 조선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은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원쑤들이 언제 어느때 덤벼들어도 일격에 소멸할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것.

3.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한손에는 마치와 낫,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

171)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1993년 3월 1일)," 『김정일 선집 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51.

172) 오버도퍼·칼린, 『두 개의 한국』, pp. 421-422.

을 일으킬것.[173]

직후인 1993년 4월 북한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0년 복무연한제'를 실시했고,[174] '비사회주의 행태' 단속을 위한 '109상무 그루빠' 조직 등 사회적 통제 수준을 격상했다.[175] 5월 29일 미사일 '로동 1호'를 시험발사 하기도 했다.[176]

당시 김정일이 북한 내부에서 안보 위협을 부각한 것과 달리, 오버도퍼(Don Oberdorfer)와 칼린(Robert Carlin)에 따르면 1993년 5월 초 북한은 미측에 북핵 문제를 위한 '협상 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했다. 이는 6월 북·미 제1단계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다.[177] 북한의 상반된 행보는 김정일이 '체제 위협'을 부각하며 사회 전체를 군사주의화한 일련의 조치들이 실제 위협에 대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정당성 강화란 정치적 의도를 포함했음을 시사한다.

1993년 4월 김정일로의 국방위원장 이양은 후계자 김정일이 군사주의화 행보를 취하는 데 있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199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고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178] 최고사령관이 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령권을 가진다면, 국방위원장은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원령, 국방사업 관리 등 군정권을 가지는 것이다.

김일성 시기부터 '군사주의화'를 주요 정치 수단으로 삼아 온 북한에서 '국방위원장' 직책의 이양은 후계자 김정일에게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안보 위협을 부각하고 이에 대응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차기 최고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승계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

173) 탁성일, 『선군-김정일 정치』(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pp. 121-122.

174) 통일교육원, 『2021 북한의 이해』(서울: 통일교육원, 2021), p. 141.

175) 배진,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3), pp. 132-133.

176) "국방부, 북한 노동1호 시험사격 성공 확인," 『연합뉴스』(인터넷판), 1993년 6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19930624001700004(검색일: 2024년 5월 15일).

177) 오버도퍼·칼린, 『두 개의 한국』, pp. 426-430.

1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

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은 물리력 현시를 통한 정권 보위 의도뿐만 아니라, 안보 위협을 이용하여 차기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도도 포함했다.

제3절 군권 우선 이양의 영향

1. 군부 승리 연합 구축 및 고난의 행군 시기 극복

가. 군부 승리 연합 구축 및 군 길들이기

김정일은 1991년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군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군을 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대응해 군에 체제 보위 역할을 요구하면서, 군부를 달래기 위한 군 우대 정책을 펼친 것이다. 김정일의 1992년 2월 4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는 김정일의 군 우대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김정일은 “정권은 무력에 의하여 보위됩니다.”, “당도 군대가 있어야 보위되고 강화발전될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군을 우대하는 사회적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항일빨치산의 혁명 전통을 강조하고 ‘로병종대’, ‘만경대혁명학원종대’를 1992년 열병식 대열의 가장 앞에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역군인은 만경대혁명학원종대 다음 순서였다. 혁명 전통의 정당성과 군 원로에 대한 예우를 내세움으로써 군을 중시하는 정치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김정일은 인민이 “군대를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 기풍의 확립을 강조했다. “군대는 인민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으며 인민은 군대를 떠나서 자기의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며 ‘군민일치’를 강조하면서도, ‘인민’이 ‘군대’를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며 군을 우대했다. 특히 김정일은 “무엇이 하나 생겨도 군대에 먼저 주고싶습니다.”, “인민군군인들에게 털외투를 만들어주는것은 좋은 일

인것만큼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이 다 나서서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등 군에의 ‘우선적인 자원 배분’을 장려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은 “나는 매일아침 신문 《조선인민군》을 본 다음 《로동신문》을 보군 합니다.”라며 ‘당’보다 ‘군’의 정치사상을 높게 평가하고 다른 부문도 ‘군’처럼 “최고사령관의 사상으로 일색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사회안전부’에 《조선인민군》을 보내주라고 지시함으로써 군을 ‘정치사상적 모범’으로 상정했다.[179] 김정일은 군에 높은 수준의 정치사상적 무장을 요구한 만큼 군을 중시하고 우대하는 ‘군권의 순응적 기제’를 활용한 것이다.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발표된 다수의 군 인사 명령은 ‘군권의 순응적 기제’를 활용한 김정일 군부 승리 연합의 구축을 의미했다. 김정일은 1992년 4월 23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0024호를 통해 총 664명을 진급시켰고, 1993년 7월 19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0040호를 통해 총 98명을 진급시켰다. 특히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가장 처음 이루어진 1992년 4월 23일 인사는 인민군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장령급 인사였다.[180] 같은 시기 당·정 인사가 결원을 보충하거나 문책하는 등 예외적 사유로만 이루어진 것[181]과 비교할 때, 대규모 군부 인사는 군부 포섭 및 김정일 시대 엘리트 등용이란 정치적 의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규모 인사는 김정일 후계 정권을 위한 군 지도부 재편의 신호탄이었다. 대표적으로 1992년 군부 인사를 통해 조명록, 김영춘 등이 상장에서 대장으로, 현철해가 중장에서 상장으로 진급했다.[182] 이들은 1995년 10월 8일 당 창건 50주년 계기 인사 개편에서 군부 핵심 요직에 진출했다.

---

179) 김정일,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2월 4일),” 『김정일 선집 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1-9.

180) 정성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pp. 34-42.

181) 이동찬,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비교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2020), p. 82.

18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24호 조선인민군 장령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2년 4월 24일.

조명록은 김정일 시대 제1대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되어 2010년 11월 7일 사망 시까지 직책을 종신 유지했으며, 1998년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조명록은 주석단 서열, 현지 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김정일 시대 인민무력부장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183]

같은 날 김영춘은 총참모장으로 임명되어 2007년까지 직을 수행했고, 현철해는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으로 임명됐다. 1995년 10월 이후 군 지도부는 혁명원로인 최광 인민무력부장과 김영춘 총참모장, 조명록 총정치국장, 리하일 당 군사부장 등 3명의 차수로 재편됐다.[184] 1992년과 1993년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통해 김정일에게 충성도 높은 장성들이 진급했고, 이들이 김정일 정권 극초기인 1995년 10월 지도부를 구성해 군부 승리 연합이 구축된 것이다.

대규모 군 진급 인사가 군부에 대한 포섭 수단이었다면, 1992년부터 이루어진 군부 숙청은 탄압 수단이었다. 인민군 보위국장 원응희에 의해 주도된 '프룬제 아카데미 사건'은 1986년 이후 구소련 군사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군관, 장령 및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 무관 요원 등을 대규모 숙청한 사건이다. 1994년 한 해 동안 600여 명의 군 간부가 반당·반혁명분자로 색출되어 전역했다. 반체제 인사 색출을 명분으로 김정일의 막강한 권력을 현시한 계기였다.[185]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지위를 통해 군 우대 정책을 펼치고 군부 인사를 단행하는 등 '군권의 순응적 기제'를 활용했다. 또한 숙청과 같은 '강압적 기제'를 활용해 강력한 군권을 현시했다. 그 결과,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군을

---

183) 이동찬,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비교 연구," pp. 62-65; 함택영,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딜레마," 장달중 엮음, 『현대 북한학 강의』(서울: 사회평론, 2013), p. 194.

184) 이동찬,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비교 연구," pp. 80-83.

185) 프룬제 아카데미 사건은 1992년 말부터 1993년 초 구소련 프룬제 군사대학 출신 장교 11명의 쿠데타 기도가 발각돼 소련 유학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손광주에 따르면, 실제 쿠데타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소련 정보기구(KGB)에 포섭된 북한 군관 명부가 소련 붕괴로 인해 북측에 누설되자, 이를 빌미로 소련 유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였다고 한다.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의 모든 것』(서울: 바다출판사, 2004), pp. 235-237.

장악했고, 김일성 사망 후에는 군부 승리 연합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나. 고난의 행군 시기 안보 위협 상정 및 군 동원

북한의 경제는 김일성 사망 직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1990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1994년부터 급락했다.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994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5%나 감소했다. 1995년 자연재해까지 겹쳐,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한 국가 예산 규모는 1994년 414억 원에서 1995년 242억 원으로 1년 만에 60% 수준으로 감소했다. 식량 배급도 1992년부터 불안정해지기 시작해 1995년 사실상 중단됐다. 1995년부터 1998년간 최소 20만 명에서 최대 350만 명이 아사(餓死)한 것으로 추정된다.[186]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1994년 11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통해 "나의 사상은 붉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 등 '붉은기'를 강조했다. 붉은기는 북한의 '적기가(赤旗歌)'에 등장하는 상징물로, 항일무장투쟁 시기 김일성이 '고난의 행군'을 하며 "비겁한자여 갈테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가사를 부른 데서 유래한다.[187]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을 1938년 김일성 항일빨치산 부대의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비유한 것이다. 북한은 199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으로 규정했다.

> 당과 혁명 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중략)… 《고난의 행군》정신은 제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며 아무리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패배주의와 동요를 모르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락관주의정신

186) 신석호,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pp. 99-103.

187)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8-23.

이며 그 어떤 안락도 바람이 없이 간고분투해 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이 정신이 맥박치는곳에 혁명의 붉은기가 높이 휘날리고 사회주의 승리의 만세 함성이 힘차게 울리게 된다.[188]

'붉은기'와 '고난의 행군' 담론은 당시 북한이 위기의 원인을 외부의 '압살 책동'으로 돌리고 체제생존을 위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제창했음을 보여준다. 인민들에게는 '사상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쏘련이 붕괴되고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된것도 그 나라들이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은것과 관련된다.…(중략)…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고 내버려둔데다가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침투되다보니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해이되여 날라리를 부리면서 돈과 별장, 자가용승용차를 얻는데만 신경을 쓰게 되였다.[189]

북한은 '고난의 행군' 극복을 위해 경제적 체질 개선이나 개혁·개방이 아닌 인민의 희생과 사상 및 사회적 통제의 강화를 선택했다. 외부의 안보 위협으로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실정을 가리고, 북한 체제와 새로운 최고지도자 김정일의 정당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다.[190]

김정일은 군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도 강화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첫 새해를 맞이한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은 신년 첫 현지 지도로 다박솔 중대를 찾아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당 일군들에게는 인민군이 곧 '위기 극복의 돌파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성과 '결사관철'을 강조하며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

188)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

189) 고정웅,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 투쟁경험』, pp. 50-51.

190)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2005), pp. 12-16.

나는 지금에 와서 수령님께서 생전에 왜 나에게 군권부터 넘겨주시였는가 하는 숭고한 의도를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당과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무적필승의 강철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을것이며 강력한 총대로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갈것입니다.[19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복직후 강선제강소에 대한 현지지도로부터 건국사업을 시작하시였으며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때에도 강선제강소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돌파구를 열어나가시였습니다. 나는 새로운 진군의 해에 들어서면서 인민군군부대에 대한 현지지도로부터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192]

나는 언제나 총과 숨결을 같이하고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하여도 총만은 자기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에 대한 나의 지론이고 총관입니다.[193]

김정일에게 군은 사회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동원 대상이기도 했다. 특히 당과 정의 최고 직책을 아직 물려받지 않았던 김정일은 최고사령관의 직책을 적극 활용했다. 김정일은 1994년 11월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를 통해 인민무력부와 정무원에 평양시 다리와 터널 공사를 지시했다.[194] 최고사령관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직책임을 고려 시, 국가 부문에 속한 인민무력부와 정무원에 대한

191) 김정일,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1995년 1월 1일),”『김정일 선집 18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 177.

192) 김정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5년 1월 1일),”『김정일 선집 18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p. 170-171.

193) 리영철,『시대와 사상』(평양: 평양출판사, 2011), p. 171.

19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 평양시에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을 건설할데 대하여,”『민주조선』, 1994년 11월 10일.

지시는 적절치 않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전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장 직책 외에는 여타 공식 직책을 이양받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이후 전개될 선군정치의 맹아로 볼 수 있다.

군을 대상으로 한 '충성심'에 대한 강조는 1996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발전했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당이 맡겨준 과업은 어김없이 수행하는 절대성", "영웅적 투쟁정신"으로 "가장 철저한 수령결사옹위정신"를 뜻했다.[195] 군을 사회의 모범 정형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군에 높은 수준의 충성도와 사회적 역할을 부여했다.[196] '군권의 순응적 기제'를 사실상 강압의 기제로 활용한 것이다.

군부 동원도 더욱 본격화됐다. 군은 고난의 행군 시기 전국 협동농장의 생산량 증대에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1995년 11월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 공사, 1997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전력생산량 증대, 1998년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탄량 증대 및 탄선 철도화 등 대규모 경제건설 사업에 전방위적으로 동원됐다.[197] 김정일은 이후 회고를 통해 인민군 공병부대가 가장 어려운 때 힘을 준 부대라고 밝히기도 했다.

> 나는 군령도의 첫 시기부터 공병부대사업전반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면서 공병부대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맨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공병부대는 그 어느 단위보다 당의 지도를 많이 받는 자랑스러운 부대이며 당의 명령, 지시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어김없이 철저히 집행하는 믿음직하고 전투력이 강한 부대입니다. 공병부대는 가장 어려운 때 나에게 힘을 준 잊을수 없는 부대입니다.[198]

---

195) "모두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로동신문』, 1996년 10월 18일; "혁명적 군인정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정신적원천,"『로동신문』, 1997년 3월 15일.

196)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pp. 17-19.

197) 김진환,『북한사회 변화에 따른 지배이데올로기 변화: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약화와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 등장』(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19), p. 21.

198) 김정일, "공병부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에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야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공병부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1년 11월 4일),"『김정일 선집 25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

김정일은 인민군에 '결사관철'을 강조하고 이들을 동원하면서도, 군을 우대하고 군부 승리 연합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충성심을 관리했다. 1990년대 중후반 군부의 외화벌이 사업은 자체 예산 충족 및 식량문제 해결 등을 명분 삼아 급격히 증가했다. 군부는 특정 무역 품목과 액수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부여하는 '와크'를 김정일의 후원 아래 비교적 대량 확보했고, 수출 원천 확보와 운송에서도 강점을 보유했다. 1996년경에는 군 내 주요 기관별 무역회사를 별도 보유할 정도로 군부 외화벌이 사업이 확대됐다.[199]

또한 군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 1995년 10월 당 창건 5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일부 군 원로 차수들의 서열이 당 비서보다 앞섰다. 주석단 내 군 비율은 김일성 사망 전인 1994년 초 약 10% 수준에서 1995년 10월 약 30%로 급증했다.[200] 군이 우대되고 중시됨에 따라 군의 상징적 지위도 격상된 것이다.

1995년부터 김정일의 공개 활동에서 군 관련 활동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김정일이 위기 극복의 주요 수단으로 '군'을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1995년에서 1999년간 김정일의 공개 활동 중 군 관련 활동은 50% 이상을 차지했다.[201]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악화한 대내외 상황에서 '군권을 틀어쥐고' 승계 정권을 수호했다. 김정일로 '우선 이양되었던 군권'은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에게 정권의 위기를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고 군부에 '결사관철'을 강조할 '권위'와 이들을 동원할 '권력'을 부여했다.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성심' 강조 및 '군부 승리 연합에의 보상 제공'은 김정일이 군을 활용하는 데 있어 '군권의 순응적 기제'가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김정일은 정권 초기 우선 이양받은 군권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476.

199)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2011), pp. 227-228.

200)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p. 75.

201)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p. 127.

2. 군사주의화와 선군정치의 발전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1995년 1월 1일 시작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1995년 문헌은 오히려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을 당의 영도 붕괴로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당의 영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 1990년 3월 제3차 쏘련인민대의원 비상대회에서는 대통령제를 도입하며 쏘련공산당이 쏘련《사회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라고 규정한 쏘련헌법 제6조를 폐지하였다.…(중략)…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현대수정주의자들과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의 책동의 반동적본질을 리론적으로 폭로비판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의 령도의 필연성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다.》[202]

하지만 군을 대상으로 한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성심 강조 및 경제건설에의 군부 동원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이는 1996년부터 전 인민에 대한 '혁명적 군인정신 따라배우기'로 발전했다.[203] '군을 통한 사회주의 고수'를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온 사회의 군사화, 전 인민의 군인화'를 의미했다.

반대로 '경제일군'에게는 질책이 가해졌다. 김정일은 '본인은 당과 군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관료들에게 전가했다.

> 나는 당사업도 보고 군대사업도 보아야 하기때문에 경제관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일일이 다 보아 줄수 없습니다. 경제사업은 경제일군들이 맡아 하여야 합니다.[204]

---

202) 고정웅,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 투쟁경험』, pp. 150-151.

203) "모두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로동신문』, 1996년 10월 18일.

204)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6년 4월 22일)," 『김정일 선집 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60.

내가 혼자서 당과 군대를 비롯한 중요부문을 틀어쥐어야지 경제실무사업까지 맡아보면 혁명과 건설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미칠 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나에게 절대로 경제사업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경제사업에 말려들면 당 사업도 못하고 군대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여러번 당부했다.[205]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위기는 김정일이 당 기능을 활성화하지 못한 주요 원인일 수 있다. 당대회는 1980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으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993년 12월까지 개최되었다. 1993년 마지막 전원회의 의제는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에 대한 총화였다.[206] 당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경제로 인한 비판의 공간을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수 있다.

사회 전체에 강조되던 '혁명적 군인정신'은 1997년부터 '선군후로, 군민일치'로 발전했다.[207] 군을 따라 배우는 데서 더 나아가 군민일치를 통한 전 사회의 군사주의화가 심화했다. 군에 대한 동원도 '군사선행'의 원칙으로 구현됐다. '군사' 부문을 앞세워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 등 사회 전 부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 아래 군이 경제건설에 집중적으로 동원됐다.[208] 국가자원 또한 군사·국방 분야에 우선 배분됐다. 아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외부 위협'을 강조하며 국방을 위한 인민의 희생이 정당화된 것이다.

지금 인민군대에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중략)… 아

---

205)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연설(1996년 12월),"; 여기서는 "월간조선 긴급입수자료: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연설,"『월간조선』, 1997년 4월호, pp. 307-308에서 재인용.

206)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p. 183.

207) "군사중시! 선군후로!…(중략)…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이런 독창적인 사상, 전략적인 로선이 아니였더라면 우리는 걸음마다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승리의 만세소리를 높이 올릴 수 없었을것이다." "성스러운 3년,"『로동신문』, 1997년 7월 2일.

208) "군사선행의 원칙은 비단 군사력강화만이 아니라 정치사상적위력, 경제력, 과학기술적위력 등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국력을 강화할수 있게 하는 혁명의 원칙이다.…(중략)… 군사에 힘을 넣으면 경제발전이 저애를 받는다는 견해는 일면적이고 피상적이라고 할수 있다." 탁성일,『선군-김정일 정치』, pp. 72-73.

마 우리에게 군량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 미제국주의자들이 당장 쳐들어올 것입니다.[209]

지금의 정세에서는 우리에게 사탕보다도 총알이 더 필요합니다. 사탕은 먹지 않아도 살수 있지만 총알이 없으면 사회주의를 지켜 낼수 없고 살아 나갈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210]

경제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추설수 있지만 군사가 주저앉으면 나라의 백년대계의 기틀이 허물어지게 된다.[211]

1997년 유훈통치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고난의 행군 최후돌격전',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등 위기의 끝단이라는 내용이 강조됐다.[212] 승계 정권의 공식 시작을 고난의 행군과 분리해 정당성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1997년 시작된 '심화조 사건'도 서관히 당 농업비서 등 경제관리를 숙청함으로써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청산한 것이었다.[213] 김정일은 '군권'을 활용해 고난의 행군 시기를

---

209)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월간조선 긴급입수자료: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연설,"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pp. 307-308에서 재인용.

210) 김정일,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98년 1월 16~21일, 6월 1일, 10월 20일, 22일)," 『김정일 선집 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00.

211)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212) 김정일, "고난의 행군 최후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7년 6월 21일)", 『김정일 선집 19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147-157; 김정일,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98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9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230-242.

213) 심화조 사건은 1997년 실시된 주민재등록사업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의 6·25전쟁 당시 행적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사회안전부가 주민 전체의 행적을 조사하게 된 사건으로, 일부 고위급 간부들이 간첩죄로 숙청되었다. "서관히는 미국의 고용간첩으로 30년간 암약했으며 당의 농업정책을 말아먹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했다. 토양에 맞지 않은 종자와 농약을 사용하게 했고 과일나무 가지를 자르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르게 해 과일이 열

버텼고, 그 결과 1997년 10월 당 총비서에 취임해 당권을 승계했다.

1998년 9월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됐고,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1980년 이후 재정비되지 않은 당 조직과 달리, 국방위원회 구성원은 새로 확충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에 맞춰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과 사상도 등장했다. 1998년 5월 '선군정치'란 용어가 최초 등장했고, 1998년 8월에는 '강성대국론'을 발표하며, 그 신호탄으로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 1999년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공표됐다.[214]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로 정의했다.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군대'를 "혁명의 제1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운다.[215] 1995년에서 1997년간 김정일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시행한 군의 역할 확대와 '선군후로'와 같은 군사적 규범의 확산 등이 '군을 내세우는 정치'로 전면화, 공식화된 것이다. 2000년 신년공동사설은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하며 '강성대국' 목표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216] 국가기구의 정비와 새로운 국가 목표의 제시는 김정일 승계 정권의 안정화를 뜻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자연재해로 인해 김일성 사망 직후 최악의 정권 위기에 직면했으나, '우선 이양받은 군권'을 활용해 이를 극복했다. 군부에

리지 않게 했다." 김명희, "북녘추억④-'기아 책임' 뒤집어쓰고 죽은 농업 담당 비서," 『조선일보』(인터넷판), 2004년 6월 2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4/06/02/2004060270059.html(검색일: 2024년 5월 20일).

214) "군민일치로 승리하자," 『로동신문』, 1998년 5월 26일;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215)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 27.

216)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여러해째 계속된 어려운 행군을 구보행군으로 전환시켜놓았다.…(중략)… 새해 주체89(2000)년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해나가는 총진격의 해이다.…(중략)… 우리는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올해 총진군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0년 1월 1일.

충성심을 강조함으로써 군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를 강화했고 군부를 대규모 건설 사업에 전방위적으로 동원했다. 군부 승리 연합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충성심을 유지했다. 인민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 따라배우기, 선군후로' 등 군사적 규범을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인민의 희생은 정당화되었다. 최악의 위기 상황을 안보 문제로 규정해 승계 정권의 정당성 훼손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당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제4장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와 군권 우선 이양

제1절 권력승계 준비와 군권 우선 이양

1. 후계자 추대 시기(-2009년)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가시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시까지 3년 만에,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더라도 약 5년에서 9년 만에 이뤄졌다. 김정일이 1964년 당 사업을 시작하여 약 30년 후 1990년대 권력을 승계받은 것과 비교하면, 권력승계가 매우 압축적으로 이뤄졌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002년 김정은 생모인 '고영희'에 대한 우상화 작업, 2005년 이후 '선군혁명 계승'에 대한 북한 매체의 언급은 일부 후계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됐음을 의미한다.[217] 하지만 해당 시기 외부에서 감지할 만한 후계작업은 없었다.

> 혁명위업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것은 혁명의 대가 바뀔 때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혁명위업계승기에 총대가 흔들리면 혁명전통부터 거세되고 종당에는 혁명위업자체가 중도반단되고 만다.…(중략)… 필승의 담보는 다름 아닌 선군혁명의 빛나는 계승에 있다. 선군의 대를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주체위업의 전도가 좌우된다.[218]

---

217)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가장 몸 가까이에서 보좌해 드리시며 충성 다해 모셔 가는 존경하는 어머님은 항일전의 그날 어버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우리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 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와 꼭 같으신 분" 저자 불명, 『존경하는 어머님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 중의 충신이시다』(출판지 불명: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여기서는 "북한, 3代 권력세습 결정 - 강연자료(2002년 8월) 조선인민군 출판사(대외비 자료 全文)," 『월간조선』, 2003년 3월호, p. 120에서 재인용.

218) "선군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2005년 9월 16일.

권력승계 준비가 급진전한 것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악화 이후이다. 김정일은 2008년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8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못했다. 특히 김정일은 2000년대 이후 매번 참석했음은 물론, 정권 수립 60주년이었던 2008년 9·9절 열병식에 불참했다.[219] 직후인 2009년부터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음을 고려하면,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후계체제 구축의 주요한 계기였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김정은이 북한 매체에 등장하거나 후계자로 공식화되진 않았으나, 북한 내부에서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이루어졌다. 김정은의 군사적 천재성을 부각하고 이미 종료된 각종 군 행사를 김정은의 성과로 포장함으로써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한 후계자 치적 쌓기가 진행됐다.

북한은 김정은이 어린 시절부터 '영웅남아다운 담력과 배짱'을 가졌으며 3살부터 총을 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만경대가문의 혈통'을 이은 특출난 재능을 지녔다고 선전했다.[220] 2006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2006년 12월 24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취임 15주년 기념 연회에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졸업증과 휘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북한 원전은 이를 두고 김정은 "혁명활동의 첫자욱"이며 그 자리에서 김정일이 김정은의 "선군혁명 위업" 계승을 희망했다며, '선군위업 계승의 시작'이란 의미를 부여했다.[221] '선군의 계승자'인 김정은이 '인민군 주요 간부' 앞에서 '최고사령관 김정일'로부터 인정받은 자리이므로,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군사 지휘 성과도 선전됐다. 북한은 김정은이 2009년 2월 명절 기념 축포야회, 2009년 4월 태양절 기념 축포야회 등을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 특히 "얼마 안되는 인원이 콤퓨터로 조종하여 20분동안에 15만발"의 축포를 음

---

219)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p. 145.

220)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pp. 6-13.

221)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pp. 16-17; "北, 후계자격으로 배반않을 '충실성' 내세워," 『연합뉴스』(인터넷판), 2009년 10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091008171300014(검색일: 2024년 5월 19일).

악에 맞춰 터뜨렸다며,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축포발사기술을 강조했다.[222] 이후 2009년 여름부터 컴퓨터 수치제어(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CNC) 기술이 강조됐으며, 이는 후계자에 의한 ‘첨단의 돌파’ 이미지로 이어졌다.[223]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시작을 선포하며 1998년 발사한 광명성-1호 이후 2009년 4월, 11년 만에 진행된 광명성-2호 발사에도 후계자 김정은의 상징성을 담았다. 로동신문은 광명성-2호 발사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대교체의 의미를 강조했다. 광명성-1호의 연구자가 ‘아버지’라면 광명성-2호의 연구자는 ‘그 아들’이라 표현하며 업적의 계승을 강조했다.[224]

또한 김정은이 광명성-2호 발사 시 ‘반타격전’을 지휘했다고 밝혀 김정은의 ‘령군’ 업적을 축적했다. 2009년 4월 2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실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것이다.”라고 발표했다.[225] 북한은 이때 김정은이 “반타격전 사령관으로서 륙해공군을 지휘”했다고 밝힘으로써, 김정은이 이미 2009년 4월부터 군을 지휘했다고 선전했다.[226]

특히 일부 문헌은 김정일이 직접 김정은에게 “인민군대사업부터 맡아 지도하도록” 했다고 전하는데, 이는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쌓기가 의도적으로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우리 대장은 군사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 대장은 군사에 밝으며 다른 사업보다 군사를 더 중시하고있습니다.[227]

---

222)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pp. 29-31.

223)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北朝鮮の指導体制と後継: 金正日から金正恩へ』, 백계문·이용빈 역, 『김정은 체제: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파주: 한울, 2012), pp. 309-312.

224)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렸다 내나라의 푸른 하늘높이 <광명성2호>를 쏴올린 민족사적인 경사에 접하여,” 『로동신문』, 2009년 4월 7일; “축포,” 『로동신문』, 2009년 4월 17일.

225)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 우리의 혁명무력은 평화적위성 《요격》에 나서는자들에게 단호한 불벼락을 안길것이다,” 『로동신문』, 2009년 4월 3일.

226)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pp. 35-37.

227)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p. 32.

2009년까지 김정은의 각종 행보와 이를 우상화하는 내용은 2009년 9월 8일과 10월 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의 보도를 통해 대외 알려졌다. 2009년 이미 조선인민군 내 『위대한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 자료』 등이 배포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었다.[228] 2009년 9월 대만 사진작가가 공개한 북한 노래 '발걸음'은 인민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 우상화의 진행을 알렸다. 노래 '발걸음'은 김정은을 '청년대장', '김대장'으로 표현해 후계자의 군사적 면모를 부각했다.[229]

2009년에는 군 수뇌부 인사, 헌법 개정, 국방위원회 충원 등 권력승계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됐다.[230] 2009년 2월 11일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리영호 평양방어사령관이 총참모장으로,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이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됐다.[231] 김원홍 보위사령관도 이때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명록 총정치국장은 건강 악화로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체되지 않았다.[232] 향후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이 김정은 권력승계 시까지 직책을 유지하며 김정일 운구차 8인에 포함된 점, 김원홍이 김정은 정권 초대 국가보위부장에 임명돼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09년 2월 군부 인사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신호탄이었다. 2009년 조선인민군 내 배포된 『위대한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 자

228) "마이니치 보도 3남 '김정은 우상화 강연자료' 전문," 『Daily NK』(인터넷판), 2009년 10월 6일; https://www.dailynk.com/%EB%A7%88%EC%9D%B4%EB%8B%88%EC%B9%98-%EB%B3%B4%EB%8F%84-3%EB%82%A8-%EA%B9%80%EC%A0%95%EC%9D%80-%EC%9A%B0%EC%83%81%ED%99%94-%EA%B0%95(검색일: 2024년 5월 19일)

229)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pp. 154-155.

230) 일부 연구에서는 김정은의 생일인 2009년 1월 8일,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교시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리제강에게 하달되었으며, 이후 당과 군 조직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 모임이 진행되었다고 서술한다. 또한 2009년 4월부터 김정은이 국가보위부장으로 근무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아직 북한 원전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pp. 151-153; 오경섭 외,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p. 162.

2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 『로동신문』, 2009년 2월 12일.

232) 설경화, "북한의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pp. 152-154.

료』에서도 해당 군 인사가 결정된 2009년 2월 11일의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언급하며 김정일이 '강령적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233]

이어서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가 보강되었다. 부위원장과 위원의 인원을 각각 한 명씩 증원함과 동시에,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상성 인민보안상,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국방위원에 새로 선임됐다.[234] 전통적으로 국방위원회에 포함되던 군 수뇌부(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 외에 주요 공안기관의 장이 모두 포함된 점은 이례적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비밀경찰 업무를, 인민보안성은 치안유지 업무를 맡으며, 당 행정부는 이들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전문부서이다.[235] 따라서 당시 국방위원회는 권력승계기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도모하기 위한 인적 구성을 갖추게 됐다. 이후 장성택은 국방위원으로 임명된 지 1년 2개월 만인 2010년 6월 이례적으로 연내 두 번째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됐다.[236] 장성택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핵심 인물임을 보여준 것이다.

국방위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11년 만의 헌법 개정 및 국가기구 재편도 이뤄졌다. 국방위원장은 1992년부터 헌법에 등장했으나 국방위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권한이 규정되진 않았었다. 하지만 2009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에서 분리해 '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서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고 '다른

---

233) "경애하는 장군님은 올해 2월 11일과 작년 3월 27일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일꾼들의 혁명화와 전투준비에 속도를 가하는데 대한 문제, 부대 지휘관리를 개선하고 군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을 시급히 대처하는데 대한 강령적인 과제를 제시하시었다." 저자 불명,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9년 10월 5일; 여기서는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위상·역할·후계문제를 중심으로』(성남: 세종연구소, 2011), p. 48에서 재인용.

2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로동신문』, 2009년 4월 10일.

235) 김일기·김호홍,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p. 25.

236) 이기동,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과 과도기 권력구조: 장성택 숙청 이전을 중심으로," 우승지 편, 『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 선군인가 선경인가』(파주: 한울, 2014), p. 125.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거나 '특사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규정했다.[237] 상기 문구는 1992년 헌법상 '주석'의 권한과 유사하다. 1992년 주석 김일성에 버금가는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지위가 제도화된 것이다.

또한 2009년 헌법은 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대한 이행 체계를 명문화했다. 제104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와 제109조 제3목과 제4목 국방위원회가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이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이나 지시는 폐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1998년 헌법이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국방위원장' 명령의 이행경로를 구체화해 '국방위원회'가 '국방위원장의 명령'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방위원회의 '중요군사간부 임명 및 해임'과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권한도 국방위원장 개인의 권한으로 개정했다.[238]

결국 2009년 헌법 개정은 국방위원장 개인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으며, 국방위원회는 이를 이행하는 국가기구로 재정립됐다. 후계자 김정은이 '국방위원장' 직책을 승계함으로써 국가 부문을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1998, 2009년 헌법상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권한 비교

1998년	2009년	비고
-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신설**

237)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2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1998년	2009년	비고
-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신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신설** · **변경**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제109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유지
-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신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유지

1998년	2009년	비고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유지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제103조 국방위원회 위원장 권한으로 이동	**변경**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유지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 제103조 국방위원회 위원장 권한으로 이동	**변경**

* 출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를 비교하여 직접 작성 (비고는 필자가 작성, 일부 조항 순서는 양자 비교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조정).

북한 헌법은 국가 부문의 최고 수위가 '공화국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권'을 가진 자가 '국가 부문의 군권'을 통제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은 시기별 권력승계 상황을 반영해 발전해왔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주석'이 '공화국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규정했다. 1992년 헌법에서는 의도적으로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개정됐다.[239] 무력의 범위를 국가 부문에 한정하지 않아 국방위원장에 취임할 김정일의 권한을 확대했고 김정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2009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다시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써 '국가의' 일체 무력만을 지휘통솔하도록 그 권한을 축소·규정해 1972년 헌법을 일부 복원했다. 국방위원장 권한을 '국가' 부문으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선군정치를 거치며 과도하게 비대해진 군부를 제한하는 등 당-국가체제의 정상화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239) 정성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p. 34.

【표 4-2】 북한 헌법상 무력 지휘통솔 관련 규정 시기별 비교

1972년	제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1992년	제1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2009년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출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강조는 필자).

종합하면, 2009년 헌법 개정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에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갑작스럽게 김정일의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후계자 김정은이 국방위원장 직책을 승계해 국가기구를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국가 부문 내로 한정함으로써 당-국가체제의 정상화를 도모했다.

2. 후계자 공식화 및 군권 우선 이양 시기(2010년-2011년)

2010년에는 김정일이 이례적으로 2차례나 중국을 방문(5.3~7일, 8.26~30일)했고, 이후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해 후계자 김정은을 공식화했다. 2010년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협력,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문제, 북한 후계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10년 5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5개 항의 양국 협력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두 번째가 “양국의 내정,

외교의 중대한 문제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이었다. 2005년 김정일 방중 당시 양국 간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양국이 자국의 국정에 적합한 발전 방식을 모색한다"는 단서를 단 것과는 대조적이다.[240]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중국은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제65주년 기념 축전을 통해 "양국 우호 관계를 대대로 전해 내려가자", "로동당의 새 지도체와의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언급했다.[241]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즉각적인 지지를 표한 것이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이 심화하고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관계까지 악화한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을 통해 외교·경제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했고, 권력승계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했다.

2010년 9월, 44년 만에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는 후계자 김정은을 공식화하고 권력승계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당대표자회 하루 전인 2010년 9월 27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를 통해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현영철, 최부일, 김경옥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황병서 등 30여 명에게 중장 계급을 부여하는 군 인사를 단행했다. 명령은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앞으로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242] 별도의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총참모장 리영호 대장이 차수로 진급하기도 했다.[243] 당시 군부 인사는 명령 전문에서 '당의 령도'를 언급한 점,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당직자들에게 군 계급을 수여

240) 이동률, "중국의 대북전략과 북중관계: 2010년 이후 김정일의 중국방문 결과를 중심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 제29권 3호(2011), pp. 304-305.

241) 박종철, "김정은 지도체제 초기국면과 북중관계: 체제안정과 개혁개방의 딜레마(2008년~2012년),"『대한정치학회보』, 제20권 3호(2013), pp. 61-62.

24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로동신문』, 2010년 9월 28일.

2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제07호,"『로동신문』, 2010년 9월 28일.

한 점에서 '당에 의한 군 령도' 원칙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또한 북한 인민들 앞에 김정은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했다는 의미도 크다. 전 인민 앞에서 최초로 공표된 김정은의 공식 계급은 '조선인민군 대장'이었다. 그간 북한 인민을 대상으로 '대장 동지, 청년 대장, 김대장' 등의 호칭이 선전되었음을 고려 시, 이에 걸맞은 계급을 공식 부여함으로써 김정은의 '군사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내세운 것이다.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을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해 후계자 지위가 공식화됐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신설한 후 군권에서의 권력승계가 다른 부문보다 앞서 공식화된 것을 의미했다. 김정은이 당이나 국가 부문이 아닌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만 2인자의 자리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같은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상설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명문화됐다. '당중앙위원회'와 같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한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와 같은 지위를 가진 것은 군사 문제에 관해 당중앙위원회가 아닌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업을 조직지도하게 됐음을 뜻했다. 강력한 권한의 당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에 대해서도 군사 관련 내용은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지도하게 된 것이다.[244]

실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임명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는 군 지휘관뿐만 아니라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에 대한 지휘, 인사, 조직지도 권한을 아우르는 명실상부 최고군사기구가 되었다.

대신 북한은 '당권'이 '군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 총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자동 겸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245] 만약 겸직

244)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p. 41.

245)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pp. 39-49; 『조선로동당 규약』(2010).

규정이 없다면, 김정일 유고 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직책의 승계 여부는 오롯이 후계자 김정은의 몫으로 남게 된다. 군권의 핵심인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직책에 대한 겸직을 규정함으로써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김정은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임명과 겸직 조항 신설은 권력승계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에도 김정은이 상설기구인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군을 지도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 당권을 승계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권을 승계함으로써, 신속한 권력승계가 가능해졌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김정은이 당을 통해 군을 '절대령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둘째, 김정일이 당 총비서 직을 유지하는 한 김정은은 당 총비서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246]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 중 김정일의 당권이 유지되므로, 김정일 사망 전까지 김정일에 의한 안정적 권력승계 준비를, 김정일 유고 시 김정은으로의 안정적 권력승계를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차 당대표자회는 다른 당 기구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당 총비서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1997년 김정일 사례와 같이 당대회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당대표자회에 당 규약의 수정보충,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해 당대회보다 개최가 용이한 당대표자회를 권력승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정은이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를 이양받았음을 고려하면, 김정은으로의 신속한 권력승계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군 총정치국에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부여해 총정치국이 최고군사지도기관이 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직속 부서와 같은 지위를 갖기도 했다.[247]

---

246) 일부 연구에서는 겸직 조항을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김정일의 권력독점 의지"로 분석하나, 2008년 김정일 건강 악화로 인해 김정은으로의 조속한 권력승계를 준비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설명력이 떨어진다. 겸직 조항에 관한 분석은 히라이, 『김정은 체제』, pp. 57-59; 김진하,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정치 동학,"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2011), p. 6.

247) 『조선로동당 규약』(2010).

제3차 당대표자회는 김정일 시기 유명무실화된 당 기구들도 충원했다. 김정일 혼자 남아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 총 5인이 선임됐다. 당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모두 대폭 충원돼 선군시대 약화했던 당의 정상화가 이뤄졌다.[248]

특히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당중앙군사위원회에는 군 수뇌부(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부터 리용철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하일 당 군사부장,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까지 총망라되어 군에 대한 주요 지휘권자, 인사권자 등이 포함되었다.[249] 당 규약상 최고군사지도기관의 위상에 적합한 구성을 갖춘 것이다.

정리하면, 제3차 당대표자회는 후계자 김정은을 대외 공식화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당 규약의 개정, 당 기구 충원 등 후계체제의 기반을 구축한 계기였다.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은은 현지 지도를 통해 후계자로서의 권위와 입지를 강화했다. 김정일의 주된 활동 분야가 경제였던 것과 달리, 김정은은 군에 대한 지도체계 구축에 집중했다. 김정은은 2010년 10월 5일 김정일의 조선인민군 제851부대 포사격 훈련 시찰에 동행해 현지 지도에서의 첫 모습을 드러냈다. 10월 25일 제10215부대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위부 현지 지도에 동행하기도 했다.[250] 김정일 사후 공개된 “<조선기록영화>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에서는 김정일 생전 이미 김정은이 단독으로 군부대를 현지 지도하는 장면이 공개됐다.[251]

---

248) 주요 인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리영호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룡해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당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경희는 당 정치국 위원에, 장성택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당중앙위 비서국에는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문경덕,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태종수, 홍석형 등 10명이 임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0년 9월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로동신문』, 2010년 9월 29일.

249)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pp. 384-386.

250) 히라이, 『김정은 체제』, pp. 289-293.

김정은은 2011년 5월 희천1호발전소 룡림언제건설, 2011년 10월 2.8비날론련합기업소 급수침전지감탕제거공사 등 '인민 생활'을 위한 건설 사업에서 조선인민군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252] 특히 김정일은 2.8비날론련합기업소 공사와 관련해 김정은이 '인민군이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라고 언급해 김정은이 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밝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김정은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민군대를 동원하였으니 그 공사를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제낄수 있었지 사회사람들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을것이라고, 김정은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언제나 나의 구상과 의도를 맨 앞장에서 실천으로 받들어나가고있으며 인민군대가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253]

2011년 김정일이 공병부대를 대상으로 한 담화도 당시 북한이 군 내 김정은의 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당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해당 담화에서 김정일은 '최고사령관과 김정은동지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김정은의 명령이 곧 최고사령관의 명령과 같은 위상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 오늘 주체혁명위업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습니다.…(중략)…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공병부대를 당의 령군체계가 확고히 선 최고사령관의 부대, 김정은부대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중략)… 공병부대는 최고사령관과 김정은동지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254]

---

251) 『조선중앙TV』, 2012년 1월 8일.

252)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pp. 50-53.

253)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p. 53.

254) 김정일, "공병부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에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결사대

김정은은 2010년 9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데 이어 2011년 조선인민군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과 지휘를 내리며, '군령권'을 부분적으로나마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이나 국가 부문에서의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점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군권을 장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후계체제를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12월 19일 정오 조선중앙TV를 통해 12월 17일 김정일이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애도기간은 12월 17일부터 29일까지였으며, 28일 영결식과 29일 중앙추도대회를 개최했다.[255]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김정은을 차기 령도자이자 최고사령관으로 언급했다. 12월 19일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전한 조선중앙TV는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고 밝혔다.[256] 12월 24일 로동신문 정론은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표현했다.

> 우리는 심장으로 선언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피눈물의 맹세를 안고 우리는 김정은동지 그이를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리의 장군으로 높이 부르며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다. 김정은동지이시여, 인민이 드리는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부름을 안으시고 김일성조선을 영원한 승리에로 이끄시라![257]

김정일 사후 즉각적인 북한 매체들의 김정은에 대한 보도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의 최고사령관 추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최고위급의 지침 없이 북한 매체들이 상기 내용을 자율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야한다," pp. 478-492.

255) 『조선중앙TV』, 2011년 12월 1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로동신문』, 2011년 12월 20일.

256) 『조선중앙TV』, 2011년 12월 19일.

257) "우리의 최고사령관," 『로동신문』, 2011년 12월 24일.

실제 김정일 추모 기간이 종료된 2011년 12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10·8 유훈에 따라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했다.[258]

10·8 유훈은 김정일이 2011년 10월 8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담화와 같은 날 인민군지휘성원을 대상으로 한 담화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인민군지휘성원 앞에서 김정은에게 최고사령관 직부터 넘길 것이라 언급했고, 그러한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김정은으로 최고사령관 직이 신속히 이양됐다. 군권이 우선 이양된 것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100(2011)년 10월 8일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중략)… 김정은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유일한 계승자이며 나의 가장 가까운 혁명전우, 믿음직한 군사보좌관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자신께서 맡고계시는 모든 공직을 다 넘겨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 《나는 김정은동지에게 최고사령관직부터 넘겨주겠습니다.》
>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김정은동지의 혁명실록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후세에 길이 전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259]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전임자 김정일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후임자 김정은에게 '군권을 우선 이양'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군권을 중심으로 권력승계'를 진행했다는 점을 각종 담화나 출판물을 통해 의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선군의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은이 '군권'을 중심으로 우선 이양받는 모습을 연출해 짧은 후계자 기간을 가진 김정은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의도한 것이다.

---

258)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로동신문』, 2011년 12월 31일.

259)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p. 79.

3. 권력 이양 완료 시기(2012년)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책만을 승계한 상태에서 군부대 현지 지도 등 군 관련 활동에 집중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당·정 직위를 승계한 4월 15일까지 조선중앙통신에 게시된 김정은의 공식 활동 중 60% 이상이 군 관련 활동이었다.[260] 당·정 분야에서 김정은의 직위가 공개된 것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임명한 당중앙위원회 위원뿐이었다.

김정은은 국가 부문에서 직책을 보유했지만, 북한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앞에서 한 2011년 10월 8일 담화에서 "김정은동지가 당과 국가의 공식적인 직무를 맡고 사업한 기간은 아직 얼마 되지 않지만"이라 언급했기 때문이다.[261] 북한이 김정은의 군사 부문 업적은 선전하면서도 국가 부문 직책은 적극 알리지 않은 점은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군권'을 중심으로 선전했음을 알려준다.

김정은의 당·정 최고 수위 추대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2012년 4월 15일 태양절에 맞춰 이뤄졌다.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당 총비서"와 "영원한 국방위원장"에 추대했고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됐다.[262]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이후 3년간 당·정 최고 수위를 승계하지 않고 최고사령관 직책만을 가졌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4개월 만에 승계를 완료했다. 김정일이 공식 직책 없이도 안정적인 후계 정권 운영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은 짧았던 후계자 기간으로 인해 공식 직책에 대한 승계를

---

260) 이기동,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과 과도기 권력구조," p. 129.

261) 김정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1년 10월 8일, 12월 15일)," 『김정일 선집 25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 419.

262)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진행,"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진행," 『로동신문』, 2012년 4월 14일.

서둘렀음을 알 수 있다.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최룡해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고, 상무위원 중에서도 총참모장 리영호보다 앞 순서로 호명돼 약진이 두드러졌다.[263] 또한 로동신문에서 정치국 위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최룡해가 4월부터 총정치국장으로 활동한 것도 확인됐다. 당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된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4월부터 인민무력부장에,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은 국가안전보위부장에, 현철해 국방위원회 정치부장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에 임명되었다.[264] 당 엘리트 출신의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하고, 총정치국 출신의 김정각, 김원홍, 현철해 등을 군 주요 보직에 중용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한 것이다.

선군정치를 거치며 사실상 군 서열 1위 직책이 된 총정치국장 자리에 민간인 출신 최룡해를 임명한 것은 매우 파격적으로, 김정일의 유훈 없이 김정은의 단독 결정이었을 가능성은 작다.[265] 김정일 생전 군에 대한 통제 체계 구축을 승계 정권 초기 안정화의 주요 조건으로 판단하고 그 방안을 미리 준비했을 수 있는 것이다.

제4차 당대표자회에 이어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도 국방위원회 위원에 최룡해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을 보선했다. 4월 군 인사에 맞춰 국방위원회를 보강한 것이다.[266] 제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는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을 완료함과 동시에, 새로운 당·국가 부문의 지도부를 구성함으로써 김정은 승계 정권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

263) 이기동,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과 과도기 권력구조,” p. 138.

264)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진행,”『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265) 박형중,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2012), pp. 2-3.

2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진행,”『로동신문』, 2012년 4월 14일.

제2절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

1. 신속한 군부 장악을 통한 물리적 정권 보위

김정일은 2010년 5월 이후 1년간 중국에 이례적으로 세 번이나 방문함으로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고 안정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했다.[267]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오히려 북한의 대내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이었다. 김정일 개인의 강력한 권력에 기반한 국가 운영체계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후계자 김정은이 장악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는 군부의 위상 제고와 군부에의 각종 특권 제공으로 이어졌다.[268] 비록 김정일 개인에 의한 확고한 군부 통제 체계를 유지했으나[269] 후계자 김정은은 주어진 시간 안에 이를 효과적으로 계승해야 했다.

후계자 김정은은 김정일 시기 경제 상황의 연장선에서 인민 생활 향상 및 경제적 성과 창출도 추진해야 했다. 김정일은 1999년 1월 1일 '북한이 이미 정치사상 및 군사강국에 도달'했으며 이제 '경제강국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발전에 힘쓸 것임을 인민에 선언했다.[270] 하지만 곧이어 취해진 2002년의 7·1조치는 국가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시장화를 불러왔고, 결국 김정일은 당시 경제정책을 이끌던 박봉주 내각 총리를 2007년 해임하고 반(反)시장 정책으로 회귀했다.[271]

---

267) 박종철, "김정은 지도체제 초기국면과 북중관계," p. 63.

268)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pp. 213-215.

269)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p. 147.

270)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9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p. 454-461.

271) "일부 일군들은 경제지도와 관련된 당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일군들은 시장을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데 보조적 공간으로 리용하자는 것을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과 시장경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정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하신 말씀(2005년 2월 26일),"; 여기서는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

대신 김정일은 2006년 1차 핵실험 성공을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을 통한 인민 생활 향상'을 천명했다. 핵무기 개발을 통해 강한 억제력을 확보해 안보 위협을 상쇄하고, 이후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논리였다.[272] 북한은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핵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평하며, 2007년에는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인민생활의 향상, 먹는 문제 해결, 인민소비품생산"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73]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경제강국을 포함한 '강성대국의 목표 기한'을 2012년으로 설정했고, 2010년에는 인민 생활 향상을 "제1차적인 요구", "당사업의 화력 집중" 분야로까지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274]

김정일이 인민 생활 향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 이유는 과도한 경제적 비효율성이 정권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군비경쟁에 뒤처짐으로써 주변 국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로 인해 대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275] 특히 경제위기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불만을 고조시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기 쉽다.[276] 정권의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에서 인민경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설문조사에서도 해당 시기 경제 침체로 인한 최고지도자의 정당성 약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을 제외하

---

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p. 236에서 재인용.

272) 김상범, 『북한의 핵과 정치권력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4), pp. 40-43.

273)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07년 1월 1일.

274)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8년 1월 1일; 김정일, "경공업과 농업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0년 3월 31일)," 『김정일 선집 25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 48-54.

275) 박형중, "수령독재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8월호(2019), pp. 10-13.

276) 김영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 p. 208.

고, 2008년부터 매년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에 매년 1위를 차지한 응답은 “지도자 책임”이었으며, 2008, 2009, 2011년 모두 25%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2011년 응답자의 경우, 직전 해인 201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0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시기 북한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인식을 부분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277]

장기간 경제 침체로 인한 최고지도자의 정당성 약화 가능성은 김정일이 인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조하던 시기를 지나 희생의 대가로 ‘강성대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성과를 내놓아야 했던 이유다. 이는 정권을 승계하는 후계자 김정은에게도 적용됐다.

문제는 그동안 국방 분야에 집중됐던 국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인민 생활 경제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비대해진 군부의 경제적 역할과 특권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278] 후계자로서 준비 기간이 짧았던 김정은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부의 특권을 박탈하고 인민 생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후계자의 공고한 군부 장악이 필요했다. 단순히 군권을 활용해 정권을 수호하기보다 이에 앞서 ‘군부 반발의 위협’을 차단해야 했다.

---

277) 송영훈·김병로·박명규, 『북한주민 통일의식 2008-2013: 북한이탈주민에게 묻다』(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p. 95-96.

278) 실제 김정일은 사망 직전인 2011년 12월 정권 기관의 외화벌이로 인한 인민 경제 악화를 비판한 바 있다. “묘향산합영회사에서 생산한 이런 좋은 위생종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외화가 있는 사람들이 사서 쓰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생종이를 수출하지 말고 모두 우리 인민들에게 팔아주어야 합니다. 좋은 상품을 생산하면 우리 인민들에게 팔아주고 다른 나라에는 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있는데 수산기지를 가지고있는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는 몇푼 안되는 외화를 벌겠다고 하면서 계속 물고기를 잡아 다른 나라에 팔고있습니다.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과 가공품을 수출하지 말고 상업망들에 넘겨 인민들에게 팔아주어야 하겠습니다.…(중략)… 적지 않은 기관들에서 나라의 법을 어기고 저마끔 자기 단위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물고기를 망탕 잡아 물고기자원을 고갈시키고있습니다.…(중략)… 대성지도국에서 수출하던 상품들을 광복지구상업중심에 가져다놓고 인민들에게 팔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환하는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김정일, “광복지구상업중심은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이다: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2011년 12월 15일),” 『김정일 선집 25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 526-528.

김정은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의 과정은 후계자의 효과적인 '군 통제 체계' 구축에 맞춰졌다.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북한은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기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부상시켰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문제에 관해 당 조직지도부와 같은 권력 기구를 직접 지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대표자회 전날 김정은과 함께 대장 계급을 받은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중장 계급을 받은 황병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조직지도부에서 오랫동안 군을 담당한 인사였다. 북한은 이들에게 군사 계급을 수여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정당화하고자 했다.[279] 김정은이 위상이 제고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김정일이 1960~70년대 당 조직지도부에서 당적 통제 체계를 장악하며 권력을 키운 것과 같이, 김정은도 당적 통제 체계를 활용해 군을 장악해 나감을 의미했다.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를 추진해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는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간의 위상 조정도 의도했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권한에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280] 헌법상 '최고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당적 지도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제3차 당대표자회 직후부터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들의 서열 상승과 국방위원회 구성원들의 서열 하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두 기구 간의 위상 조정을 의도했음을 보여준다. 제3차 당대표자회 이전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에서 수행원들의 직책은 국방위원회 직책을 중심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수행원들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직책이 국방위원회 직책보다 먼저 소개되기 시작했고, 두 기구 중 한쪽에만 속할 경우 당중앙군사위원회 인사들이 국방위원회 인사들보다 먼저 호명되는 변화를 보였다.[281]

---

279) 히라이, 『김정은 체제』, p. 37.

280) 『조선로동당 규약』(2010).

제3차 당대표자회 직후인 2010년 11월 6일 발표된 조명록 총정치국장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국방위원회 위원들보다 의도적으로 앞서 배치됐다. 국방위원회 직책만을 가진 오극렬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배치된 후인 43번째 순서에 그쳤다.[282] 2009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15주년 중앙추도대회 주석단 서열에서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7번째 순서를 차지하며, 리영호 총참모장이나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부장보다 앞서 배치되었던 것과는 정반대이다.[283]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군부대를 단독 시찰했다.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인민군 대장 계급을 받고 2011년 3월부터 군부대를 단독으로 지도한 것이다.[284] 김정일의 경우, 김일성 사망 전 단독 군부대 시찰을 공개하지 않았다. 1994년 4월 최초로 공개한 군부대 방문도 김일성과 동행한 것으로,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장 직책으로 소개됐다.[285]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김정일 사망 이전부터 군부대를 단독 시찰한 것은 '당 부문'을 중심으로 김정은이 조기에 군부를 장악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은으로의 '최고사령관' 직책 우선 이양은 김정은 '개인'의 군부 장악을 위해 이뤄졌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다수로 구성된 군사 기구지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김정은 개인에게 속한 직책이므로, 개인에 대한 충성과 결사옹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날짜에 맞춰 게재된 2011년 12월 24일 자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김정은을 보위하는 데 있어 '제일결사대'는 '인민군대'이며 '오중흡7

281)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p. 388.

282) 히라이, 『김정은 체제』, p. 444.

283) 히라이, 『김정은 체제』, p. 184.

284)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pp. 46-49.

28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로동신문』, 1994년 4월 26일.

련대칭호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중흡7련대는 1930년대 항일빨치산 투쟁 당시 혁명의 수뇌부인 김일성을 사수했던 부대로,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상징이다.[286] 군에 '김정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보위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 우리의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강성국가건설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한다.…(중략)…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대로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드는데서 제일기수, 제일결사대가 되여야 할 핵심부대는 우리 인민군대이다.…(중략)…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전군을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혁명적군풍과 군기를 철저히 확립하며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만능의 지휘관, 만능병사로,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든든히 준비시켜야 한다.[287]

김정일은 2011년 10월 8일 담화에서도 후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령군체계'의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조선인민군을 '당과 수령의 제일호위병'으로 표현하며, 군의 정권 보위 역할이 승계 정권 수호에 필수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이고 기둥이며 당과 수령의 제일호위병입니다.…(중략)… 인민군대안에 김정은동지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일하에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명령지휘체계와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288]

---

286)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의 사령부를 한목숨바쳐 보위한 7련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의 본질과 목적을 밝히시였다." 강희봉, 『선군정치문답』(평양: 평양출판사, 2008), p. 158.

287)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로동신문』, 2011년 12월 24일.

288) 김정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p. 42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고사령관 임명을 통한 김정은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은 김정은이 조기에 군부를 장악하고 군에 결사옹위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승계 정권을 보위하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2. 안보 위협을 이용한 후계자의 정당성 강화

김정은은 2009년 '대장 동지', '청년 대장'으로 우상화됐으며,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인민 앞에 공식 등장했다. 김정은이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2012년 4월 당 제1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되었음을 고려할 때, 김정은은 공식 등장 이후 채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당·정·군에서의 최고 수위에 등극했다.

후계자 기간이 짧은 만큼 김정은에게는 효과적으로 정당성을 구축할 방안이 필요했다. 김정은이 단순한 혁명위업의 계승자가 아닌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등장한 이유다. 북한은 김정은의 군사 지도자적 면모를 부각해 조국을 수호하고 '제국주의 압살책동으로부터 최후의 승리'를 얻어낼 적임자로 김정은의 정당성을 강화했다.

첫째, 북한은 김정은의 젊은 나이와 짧은 후계자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김정은이 아주 어릴 때부터 군사적 비범성을 지닌 '군사의 영재'라 선전했다. 김정은이 3살 때 이미 총을 쏘고 운전했다거나 '10대에 벌써 현대전쟁에 대한 일가견'을 가졌다는 내용,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재학 당시 '군사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작전방안을 고안했다는 등의 일화가 선전됐다.[289] "백두산형 장군"[290]이라거나 "20대의 청년장군 김일성장군님" 또는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이었다[291]는 선전 또한 김정은이 타고난 군사 지도자임을 부각해 취약

289)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p. 13; 김정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p. 421.

290) 김정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p. 421.

한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김정일도 '김정은의 짧은 직무 수행 기간'을 '선군'의 경력으로 보완하려 했다. '선군'의 이미지를 활용해 후계자의 정당성을 강화한 것이다.

> 김정은동지가 당과 국가의 공식적인 직무를 맡고 사업한 기간은 아직 얼마 되지 않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선군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왔으며…(중략)… 우리 당이 군사를 가장 중시하며 선군정치를 하고있는 때에 김정은동지가 일찌기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고 군사에 정통하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292]

둘째, 북한은 2000년대 후반 김정은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선전해 후계자의 군사 치적을 만들고 김정은에 '최후의 승리'를 위한 '강철의 령장' 이미지를 구축했다.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김정은이 반타격전 사령관이었다는 일화, 2010년 천안함 사태 당시 김정은이 "즉시적이며 강력한 물리적대응"을 취했다는 내용,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를 주도했다는 내용 등이 선전됐다. 북한은 김정은에 의해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은 더욱 강화"됐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이 "총대의 위력으로 백승만을 떨쳐나갈수 있었다"고 선전함으로써 '체제 수호자'로서 김정은의 정당성을 강화했다.[293]

셋째, 북한은 김정은이 '현대군사과학기술'에 정통했음을 들어 인민들에게 '강성대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희망을 주었다. 북한 문헌은 김정은이 '위성항법장치수신기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지도'를 작성했다거나 '콤퓨터로 자동조종'하는 축포 발사 기술을 완성해 축포 야회를 직접 준비했다고 선전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은이 첨단기술에 능하다는 이미지를 형성했다.[294] 김정은이 '첨

---

291) 한영수 외, 『인민의 태양 김정은찬가』(평양: 평양출판사, 2022), p. 17.

292) 김정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pp. 419-423.

293)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pp. 36-49.

단기술의 첨병'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당시 북한에선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한 경제발전', '군수의 민수화'에 관한 담론이 등장하고 있었다. 2009년 4월 7일 로동신문은 광명성 2호 발사 성공을 평가하며 "위성발사의 포성은 경제강국을 위한 대고조에로 부르는 총진군의 장엄한 신호성"이며 "경제강국에로 비약할 좋은 징조들이 련이어 나타나고있다"고 언급했다.[295] 2009년 8월 로동신문은 CNC화란 용어를 처음 언급하며 이를 "선군시대 기술혁명의 전성기를 알리는 바람"이라 전했다. 2010년 8월 김정일의 평양곡산공장 현지지도 때는 김정일이 CNC화로 자동화된 생산공정을 보고 "사탕폭포, 과자폭포가 쏟아지고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2010년 신년공동사설은 전년도 최대 성과 중 하나로 'CNC 기술의 세계첨단돌파'를 꼽고 2010년의 핵심과업으로 '경공업부문과 산업 전반의 CNC화'를 강조했다.[296] CNC화를 통한 식품생산 증대, 인민 생활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선전한 것이다.

북한은 'CNC화'란 화두를 통해 첨단기술의 발전을 인민 생활 향상으로 연결했다. 특히 후계자 김정은이 '콤퓨터 자동조종' 등 첨단기술에 능통하다고 선전한 상황에서 CNC화의 등장은 김정은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민 생활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유도한 것이었다.[297] 오랜 기간 선군노선에 의해 희생했던 인민에게 '군수의 민수화'를 통한 경제발전 및 인민 생활 향상의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은의 정당성을 높인 조치였다.

---

294) 지봉철·리성길·리희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p. 29, 54; "北, 후계자격으로 배반않을 '충실성' 내세워," 『연합뉴스』(인터넷판), 2009년 10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091008171300014(검색일: 2024년 5월 19일).

295)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렸다 내나라의 푸른 하늘높이 <광명성2호>를 쏴올린 민족사적인 경사에 접하여," 『로동신문』, 2009년 4월 7일.

296) "첨단을 돌파하라," 『로동신문』, 2009년 8월 1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훌륭히 기술개건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0년 8월 26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2010년 1월 1일.

297) 김현경, "김정은 권력승계의 담론 연구," pp. 179-184.

후계자 김정은을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우상화하고 김정은이 군사 분야 중심의 행보를 펼친 것은 사회주의 조국 수호와 강성대국 건설에 있어 김정은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강한 군사 지도자의 면모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첨단기술에 능통함은 군수의 민수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 추동을 위한 이미지를 유도했다. 김정은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은 '선군혁명위업'을 활용해 후계자의 취약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3절 군권 우선 이양의 영향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김정은이 2012년 4월 11일 당 제1비서에, 4월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이후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 방식으로 규정하며 완성됐다. 본 절에서는 김정은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이 어떻게 승계 정권을 안정화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1. 안정적 당권 승계 및 군부 통제 강화

가. 최고사령관 직책을 활용한 안정적 당권 승계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2년 초반 김정은은 현지 지도의 대부분을 군부대에 할애하며 최고사령관으로서 지위를 내세웠다. 2012년 1월 1일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았고, 이후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 받은 군부대들을 방문해 군에 '최고사령관과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특히 로동신문에 실린 군부대 현지 지도 사진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란 문구가 빠짐없이 포함돼 군의 높은 충성심을 의도적으로 가시

화했다.[298] 2012년 초 전개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도 최고사령관에 대한 군의 절대적 충성심을 유도했다.

김정은은 '결사옹위'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최고사령부를 활용했다. 2012년 3월 2일 북한 최고사령부는 한국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김정은의 사진과 이에 대한 전투 구호를 붙인 것을 두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최고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 숨쉴 곳이 없게 될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고사령부 성명에 이어 국방위원회 정책국 기자회견(3.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평통 대변인 담화(3.4일) 등이 연이어 발표됐고, 지역별 주민 궐기대회까지 개최됐다. '남측 내 김정은 모독'에 대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2012년 4월 18일에도 발표됐다.[299]

남측 내 시위, 지방 군부대 내 전투 구호 등 비교적 사소한 사안에 대한 북한 최고사령부의 민감한 반응은 군이 김정은 최고사령관을 결사옹위함을 의도적으로 보인 것이었다.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엘리트들이 최고지도자의 힘이 '도전 불가한 수준'이라고 인식할 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최고사령부의 공개적인 강경 발언은 대외적으로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대내적으로는 정치 엘리트들에게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군권이 이미 공고함'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아직 당과 국가 부문 최고 수위를 승계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군부의 지지에 기반하여 안정적 당권 승계를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직책만을 승계한 상태에서 군부 인사를 단행했다. 2012년 2월 15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호를 통해 장성 23명이 진급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상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했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 위원임에도 장성 계급이 없던 박도춘 당 군수비서에게는 대장 계급을 수여했다. 장성 계급이 없던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에게도 상장

29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2일.

299) 정성장,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pp. 53-54.

계급을 수여했다. 같은 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공동결정으로 김정각이 차수로 진급하기도 했다.[300]

김정은이 단행한 최초의 군부 인사에서 총정치국 출신 간부와 군수 분야 인사들이 약진한 것은 해당 인사가 김정은 시대 승리 연합을 구축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준다.[301] 군에 대한 당적 통제 체계 구축 및 핵무기 개발 등 김정은 시대 핵심 군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군 계급이 없던 당중앙군사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 위원에게 장성 계급을 수여한 것은 군 지도부로서 이들의 정당성을 높이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김정은이 당·정 최고 수위에 추대된 4월 15일까지 김정은의 공식 활동 중 60% 이상은 군 관련 활동이었다.[302] 김정은의 행보가 군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성심', '진급 인사' 등 '군권의 순응적 기제'를 활용하여 군부의 충성심을 유지했고, 공개적으로 군부의 충성심을 드러내 다른 정치 엘리트에게 김정은의 군부 장악력을 현시했다.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직책을 활용함으로써 당·정 최고 수위를 승계받지 못한 정치적으로 취약한 시기를 관리했고, 안정적으로 당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나. 선군정치의 변화 및 군부 통제 강화

김정은은 2012년 4월 당·정 최고 수위에 추대된 이후 북한의 장기간 경제 침체로 인한 정당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인민 생활 향상'에 집중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계승하면서도, 선군정치를 통해 형성된 군을 우대하는 정책 기조를 '인민 생활 향상'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김정은은 군부의 특권적

300)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호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2월 16일.

301) 박형중,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pp. 2-3.

302) 이기동,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과 과도기 권력구조," p. 129.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군권의 강압적 기제'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2년 4월 김정은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이에 기반해 경제건설로의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최고지도자로서 인민 앞에서 한 최초의 공개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군사 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중략)…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303]

김정은은 장기간 헌신해 온 인민의 노고를 인정하고 '핵무기 보유'를 계기로 경제건설로의 정책 전환을 선포했다. 승계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안보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인민 생활 향상과 경제건설에 힘쓸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광명성-3호를 발사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스스로가 '핵보유국'임을 최초로 명문화했다.[304]

김정은은 '핵무력 발전'을 중심으로 군부를 빠르게 재편했다. 2012년 3월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통해 '전략로케트군'의 존재가 최초로 알려졌다.[305] 2012년 2월 15일 장성 인사에서 군수 관련 인사들이 약진한 데 이어,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는 김략겸 전략로케트군 사령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306] 김정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군부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

303)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

304) "김정일동지께서는…(중략)…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 설경화, "북한의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pp. 181-191.

30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년 3월 3일.

또한 2012년 4월 최룡해 총정치국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임명되어 군 및 공안 기구의 수뇌부가 완비되자, 김정은은 빠른 속도로 군부에 주어진 특혜를 박탈했다. 2012년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철저히 내각과 합의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기관 특수주의를 배척하고 '내각책임제'를 강조했다.[307] 이후 2012년 5월 초 군부가 주도하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해체하고 내각 소속 합영투자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308] 군부의 주요한 경제적 특권이었던 외화벌이 사업을 내각으로 이전시킨 것이다.

김정은은 군에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건설 사업에 군을 동원했다. 2012년 10월 평양 시내의 '공원들을 꾸리기 위한 전투, 배구장·롱구장·로라스케트장 정비' 등에 인민군이 동원됐고, 2012년 11월에는 김정은이 인민군대 소속이던 '미림승마구락부'를 근로자와 청소년의 체력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309] 북한 문헌에서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김정은의 지침이 '인민군대의 관점과 립장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왔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인민을 위하는 인민군대의 관점과 립장에서부터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실 의도밑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을 인민을 위한 해로 정하시고 인민군대가 2012년에 《인민을 돕자!》는 구호밑에 인민을 위한 좋은일하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중략)… 그이의 의도에 따라 최근년간 인민군대는 농업과 경공업부문에 대한 물질기술적, 로력적

306)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진행,"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307)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308) 박형중, "김정은 권력 정착과정에서의 군부 동향(2009년~2013년),"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2013), pp. 3-4.

309) 김준혁 외, 『주체101(2012)년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평양: 외국문출판사, 2013), pp. 125-127.

> 지원은 물론 도처에 웅장화려한 거리들과 세계적수준의 기념비적거축물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는데서도 기수,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있다.…(중략)… 일단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안으면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단숨에 해제끼는것이 인민을 위한 일에서 인민군대가 발휘하고있는 투쟁기풍, 창조본때이다.[310]

김정은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지침은 1990년대 김정일이 '인민'이 '군대를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반대의 기조이다.[311] 군을 내세운 선군정치로 인해 군을 우대하고 군을 위한 '인민의 희생'을 강조하던 정책 기조의 반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의 특권적 지위가 박탈됨을 뜻했다.

김정은이 선군을 계승하면서도 그간 군부가 누리던 특권을 박탈하고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건설로 전환한 것은 군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군권 우선 이양'을 통해 조기에 군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군권의 강압적 기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군부의 반발을 차단했다. 특히 전임자 김정일 생전에 이루어진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정비, 총정치국의 지위 격상, 당 관료에의 군사 계급 수여 등은 김정은 승계 정권이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제도적·인적 기반을 제공했다. '군권 우선 이양'의 결과로 김정은 승계 정권의 군부 장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먼저, 김정은은 민간인 출신 총정치국장을 임명해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했다. 앞서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 시기 군 내 일인자의 역할을 한 총정치국장 직책에 군이 아닌 당 관료 출신의 최룡해를 임명한 것은 파격적이었다. 2014년 4월 최룡해에 이어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된 황병서 또한 당 조직

---

310) 김정남·김련옥, 『인민사랑의 정치가』(평양: 평양출판사, 2016), pp. 60-70.

311) "최근 인민군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있으며 군대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소행이 더 많이 꽃펴나고있습니다.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하러 갈 때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주둔지역 주민들이 떨쳐나서 군인들을 열렬히 환영하여준다고 합니다.…(중략)… 인민은 군대를 자기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김정일,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pp. 1-9.

지도부 제1부부장 출신으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담당하던 관료였다.[312]

민간인 출신 총정치국장의 임명과 교체는 김정은 시대 핵 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북한식 문민통제'라 할 수 있다. 핵 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 아래 군부의 기득권을 줄이고 국방비마저 상대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정치국이 군부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군부의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다.[313]

실제 김정은 시대 현지 지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까지 가장 영향력이 크고 당, 군, 정 간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 엘리트는 민간인 출신 총정치국장인 최룡해와 황병서였다.[314] 이례적으로 임명한 민간인 출신 총정치국장이 정치엘리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를 적극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군권의 강압적 기제로서 강등과 해임이 빈번하게 활용됐다. 대표적으로 2012년 7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리영호 총참모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한 것은 비록 해임의 구체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만약 군부가 반발하더라도 김정은이 당 기구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315]

리영호 총참모장 숙청 외에도 인민무력부장을 수시로 교체하는 등 김정은 정권 초반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잦았다. 인민무력부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회 교체됐는데, 이는 김일성 정권 46년간 인민무력부장 4회 교체, 김정일 정권 17년간 인민무력부장 3회 교체에 그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316] 국가

---

312)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8권 2호 (2015), p. 101.

313)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pp. 98-103.

314)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111-151.

315)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로동신문』, 2012년 7월 16일.

316) 김태구,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 연구," 『2015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서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2015), pp. 54-55.

정보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이후 2015년 7월까지 당과 정권 기관의 인사는 20~30%를 교체한 데 비해, 군은 40% 이상 교체했다.[317]

다만, 수개월 단위로 인민무력부장 및 총참모장이 교체된 것과 달리, 총정치국장 직책은 최룡해와 황병서 모두 약 2년 이상 재임하며 비교적 안정성을 보였다. 군권의 강압적 기제가 총정치국장을 제외한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후반부터 군 고위급의 계급을 수시로 강등 및 복권하는 '계급장 정치'도 등장했다. 김정은 시기 핵심 실권자인 총정치국장 최룡해는 2012년 4월 차수로 진급한 이후 같은 해 12월 대장 계급으로 강등됐으나, 3개월 만인 2013년 2월 차수 계급으로 복권됐다. 정찰총국장 김영철도 2012년 11월 대장에서 중장으로 강등된 후 2013년 2월 다시 대장으로 복권됐다.[318] 수개월 단위로 일어난 군 계급의 잦은 변화는 김정은이 수시로 군 인사를 내려 군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의 노선을 적극 이행하지 못하는 핵심 기관장은 바로 해임함으로써 '군권의 강압적 기제'를 통한 김정은식 군부 길들이기가 진행된 것이다.

셋째, 김정은은 제도적 통제 방식으로 군에 대한 당 기구의 의사결정 기능을 정상화했다. 김정일 시기 유명무실화된 당 기구를 당 규약상 권한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당을 통한 안보 정책 및 군부 엘리트의 신변 문제 결정이 이뤄졌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이 결정됐고,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채택됐다. 김정일 시기 개최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던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김정은 시기 6차례나 개최됐다.

특히 북한은 2013년 2월 초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린 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앞선 1, 2차 핵

317) 김아진·김은정, "김정은, 黨政은 20~30%, 軍간부는 40% 교체," 『조선일보』(인터넷판), 2015년 7월 15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5/2015071500199.html(검색일: 2024년 5월 30일).

318) 김태구,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 연구," p. 84.

실험 때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내고 핵실험 계획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안보 문제에 있어 핵심 의사결정기구가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319] 군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당 기구들을 정상화함으로써 김정은 시기 군에 대한 당적 통제 체계를 강화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정권 초기인 2012년 이미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와 '군부 인사' 등 군권의 강압적 기제를 활용해 군부를 통제하고 군부의 특권을 박탈해 나갔다. 군을 내세웠던 선군정치에서 핵무기 개발과 인민 생활 향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전임자 김정일 시기 김정은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 인민대중제일주의, 핵무력의 발전과 탈선군

2012년 12월 김정은은 광명성 3호-2호기 발사 성공을 정권의 주요 치적으로 만들었다. 국방과학원 과학자들을 '제일전우, 제일동지'로 추켜세우며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320] 특히 12월 14일 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 경축대회를 열고 이를 북한 전역에 생중계했다.[321] 단순한 축하연을 넘어 전 인민에게 김정은 시대 핵심 의제가 핵무기, 과학기술 발전임을 선포한 것이다.

2012년 12월 광명성 3호-2호기 발사 성공 이후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등장시켰다. 2013년 1월 28일과 29일간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지난해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한것

319) 김갑식 외,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pp. 94-96.

320) "우리 당은 이 자리에 참석한 동지들을 제일전우, 제일동지로 굳게 믿고있으며 동지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계속 선봉적역할을 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김준혁 외, 『주체101(2012)년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pp. 134-135.

321) 『조선중앙TV』, 2012년 12월 14일.

은…(중략)…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철추를 내린 특대사변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틀어쥐게 되였으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시간문제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에 승리의 붉은기를 휘날려야 합니다.…(중략)…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322]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계기로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그 결과 인민을 위한 경제건설에 곧 매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하고 당 관료들에게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지시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012년 4월 6일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부터 등장했으나, 구체적인 정체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2012년 8월 '김정일 애국주의'를 등장시켜 '애국심, 이민위천, 후대를 위한 삶'을 강조한 데 이어, 광명성 3호-2호기 발사 성공을 계기로 2013년 1월 정체성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공식화한 것이다.[323]

이후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성공을 거쳐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인민대

3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1월 30일.

323)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김정은 정권의 지도이념 변천』(파주: 한울엠플러스, 2023), pp. 28, 47-48, 68-69.

중제일주의의 발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국가전략이었다.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선이다.…(중략)… 자위적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중략)… 새로운 병진로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324]

새로운 병진노선은 기존의 병진노선이 경제보다 국방 분야에의 주된 자원 배분을 합리화했던 것과 반대로, 핵무력 완성을 통해 경제건설에 집중할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김정일이 내세웠던 '핵무기 개발 후 경제건설로의 노선 전환'의 논리를 비로소 현실화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2013년 4월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다시 등용하고 2014년 5월 30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발표하며 경제개혁에 본격 착수했다.[325]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의 김정은의 연설,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채택 등은 모두 다음 날 로동신문을 통해 보도되며 인민들에게 지체없이 알려졌다. 김일성 시기 국방·경제 병진노선이 1962년 제시된 이후 1966년 공식화됐고, 김정일 시기 선군경제노선이 2002년 9월 최초 제시된 이후 2003년 8월 공식화된 것과는 대조적이다.[326]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힌 전략노선을 인민에게 적극 홍보해 통치자 김정은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

32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로동신문』, 2013년 4월 1일.

325) 이석기 외,『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세종: 산업연구원, 2018), p. 54.

326)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pp. 81-83.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당 정치국 내 '군의 지위 하락'도 관찰됐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리영호 총참모장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됐었으나,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현영철 총참모장과 김격식 인민무력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된 데 그쳤다.[327] 같은 회의에서 경제 관료인 박봉주가 정치국 위원에 보선됐으며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유지했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화되고 경제개혁이 중시됨에 따라 총정치국을 제외한 군부의 정치적 지위가 하락한 것이다.

군의 정치적 역할 축소에 따라 군부의 전문직업화도 추동됐다. 2014년 11월 북한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통해 "인민군대의 강군화" 노선을 제시했다.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 전법강군화, 다병종강군화를 포함하는 이른바 '4대 강군화 노선'이다. 김일성, 김정일 시기 전통적으로 강조되던 군의 정치사상적 교양뿐만 아니라, 군사전략, 훈련, 국방과학기술 등 군사전문 분야도 강조했다.[328] 군의 정치화 수준을 낮추면서도 전투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고자 했다.[329]

김정은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된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당 위원장'이란 새로운 직책에 추대됐고, 당 규약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다그쳐 나갈데"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330]

주목할 점은 제7차 당대회부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내각 총리가 포함된 점이다.[331] 경제 분야에 있어 내각의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군에 대한 당적

---

327) 김태구,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 연구," pp. 49-52.

328)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pp. 94-98.

329) 허규호·안경모,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의 역할과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 전문직업주의의 부상을 중심으로,"『국방정책연구』, 제35권 4호(2019), pp. 95-96.

330)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로동신문』, 2016년 5월 10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로동신문』, 2016년 5월 10일.

3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에 관한 공보,"『로동신문』, 2016년 5월 10일.

지도에서 내각의 영향력을 높였다. 과거 김정일 선군정치 시기 국방 분야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며 군부가 국가 경제의 범주 밖에서 대외무역의 특혜를 누리던 때와는 확연히 차별화됐다.[332]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됨으로써 '국방' 분야로 한정되었던 국방위원회와 달리 '국가전반에 대한 지도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서 새로운 국가 최고 수위가 되었다. 2016년 당 및 국가기구의 개편은 김정은이 김정일 사후 유훈통치에서 벗어나 '김정은 정권의 당-국가체제'를 구축했음을 뜻했다.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를 통해 비대해진 군부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하고 당 중심의 령도체계를 정상화해 김정은 시대 '탈선군'을 추진한 것이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성공 및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 발사 성공 이후 조선중앙방송 '중대보도'를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병진노선의 승리'를 자축하며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 김정은동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성공적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이 실현되였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다.[333]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

332)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p. 220.

3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성공,"『로동신문』, 2017년 11월 29일.

된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도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334]

북한은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채택을 통해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강조하던 '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선포하고 김일성 때부터 이어져 온 병진노선을 종료했다.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북한은 2020년부터 김정은을 '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의 '수령 지위'를 공식화했다. 2021년 1월 10일 리일환 당 비서는 김정은의 당 총비서 '추대사'를 통해 '수렁'과 '령도자'로서 김정은의 지위를 언급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당의 수반은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체현하고 대표하는 혁명의 최고뇌수,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서 수령의 지위를 차지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결정적역할을 합니다.…(중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령도자로서뿐아니라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인민적수령이십니다.[335]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은 서문에서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 방식을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간다."라고 규정했다. 인민적 수령인 '당 총비서'에 추대된 김정은은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의 후광 없이 김정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당 규약

33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로동신문』, 2018년 4월 21일.

335) "추대사," 『로동신문』, 2021년 1월 11일.

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비로소 김정은이 권력승계를 완료하고 독자적 정치노선을 확립했음을 뒷받침한다.[336]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공식화와 국방·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의 전환은 김정은이 김정일 시기 군의 비대해진 역할과 특권을 축소하고 인민 생활 향상 및 경제건설로 국가전략을 바꾸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군권 우선 이양’을 통해 김정은이 조기에 구축한 강력한 군부 통제 체계는 ‘탈선군’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인적 기반을 제공했다.

‘군권 우선 이양’을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승계를 분석한 결과, 두 번의 권력승계 모두 후계자로의 ‘안정적 당권 승계’를 담보하기 위해 ‘군권을 우선 이양’했다. 우선 이양된 ‘군권’을 활용해 ‘당권’을 무력으로 보위하고, 안보 위협을 이용해 최고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자는 후계자에게 군권을 우선 이양함으로써 후계자가 조기에 군을 장악하고 ‘당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권력’과 ‘권위’를 구축하도록 했다.

북한 내 두 번의 권력승계에서 후계자는 ‘군권’을 이양받아 군부를 조기에 장악할 수 있었고, 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승계 정권을 안정화’했다. 정권 초기 김정일은 ‘군권의 순응적 기제’를 활용해 군부 승리 연합을 구축했고, 김정은은 ‘군권의 강압적 기제’를 활용해 군에 대한 당적 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김정일의 군부 승리 연합은 각종 특권을 누리며 ‘군을 이용’한 고난의 행군 극복에 기여했고, 김정은의 당적 통제 체계는 혹독한 ‘군부 길들이기’를 통해 군부 특권 박탈 등 ‘탈선군’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했다.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우선 이양받은 군권’을 활용해 예기치 못한 정권의 위기 또는 예상됐던 위협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승계 정권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일어난 두 번의 권력승계 모두 ‘군권 우선 이양’이 ‘승계 정권을 안정화’한 핵심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

336) 『조선로동당 규약』(2021).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에서 일어난 두 번의 권력승계에서 후계자에게 ‘군권이 우선 이양’됐음을 보이고, ‘안정적 당권 승계의 필요성’에 따라 ‘우선 이양된 군권’이 ‘승계 정권을 안정화’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군권 우선 이양’의 필요성과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후계자로의 ‘군권 우선 이양’을 중심으로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설명했다.

북한에서 일어난 두 번의 권력승계 과정을 검토한 결과, 두 차례 모두 후계자에게 군권이 ‘우선 이양’됐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최고사령관과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추대되어 김일성으로부터 군권을 우선 이양받았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임명과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 추대를 통해 김정일로부터 군권을 우선 이양받았다. 군권과 달리, 당 및 국가 부문의 최고 직책은 전임자 사망 이후 후계자에게 이양됐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은 체제 위기에 대응한 ‘안정적 당권 승계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북한은 내부로의 부정적 파급효과 유입을 차단해야 했다. 군의 정치사상적 무장을 강화해 ‘정권에 대한 보위 역할’을 담보하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해야 했다. 후계자 김정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은 김정일이 군의 정권 보위 역할을 강화할 권력과 안보 위기로부터 체제를 수호할 권위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당권을 승계하려는 의도였다.

‘군권 우선 이양’의 결과, 김정일은 ‘군권의 순응적 기제’를 적극 활용해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승계 정권을 안정화했다.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승계 이후 ‘군사 중시 기풍’을 강조하고 대규모 군부 인사를 단행하는 등 군부 승리 연합을 조기에 구축했다. 강력한 군권의 확립은 고난의 행군 시기 군에 ‘혁명적 군인정신’, ‘결사관철’을 강조하고 이들을 국가 건설에 동원하는 등 가장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서 군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인민에게도 안보 위협을 부각하고

‘군 따라배우기’를 강조해 인민의 희생을 정당화했다. 군은 위기 극복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고 군부는 보상으로 정치, 경제적 특권을 제공받았다. 우선 이양받은 군권을 활용해 정권의 위기를 극복한 김정일은 1997년 10월 ‘당 총비서’와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어 당·정 최고 수위를 안정적으로 승계했다. 1998년 김정일의 ‘군을 내세운 정치방식’은 ‘선군정치’로 공식화됐고 새로운 국가 목표인 ‘강성대국론’이 등장함으로써 김정일 승계 정권의 안정화를 보여줬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은 단기간 내 김정은의 권력과 권위를 효과적으로 강화해 ‘안정적으로 당권을 승계할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 김정일은 1999년부터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후계자 김정은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승계 정권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인민에게 약속한 경제건설 노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했고, 특권을 점유한 군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했다. 짧은 후계자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차기 지도자로서의 정당성 강화도 필요했다. 후계자 김정은으로의 군권 우선 이양은 ‘군부를 조기에 장악하고 반발에 대비’해 정권을 보위할 권력과 ‘선군혁명 위업의 계승자’로서 권위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당권을 승계하려는 의도였다.

‘군권 우선 이양’의 결과, 김정은은 ‘군권의 강압적 기제’를 주로 활용해 군부를 조기에 장악하고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전환해 승계 정권을 안정화했다.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군에 결사옹위 정신을 강조하고 군장악력을 현시해 2012년 4월 당·정 최고 수위인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안정적으로 승계했다. 이후 총정치국의 활용, 계급장 정치, 당 기구의 정상화 등 ‘군권의 강압적 기제’를 조기에 가동함으로써 군부의 반발을 차단한 가운데 군부의 특권을 박탈하고 ‘인민 생활 향상’을 추진했다. 2013년 1월 “인민대중제일주의” 공식화와 2013년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채택,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 선포에 따른 2018년 4월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의 채택은 김정은 승계 정권이 핵무력 발전에 따라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의 전환을 추진했음을 보여준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발전과 ‘탈선군’은 군부의 특권을 박탈하고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함으로써 승계 정권의 정

당성 강화 및 안정화에 기여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수령의 지위인 ‘당 총비서’에 김정은이 추대되고, 당 규약을 개정하여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탈선군’ 및 김정은 승계 정권의 안정화를 보여줬다.

본 연구는 최고 권력의 근원으로서 ‘군권’을 조명하고 후계자로의 ‘군권 우선 이양’이 권력승계를 안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음을 규명했다. 군의 장악 및 활용이 최고 권력인 ‘당권’을 차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것이다. 북한의 권력승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도 선군정치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등장 등 권력승계 시기 북한 정치의 주요 변화를 분석했지만, 본 연구는 해당 현상의 기저에서 작동한 권력의 근원적 측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선군정치, 대남 강경 태도 등 북한의 군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사주의화 경향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군권 우선 이양’과 핵무기 개발은 오히려 탈선군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발전을 견인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군사 분야의 변화를 군사력 강화 등 내용적 측면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최고지도자의 의도와 권력 유지 등 다양한 함의에도 주목한 점은 이번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긴 기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했다. 광범위한 시간적 연구 범위로 인해 시기별 세밀한 분석은 부족하다. 둘째, 군권 우선 이양에 관한 다른 국가의 사례 검토가 부족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사례로 한정해 확인한 결과, 북한과 유사한 ‘군권 우선 이양’이 이루어진 사례 연구는 한계가 있었다. 권위주의 국가로 연구 범위를 확장해 유사 사례를 찾는다면, 군권 우선 이양이 권력승계에 가지는 의미를 더욱 심도 있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승계는 한 정권이 유지되는 권력구조와 직결되며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권력의 동학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연구 대상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내재한 학문적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 권력구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북한문헌

가. 김일성·김정일 문헌

김일성. “인민군대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한 연설(1991년 12월 25일).”『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_____.『세기와 더불어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1986년 12월 30일).”『김일성 저작선집 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한 강의(1986년 5월 31일).”『김일성 저작선집 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 조선인민군창건 50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1982년 4월 25일).”『김일성 저작선집 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부장, 도당책임비서들 앞에서 한 연설(1969년 3월 3일).”『김일성 저작집 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인민군대 내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8년 3월 8일).”『김일성 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한 결론(1950년 10월 21일).”『김일성 저작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제1차5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함경북도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함경북도 당 및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57년 5월 11일).”『김일성 저작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해방전쟁』.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

김정일, “경공업과 농업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0년 3월 31일).”『김정일 선집 25권(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_____. “공병부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에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야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공병부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1년 11월 4일).”『김정일 선집 25권(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_____. “광복지구상업중심은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이다: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2011년 12월 15일).”『김정일 선집 25권(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_____.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1년 10월 8일, 12월 15일).”『김정일 선집 25권(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_____. “고난의 행군 최후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7년 6월 21일).”『김정일 선집 19권(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_____.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98년 1월 1일).”『김정일 선집 19권(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_____.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5년 1월 1일).”『김정일 선집 18권(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_____.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1995년 1월 1일).”『김정일 선집 18권(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_____.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9년 1월 1일).”『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_____.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6년 4월 22일),”『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_____.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98년 1월 16~21일, 6월 1일, 10월 20일, 22일)”『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_____.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11월 14일).”『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1993년 3월 1일).”『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4년 10월 16일).”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인민군대는 자기의 수령과 당, 자기의 제도와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창건 52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1984년 4월 25일).”『김정일 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2월 4일).”『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인민군대를 무적의 대오로 더욱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지휘간부들에 대한 군사칭호 및 훈장수여식에서 한 연설(1985년 4월 13일).”『김정일 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1월 1일).”『김정일 선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91년 1월 5일).”『김정일 선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90년 12월 27일).”『김정일 선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전군을 김일성주의화 하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한 담화(1975년 1월 1일).”『김정일 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_____.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1972년 10월 17일).”『김정일 선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1월 3일).”『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1969년 1월 19일).”『김정일 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1년 5월 5일).”『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1990년 10월 3일).”『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 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74년 4월 14일).”『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나. 단행본

강희봉.『선군정치문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8.

고정웅.『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 투쟁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김유민.『후계자론』. 출판지 불명: 신문화사, 1984.

김재천.『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서울: 출판사 불명, 1989.

김정남·김련옥.『인민사랑의 정치가』. 평양: 평양출판사, 2016.

김준혁·엄향심·김지호·채금옥.『주체101(2012)년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3.

김철우.『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리영철.『시대와 사상』. 평양: 평양출판사, 2011.

리철.『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조선로동당출판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 계승 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지봉철·리성길·리희순.『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4.
탁성일.『선군-김정일 정치』.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한영수·홍범식·림이철·리연선.『인민의 태양 김정은찬가』. 평양: 평양출판사, 2022.
한은경.『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다. 논문

리용무. “자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자.”『근로자』. 제2호, 1975, pp. 40-46.
오진우.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인 당이다.”『근로자』. 제10호, 1975, pp. 22-31.

라. 헌법, 당규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 2012, 2009, 1998, 1992, 1972).
『조선로동당 규약』(2021, 2010, 1980).

마. 신문, 영상물 및 기타

1)『로동신문』

“추대사” 2021년 1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2018년 4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성공.” 2017년 11월 29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2016년 5월 10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2016년 5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2016년 5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013년 4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2013년 1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2012년 7월 16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2012년 4월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2012년 4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진행.” 2012년 4월 14일.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진행.” 2012년 4월 12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2012년 3월 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호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2012년 2월 1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2012년 1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2011년 12월 31일.

“우리의 최고사령관.” 2011년 12월 24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2011년 12월 2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2011년 12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0년 9월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2010년 9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제07호.” 2010년 9월 28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2010년 9월 2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훌륭히 기술개건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10년 8월 26일.

“첨단을 돌파하라.” 2009년 8월 11일.

“축포.” 2009년 4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2009년 4월 10일.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렸다 내나라의 푸른 하늘높이 <광명성2호>를 쏴올린 민족사적인 경사에 접하여.” 2009년 4월 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 우리의 혁명무력은 평화적위성 《요격》에 나서는자들에게 단호한 불벼락을 안길것이다.” 2009년 4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 2009년 2월 12일.

“선군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2005년 9월 16일.

“강성대국.” 1998년 8월 22일.

“군민일치로 승리하자.” 1998년 5월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 1997년 10월 9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총비서로 추대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넘원의 반영 조선로동당 강원도, 량강도, 남포시, 개성시 대표회 진행.” 1997년 10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추모대회에 참석하시였다.” 1997년 7월 9일.

“성스러운 3년.” 1997년 7월 2일.

“혁명적군인정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정신적원천.” 1997년 3월 15일.

“모두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1996년 10월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1994년 4월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24호 조선인민군 장령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1992년 4월 24일.

2)『민주조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 평양시에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을 건설할데 대하여.” 1994년 11월 10일.

3) 공동사설, 공동논설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1999년 6월 16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1996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2010년 1월 1일.

_____.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8년 1월 1일.

_____.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2007년 1월 1일.

_____.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0년 1월 1일.

4) 방송매체보도 및 영상물

『조선중앙TV』. 2012년 12월 14일. 2012년 1월 8일. 2011년 12월 19일. 1994년 7월 9일.

2. 국내문헌

가. 단행본

고든 털럭(Gordon Tullock). *Autocracy.* 황수연·황인학 역. 『전제정치』.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1.

고재홍.『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곽명일.『북한 3대 통제기구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부, 2018.

김갑식·오경섭·이기동·김동엽.『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김상범.『북한의 핵과 정치권력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4.

김일기·김호홍.『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김진환.『북한사회 변화에 따른 지배이데올로기 변화: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약화와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 등장』.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19.

김현식·손광주.『다큐멘터리 김정일』. 서울: 천지미디어, 1997.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로버트 칼린(Robert Carlin). *The Two Koreas*. 이종길·양은미 역.『두 개의 한국』. 고양: 길산, 2002.

박영자 외.『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5.

박형중·이교덕·정창현·이기동.『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백승주.『포스트 김정일체제 프로세스와 한반도비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알라스테어 스미스(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이미숙 역.『독재자의 핸드북』.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2.

서동만.『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1945~1961)』. 서울: 선인, 2005.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교수진.『정치학의 이해』. 제2판. 서울: 박영사, 2019.

서재진.『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손광주.『김정일 리포트: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의 모든 것』. 서울: 바다출판

사, 2004.

손혜현.『쿠바 디아스 카넬 신정부 출범의 함의와 도전 과제』.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송영훈·김병로·박명규.『북한주민 통일의식 2008-2013: 북한이탈주민에게 묻다』.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아널드 오거스트(Arnold August). *Cuba and Its Neighbours: Democracy in Motion*. 정진상 역.『쿠바식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 서울: 삼천리, 2015.

엘리아스 카네티(Elias Canetti). *Masse Und Macht*. 강두식·박병덕 역.『군중과 권력』. 서울: 바다출판사, 2002.

오경섭·김진하·박형중·한병진·김에스라.『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서울: 통일연구원, 2021.

오경섭·박형중·김진하·김에스라.『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서울: 통일연구원, 2019.

와다 하루키(和田春樹).『北朝鮮』. 서동만·남기정 역.『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이대근.『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파주: 한울, 2003.

이석기 외.『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세종: 산업연구원, 2018.

이종석.『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8.

이찬행.『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정성장.『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15.

_____.『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위상·역할·후계문제를 중심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2011.

_____.『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엠플러스, 2011.

정영철.『김정일 리더십 연구』. 서울: 선인, 2008.

정창현.『곁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정태석·지주형·엄한진·조은주·유팔무. 『사회학: 비판적 시선』. 파주: 한울엠플러스, 2023.

조갑제.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황장엽 비록 공개』. 서울: 월간조선사, 2001.

조영남. 『중국의 통치체제 2: 공산당 통제기제』. 파주: 21세기북스, 2022.

_____. 『중국의 엘리트 정치: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서울: 민음사, 2019.

통일교육원. 『2021 북한의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21.

한병진. 『수령, 독재의 정석』. 서울: 곰출판, 2023.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황장엽 회고록』. 서울: 한울, 1999.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김정은 정권의 지도이념 변천』. 파주: 한울엠플러스, 2023.

_____. 『北朝鮮の指導体制と後継: 金正日から金正恩へ』. 백계문·이용빈 역. 『김정은 체제: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파주: 한울, 2012.

나. 논문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5권 5호, 2011, pp. 175-192.

_____.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론” 비교사회주의적 접근 1: 사회주의의 위기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 1995, pp. 13-47.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1호, 2014, pp. 29-64.

_____.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2005, pp. 9-38.

김기현. “라울의 제도적 리더십 구축과 쿠바 권력엘리트의 변화.” 『이베로아메

리카연구』. 제28권 2호, 2017, pp. 27-60.

김동엽.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경제와 사회』. 통권 제122호, 2019, pp. 76-103.

_____.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현대북한연구』. 제18권 2호, 2015, pp. 77-120.

_____.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보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북핵개발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핵전력 지휘통제체계.”『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 2017, pp. 99-137.

김선호. “북한의 당군관계 형성과 김일성지도체제의 맹아.”『통일과 평화』. 제11권 1호, 2019, pp. 119-156.

김성우.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및 병정관계에 관한 연구.”『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5호, 2013, pp. 67-75.

김성주, “북한 ‘군사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영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 권위 추구형 핵·경제 병진노선을 중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권 2호, 2017, pp. 203-235.

김용현.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1호, 2003, pp. 181-198.

김윤희.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 김일성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유훈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6권 2호, 2016, pp. 207-251.

김진하.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 권력집중 전략.”『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 pp. 59-84.

김태구.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 연구.”『2015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2015, pp. 1-106.

김판수. “인민해방군에 대한 권력 분점과 마오쩌둥의 불안, 1949-1976년.”『중

국지식네트워크』. 제20권, 2022, pp. 259-293.

김현경. “김정은 권력승계의 담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박종철. “김정은 지도체제 초기국면과 북중관계: 체제안정과 개혁개방의 딜레마(2008년~2012년).”『대한정치학회보』. 제20권 3호, 2013, pp. 53-74.

박형중. “수령독재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8월호, 2019, pp. 3-29.

_____.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pp. 213-237.

배진.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설경화. “북한의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송정호. “김정일 권력승계 공식화 과정 연구: 1964~1986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신석호.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pp. 33-66.

유동궁.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정치와 숙청.”『軍史』. 제104호, 2017, pp. 1-49.

이경화. “북한과 쿠바의 혁명군부에 대한 비교 연구: 체제유지에 있어서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이기동.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과 과도기 권력구조: 장성택 숙청 이전을 중심으로.” 우승지 편.『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 선군인가 선경인가』. 파주: 한울, 2014, pp. 121-143.

이동률. “중국의 대북전략과 북중관계: 2010년 이후 김정일의 중국방문 결과를 중심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 제29권 3호, 2011, pp. 297-320.

이동찬.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비교 연

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이우정. “사회주의국가의 권력승계에 관한 이론과 사례.”『안보연구』. 제23호, 1993, pp. 5-32.
이재준.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연구: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후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이정철. “쿠바와 북한의 7차 당대회 비교: 당군관계와 체제론.”『국방연구』. 제61권 1호, 2018, pp. 1-20.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조영남. “중국 최고 지도자의 권력 공고화: 장쩌민의 사례.”『중화연구』. 제41권 3호, 2017, pp. 7-44.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함택영.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딜레마.” 장달중 엮음.『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pp. 187-230.
허규호·안경모.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의 역할과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 전문직업주의의 부상을 중심으로.”『국방정책연구』. 제35권 4호, 2019, pp. 69-101.

다. 기타

김명희. “북녘추억④-‘기아 책임’ 뒤집어쓰고 죽은 농업 담당 비서.”『조선일보』(인터넷판). 2004년 6월 2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4/06/02/2004060270059.html(검색일: 2024년 5월 20일).

김아진·김은정. “김정은, 黨政은 20~30%, 軍간부는 40% 교체.”『조선일보』(인터넷판). 2015년 7월 15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5/2015071500199.html(검색일: 2024년 6월 2일).

김진하.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정치 동학.”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1).

박형중. “김정은 권력 정착과정에서의 군부 동향(2009년~2013년).”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2013).

_____.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2012).

송재윤. ““권력은 총에서 나오고, 총은 당이 지휘한다”… 시진핑의 군권 장악.”『조선일보』(인터넷판). 2023년 1월 21일;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1/21/XWNYQBJQAZC2JN7WXK6X2DWRAU(검색일: 2024년 5월 21일).

오경섭. “권위주의 지배의 정치: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Milan W. Svolik.”『KINU 통일+』. 제2권 1호(2016).

이기동. “후계 권력구조: 세습과 측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선호 가능성.”『북한』. 제443호(2008).

이동훈. “김정은 시대, 북한 어디로? 중국 화궈펑과 소련 흐루시초프를 보자.”『통일한국』. 제337호(2012).

이영화. “김정은체제 1년내 무너진다.”『북한』. 제483호(2012).

정성장. “북한 김정은의 실제 영향력, 지도체제의 성격과 핵심 파워 엘리트.”『JPI정책포럼』. 2012-2호(2012).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쿠바 개황』(2016); https://overseas.mofa.go.kr/mx-ko/brd/m_20176/view.do?seq 94461&page(검색일: 2024년 5월 8일).

“국방부, 북한 노동1호 시험사격 성공 확인”.『연합뉴스』(인터넷판). 1993년 6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19930624001700004(검색일: 2024년 5월 15일).

“마이니치 보도 3남 ‘김정은 우상화 강연자료’ 전문.”『Daily NK』(인터넷판). 2

009년 10월 6일; https://www.dailynk.com/%EB%A7%88%EC%9D%B4%EB%8B%88%EC%B9%98-%EB%B3%B4%EB%8F%84-3%EB%82%A8-%EA%B9%80%EC%A0%95%EC%9D%80-%EC%9A%B0%EC%83%81%ED%99%94-%EA%B0%95(검색일: 2024년 5월 19일).

“북한, 3代 권력세습 결정 - 강연자료(2002년 8월) 조선인민군 출판사(대외비 자료 全文).”『월간조선』. 2003년 3월호(2003), pp. 120-130.

“월간조선 긴급입수자료: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 연설.”『월간조선』. 1997년 4월호(1997), pp. 306-317.

“北, 후계자격으로 배반않을 ‘충실성’ 내세워.”『연합뉴스』(인터넷판). 2009년 10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091008171300014(검색일: 2024년 5월 19일).

『대한민국헌법』(1987);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헌법#undefined(검색일: 2024년 5월 6일).

3. 외국문헌

가. 단행본

Domes, Jürgen.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PRC*. Boulder: Westview Press, 1985.

Holmes, Leslie. *Politics in the Communist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Rush, Myron.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Svolik, Milan W.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Tompson, William J. *Khrushchev: a political life*. New York: St.Martin's Press, 1994.

Partido Comunista de Cuba. *Estatutos del Partido Comunista de Cuba*. Hab ana: Editora Política, 1998.

나. 논문

Brownlee, Jason.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July 2007, pp. 595-628.

Calvert, Peter. "Political Succession and Political Change." *The Process of Political Success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1987, pp. 1-23.

Frantz, Erica & Elizabeth A. Stein. "Comparative Leadership in Non-democracies." Ludger Helms, ed. *Comparative Political Leadership*.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2, pp. 292-313.

Hart, Paul 't & John Uhr. "Power Transitions and Leadership Successions in Government." Paul 't Hart & John Uhr, eds. *How Power Changes Hand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1, pp. 1-20.

Helms, Ludger. "Leadership succession in politics: The democracy/autocracy divide revisited."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2, No. 2, 2020, pp. 328-346.

Hoffmann, Bert. "Bureaucratic socialism in reform mode: the changing politics of Cuba's post-Fidel era." *Third World Quarterly*. Vol. 37, No. 9, 2016, pp. 1730-1744.

_____. "Charismatic Authority and Leadership Change: Lessons from Cuba's Post-Fidel Success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0, No. 3, June 2009, pp. 229-248.

Klare, Michael T. "Militarism: The Issues Today." Asbjørn Eide & Marek Thee, eds. *Problems of Contemporary Militarism.* London: Croom Helm, 1980, pp. 36-46.

LeoGrande, William M. "Cuba's Perilous Political Transition to the Post-Castro Er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47, No. 2, May 2015, pp. 377-405.

Mora, Frank O. & Quintan Wiktorowicz. "Economic Reform and the Military: China, Cuba, and Syria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44, Issue. 2, 2003, pp. 87-128.

Perlmutter, Amos & William M. LeoGrande.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 1982, pp. 778-789.

Solingen, Etel. "The Political Economy of Nuclear Restrai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2, Fall 1994, pp. 126-169.

Tilly, Charles.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Charles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p. 3-83.

다. 기타

Balakrishnan, Angela & Mark Tran. "Castro resigns as Cuban president." *The Guardian* (인터넷판). 2008년 2월 19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8/feb/19/cuba(검색일: 2024년 5월 8일).

Bradford, Chris. “What is the Pass in Review?.” *The U.S. Sun* (인터넷판). 2021년 1월 20일; https://www.the-sun.com/news/2173558/what-pass-in-review-joe-biden-inauguration(검색일: 2024년 5월 7일).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992); 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A=A&code=700201&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5&searchNtnl=US&pageIndex=1&CTS_SEQ=28071&AST_SEQ=313(검색일: 2024년 5월 6일).

McConnell, Dugald & Brian Todd. “Whenever Trump goes, nuclear ‘football’ to follow.” *CNN* (인터넷판). 2017년 2월 25일; https://edition.cnn.com/2016/11/17/politics/donald-trump-nuclear-codes/index.html(검색일: 2024년 5월 7일).

Sullivan, Mark P. “Cuba: U.S Policy and Issues for the 113th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29, 2014.

“Key address by Comrade Raul Castro Ruz, President of the State Council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at the closing session of the First Session of the 7th legisla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People's Power.” *Granma* (인터넷판). 2008년 2월 24일; https://www.granma.cu/granmad/2008/02/24/nacional/artic36.html(검색일: 2024년 5월 11일).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Cuba (2019); https://www.parlamentocubano.gob.cu/index.php/constitucion-de-la-republica-de-cuba(검색일: 2024년 5월 8일).

『中国共产党章程』 (2017);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9094&AST_SEQ=53(검색일: 2024년 5월 8일).

『中华人民共和国宪法』 (2018); 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A=A&code=700201&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1&searchNtnl=CN&pageIndex=1&CTS_SEQ=45514&AST_SEQ=53(검색일: 2024년 5월 8일).

ABSTRACT

Leadership Succession and Foremost Transfer of Military Authority in North Korea

Lee, Hyeon je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ed by Prof. Kim, Dong Yu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during North Korea's two leadership successions the supreme leader's "military authority" was transferred to the successor ahead of party and government authority, and to explain its political intents and consequences. By revealing "foremost transfers of military authority" contributed to "stabilization of inherited regim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meaningful explanation on power structure and leadership succession of North Korea.

"Military authority" refers to supreme power related to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 exercised by the highest leader. It serves as a crucial means to safeguard sovereignty against external threats. However, in an authoritarian regime, "military authority" can also be a powerful tool for a supreme leader to physically protect the regime from internal threats and enhance legitimacy by exploiting security concerns. Therefore, in authoritarian regimes, where leadership succession is difficult to be institutionalized, "foremost transfer of military authority" to the successor can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inherited regimes.

During both of North Korea's leadership successions, the military authority was primarily handed over to the successor, before the predecessor's death, while the party and government authority were transferred posthumously.

The "foremost transfer of military authority" from Kim Il-sung to Kim Jong-il occurred due to the changing security situation in the 1980s,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socialist regimes. Its intention was to make Kim Jong-il take the lead in securing the military's role to safeguard the regime by reinforcing political ideology, and to bolster the legitimacy of socialism by identifying non-socialist phenomena as security threats. As a result, Kim Jong-il promptly established "winning coalition" within the military, gaining formidable military power. This allowed him to overcome the regime crisis known as the Arduous March in the mid-1990s by leveraging his military power and promoting societal militarization. His military-first politics became formalized as the "Songun" politics, demonstrating stability of the inherited regime.

The "foremost transfer of military authority" from Kil Jong-il to Kim Jong-un was driven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Kim Jong-il era which required Kim Jong-un to improve people's livelihoods and reduce military privileges. The intention of the foremost transfer was to safeguard the inherited regime by preventing possible military opposition and to justify Kim Jong-un's legitimacy, considering his limited time as the heir-apparent. In consequence, Kim Jong-un successfully prevented potential military backlash by expeditiously establishing party control system over the military and transitioned to the "People-First" principle from the previous "Songun" politics. The replacement of "Songun" politics with "People-First" principle in the Bylaw of the Korean Workers' Party in 2021 proved stability of the

inherited regime, which no longer required the political legacy from the predecessor.

This study highlights how the “foremost transfer of military authority” in North Korea ensured stable leadership successions. It not only enabled societal militarization, but also paved the way toward embracing the “People-First” principle and moving away from the previous “Songun” politics.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authority and leadership succession in North Korea and discovers diverse ways to interpret political meaning of military authority held by supreme power.

Key words

North Korea, Leadership succession, Military authority, Successor, Songun, Military-first politics, People-first principle